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100대 마을정책 제안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사회연대경제

주민주권

통합성

법제화

지속가능성

현장중심

민관협치

기후정의

디지털주권

2026 동시지방선거

< 차례 >

발간사	1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1
우리는 누구인가	4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소개	4
주요 연혁	4
주요 활동	5
보고서 개요	7
목적	7
구성	7
활용 방법	7
1. 8대 핵심 원칙	8
1.1 마을정책 제안을 위한 8대 핵심 원칙	8
1.2 원칙별 정책 반영 현황	11
2. 6대 배분 원칙	12
2.1 배분 원칙 상세	12
2.2 출마자 유형별 배분 확정	13
2.3 배분 비율의 의미	13
3. 4대 실행 환경 점검	15
3.1 갈등관리	15
3.1.3. 왜 중요한가	15
3.2 재정구조	15
3.2.3. 왜 중요한가	16
3.3 다양성-포용	16
3.3.3. 왜 중요한가	16
3.4 수행체계	17
3.4.3. 왜 중요한가	17

4. 100대 정책 개요	18
4.1 사회 영역 (MS) - 33개	18
4.2 문화 영역 (MC) - 25개	18
4.3 경제 영역 (ME) - 25개	20
4.4 거버넌스 영역 (MG) - 12개	24
4.5 연계 영역 (MX) - 5개	25
5. 10대 정책 패키지	26
5.1. 패키지 1. 돌봄마을 종합 패키지 (8개)	26
5.2. 패키지 2. 기후정의 마을 패키지 (10개)	26
5.3. 패키지 3. 주거안정 마을 패키지 (5개)	27
5.4. 패키지 4. 마을교육 종합 패키지 (7개)	27
5.5. 패키지 5. 디지털주권 마을 패키지 (6개)	27
5.6. 패키지 6. 사회연대경제 기반 패키지 (10개)	28
5.7. 패키지 7. 마을자산화 패키지 (8개)	28
5.8. 패키지 8. 주민자치 실질화 패키지 (6개)	29
5.9. 패키지 9. 마을활동가 지원 패키지 (5개)	29
5.10. 패키지 10. 갈등관리-회복적 정의 패키지 (4개)	29
6. 후보자 유형별 활용 가이드	30
6.1 광역단체장 후보 활용 가이드 (20개 정책)	30
6.2 기초단체장 후보 활용 가이드 (44개 정책)	31
6.3 광역의원 후보 활용 가이드 (12개 정책)	32
6.4 기초의원 후보 활용 가이드 (18개 정책)	33
6.5 교육감 후보 활용 가이드 (6개 정책)	34
7. 100대 간단 정책카드	36
001 간단정책카드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38
002 간단정책카드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40
003 간단정책카드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42
004 간단정책카드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44
005 간단정책카드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46

006	간단정책카드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48
007	간단정책카드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50
008	간단정책카드 MS0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52
009	간단정책카드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54
010	간단정책카드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56
011	간단정책카드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58
012	간단정책카드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60
013	간단정책카드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62
014	간단정책카드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64
015	간단정책카드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66
016	간단정책카드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68
017	간단정책카드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70
018	간단정책카드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72
019	간단정책카드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74
020	간단정책카드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76
021	간단정책카드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78
022	간단정책카드 MS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80
023	간단정책카드 MS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82
024	간단정책카드 MS24	보행친화 마을조성	84
025	간단정책카드 MS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86
026	간단정책카드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88
027	간단정책카드 MS27	마을축제 활성화	90
028	간단정책카드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92
029	간단정책카드 MS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94
030	간단정책카드 MS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96
031	간단정책카드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98
032	간단정책카드 MS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100
033	간단정책카드 MS33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102
034	간단정책카드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104

035	간단정책카드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106
036	간단정책카드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108
037	간단정책카드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110
038	간단정책카드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112
039	간단정책카드 MC06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114
040	간단정책카드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116
041	간단정책카드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118
042	간단정책카드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120
043	간단정책카드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122
044	간단정책카드 MC11	마을신문-웹진 지원	124
045	간단정책카드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126
046	간단정책카드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128
047	간단정책카드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130
048	간단정책카드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132
049	간단정책카드 MC16	마을예술가 지원	134
050	간단정책카드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36
051	간단정책카드 MC18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138
052	간단정책카드 MC19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140
053	간단정책카드 MC20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142
054	간단정책카드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144
055	간단정책카드 MC22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146
056	간단정책카드 MC23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148
057	간단정책카드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150
058	간단정책카드 MC25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152
059	간단정책카드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154
060	간단정책카드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156
061	간단정책카드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158
062	간단정책카드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160
063	간단정책카드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162

064	간단정책카드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164
065	간단정책카드 ME07	마을기업 육성	166
066	간단정책카드 ME08	사회적기업 지원	168
067	간단정책카드 ME09	자활기업 지원	170
068	간단정책카드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172
069	간단정책카드 ME11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174
070	간단정책카드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176
071	간단정책카드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178
072	간단정책카드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180
073	간단정책카드 ME15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182
074	간단정책카드 ME16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184
075	간단정책카드 ME17	공동체 배당제 도입	186
076	간단정책카드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188
077	간단정책카드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190
078	간단정책카드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192
079	간단정책카드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194
080	간단정책카드 ME22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196
081	간단정책카드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198
082	간단정책카드 ME24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200
083	간단정책카드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202
084	간단정책카드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204
085	간단정책카드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206
086	간단정책카드 MG03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208
087	간단정책카드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210
088	간단정책카드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212
089	간단정책카드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214
090	간단정책카드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216
091	간단정책카드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218
092	간단정책카드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220

발간사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2026년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인가구 34.5%,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살아갑니다. **118개 소멸위험지역**,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기후위기**, 폭염·폭우·가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면 돌봄 공백이 생기고, 돌봄 공백은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소멸위험지역에서 마을이 사라지면 행정서비스가 축소되고, 남은 주민은 더 고립됩니다. 기후재난은 농촌의 독거노인과 도시의 쪽방촌 주민에게 가장 먼저 닥칩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곳, 가장 고립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전국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상황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함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곳은 평소에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이 축적된 곳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와 법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눈을 맞추고, 동네 문제를 함께 풀어본 경험, 그 경험이 위기의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삶터에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마을운동 30년, 새로운 전환점에서

1990년대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되었고, 201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성과와 함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성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마을공동체 조례와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공모사업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대화모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모여 경험을 나눕니다.

한계: 그러나 지원센터가 사라지고,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사라지는 마을공동체가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이 스스로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부족합니다. 행정이 설계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는 있지만, 주민이 설계한 사업을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는 아직 예외적입니다. 수많은 마을의 이웃들과 활동가들이 오랜 자원봉사와 관행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지쳐, 마을과 공동체에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는 이 구조적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마을활동 기반이 정권 교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지는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기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EU의 보충성 원칙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마을정책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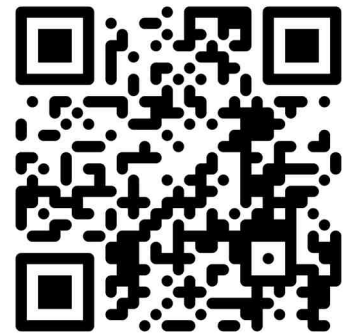
100대 정책의 의의

이 보고서는 전국 마을 현장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만든 정책,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입니다. 수백 회의 전국대회와 대화 모임, 수천 개의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힌 한계와 실패의 교훈이 이 100대 정책의 토대입니다.

- **8대 핵심 원칙:** 주민주권, 통합성, 법제화, 지속가능성, 현장중심, 민관협치에 더해, 기후정의와 디지털주권을 추가했습니다.
- **6대 배분 원칙:** 보충성 원칙에 따라 광역단체장 20%, 기초단체장 44%, 광역의원 12%, 기초의원 18%, 교육감 6%로 배분했습니다.
- **4대 실행 환경:** 갈등관리, 재정구조, 다양성-포용, 수행체계를 점검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검토하고, 자신의 공약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열정적인 주민-활동가들이 이 정책을 매개로 더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마을과 지역의 주인으로 한발 더 전진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 정책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며, 동시에 협력의 생태계를 1단 기어에서 2단, 3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을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우리는 누구인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소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이하 ‘마을넷’)는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학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관계의 망’입니다.

마을넷은 20년간 ‘개인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표방해 왔습니다. 조직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마을운동이 조직의 성장이 아니라 마을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대표 없이, 회원 구분 없이, 마을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운동이 확장되면서 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전풀넷)를 비롯한 여러 네트워크와의 연대, 정책 제안과 법 제정 운동의 체계화, 부문별 실행위원회의 운영 등 느슨한 관계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과제들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가을, 마을넷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인격인 임의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느슨하되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기 위한 선택입니다.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2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분과에서 ‘마을연대’ 결성
2005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공식 결성 (4월)
2006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12월)
2007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진안)
2010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시작 (전국 순회, 매월 진행)
2013	제6회 전국대회(수원)에서 마을기본법 최초 제안
2015	제8회 전국대회(서울)에서 마을선언 제안 참여 및 토의
2016	마을기본법 제정 1차 TF 참여, 최초 초안 작성

2024	마을기본법 제정 2차 TF 참여, 2차 초안 작성
2025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전폴넷) 참여
2025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임의단체 등록 및 실행위원회 구성
2026	100대 정책 제안 (2026 지방선거)

주요 활동

1.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07~ 매년)

전국의 마을활동가, 주민, 연구자, 공무원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단위 학습모임 (1회 진안 ~ 14회 수원)

2.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2010~ 현재)

- 매년 3월~11월, 전국을 순회하며 매달 진행
- 지역별 마을활동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 모여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
- 전국 네트워크의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

3. 마을기본법 제정 운동 (2013~ 현재)

- 2013년: 수원 전국대회에서 최초 제안
- 2016년: 1차 TF 구성, 초안 작성
- 2024년: 2차 TF 구성, 보충성 원칙 반영한 2차 초안 작성

4. 정책 연구 및 제안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연구
- 중앙정부·지방정부 정책 자문
- 2026 지방선거 100대 정책 제안

5. 네트워크 간 연대

- 한국마을연합,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전폴넷)

-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이 100대 정책은 사무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전국대회와 대화모임,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마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민들이 이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말합니다.

"공모사업은 늘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3년이면 끝납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겨우 무언가 싹이 트려는 순간 사업이 종료됩니다. 마을에 남는 것은 결산 보고서뿐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 이 목소리가 **'지속가능성' 원칙과 '자산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조례가 있어도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사라집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마을 정책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단체장 교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험이 **'법제화' 원칙과 '마을기본법' 정책**의 근거입니다.

"주민이 결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이 결정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의제 설정과 예산 편성은 행정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참여는 있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 이 좌절이 **'주민주권' 원칙과 '주민자치회 실질화' 정책**의 동력입니다.

"마을활동을 10년 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마을활동가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불안정한 계약으로, 매년 사업 종료의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진되어 떠나는 활동가가 늘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마을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 현실이 **'민관협치' 원칙과 '활동가 처우개선' 정책**의 배경입니다.

이 보고서의 8대 핵심 원칙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국 마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힌 벽, 그 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개요

목적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10년간 정책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출마자 유형별로 실현 가능한 100대 정책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자료집입니다.

구성

장	제목	분량
발간사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3p
마을넷 소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30년	3p
제1장	8대 핵심 원칙	4p
제2장	6대 배분 원칙	3p
제3장	4대 실행 환경 점검	3p
제4장	100대 정책 개요 (영역별)	40p
제5장	10대 정책 패키지	10p
제6장	후보자 유형별 활용 가이드	8p
제7장	100대 정책 카드(요약편)	200p
부록	마을선언, 마을기본법 초안 등	15p
합계		약 290p

활용 방법

- 광역단체장 후보: 제6장 광역단체장 활용가이드 + 제4장 광역단체장 정책 20개
- 기초단체장 후보: 제6장 기초단체장 활용가이드 + 제4장 기초단체장 정책 44개
- 광역의원 후보: 제6장 광역의원 활용가이드 + 제4장 광역의원 정책 12개
- 기초의원 후보: 제6장 기초의원 활용가이드 + 제4장 기초의원 정책 18개
- 교육감 후보: 제6장 교육감 활용가이드 + 제4장 교육감 정책 6개

1. 8대 핵심 원칙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은 8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선별·설계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추상적 이념이 아닙니다. **30년간의 마을 현장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의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원칙은 현장의 구체적 경험에서 도출되었으며, 원칙별 도입 배경을 함께 제시합니다.

1.1 마을정책 제안을 위한 8대 핵심 원칙

1.1.1. 주민주권

- 정의: 주민이 정책의 기획-결정-실행의 주체가 되는 구조 설계
- 정책 선별 기준: **주민 결정권 부여 정도**
- 도입 배경: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행정이 설정한 의제에 주민이 의견을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곳은 극소수입니다. 참여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결정의 실질은 여전히 행정에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대표 정책: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1.1.2. 통합성

- 정의: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의 유기적 연계
- 정책 선별 기준: **영역 간 연계 정도**
- 도입 배경: 마을 현장에서는 돌봄, 자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돌봄을 하고, 공유공간에서 주민자치회를 열고, 마을기업이 일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각각 별도의 법률과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현장에서는 하나인 것이 행정에서는 셋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대표 정책: - MX01~MX05 연계 영역 전체

1.1.3. 법제화

- 정의: 정권 변동에도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
- 정책 선별 기준: **법/조례 제도화 가능성**
- 배경: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사례에서 보듯, 조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 도입 배경: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폐지와 관련 조례 축소는 전국 마을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현장의 네트워크와 활동 기반이 정치적 결정 한 번에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마을공동체 조례는 대부분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의 의지가 사라지면 사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마을정책이 지속됩니다.
- 대표 정책: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1.1.4. 지속가능성

- 정의: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제도화 지향
- 정책 선별 기준: **중장기 운영 가능성**
- 도입 배경: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부분은 2~3년 단위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는 순간 지원이 종료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모임 공간도, 활동비도, 코디네이터도 사라집니다. 이 순환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간을 소유하고,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 구조가 없으면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대표 정책: -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1.1.5. 현장중심

- 정의: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 우선 반영
- 정책 선별 기준: **현장 검증 및 적용 가능성**
- 도입 배경: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설계한 정책이 읍면동 현장에 도달하면 맥락이 달라집니다. 농촌과 도시의 조건이 다르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마을의 공동체 구조가 다릅니다. 전국 일률적인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다양성을 담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 주민이 직접 경험한 정책이 우선 반영되어야 합니다.
- 대표 정책: -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 MX02~MX04 현장재생 종합사업

1.1.6. 민관협치

- 정의: 행정-민간-중간지원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
- 정책 선별 기준: **협력 거버넌스 반영 정도**
- 도입 배경: 민관협치위원회와 거버넌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대부분 행정 주도의 형식적 협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관이 위촉하고, 안건은 관이 준비하고, 결과는 관이 결정합니다. 실질적 협치는 민간이 의제를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결정하고, 민간이 집행에 참여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과 활동가의 안정적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협치는 관 주도 자문에 그칩니다.
- 대표 정책:
 -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 MG11 민관협약제 도입

1.1.7. 기후정의

- 정의: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의 통합적 접근
- 정책 선별 기준: **탄소중립-기후적응-취약계층 보호 반영 정도**
- 도입 배경: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마을 단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침수 피해를 반복하는 저지대 마을, 농작물 피해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촌 주민 — 기후재난의 최일선이 마을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반영 정책 (12개):
 -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1.1.8. 디지털주권

- 정의: 주민 데이터 자치권과 디지털 포용 보장
- 정책 선별 기준: **데이터 자치-디지털 격차 해소 반영 정도**
- 도입 배경: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키오스크, 모바일 예약,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 되었지만,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은 공공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디지털 문해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마을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수집·활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마을의 디지털 자산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반영 정책 (8개):
 -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 MX01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1.2 원칙별 정책 반영 현황

원칙	직접 반영 정책 수	비율
• 주민주권	전체 적용	100%
• 통합성	전체 적용	100%
• 법제화	15개	15%
• 지속가능성	전체 적용	100%
• 현장중심	전체 적용	100%
• 민관협치	12개	12%
• 기후정의	12개	12%
• 디지털주권	8개	8%

2. 6대 배분 원칙

- 100대 정책을 5개 출마자 유형에 배분하는 데 6대 배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1 배분 원칙 상세

2.1.1. 기관분립-권한명료화

- 설명: 집행(단체장) vs 입법(의원) 역할 분리
- 적용 기준: - 조례 제정 → 의원 - 사업 집행 → 단체장
- 적용 사례: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광역단체장 (법 제정 추진은 단체장)
 -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 → 광역의원 (조례 제정은 의원)

2.1.2. 보충성-기초우선

- 설명: 현장 밀착 정책은 기초자치단체 우선
- 적용 기준: 읍면동 실행 정책 → 기초단체장
- 적용 사례:
 - MS02~MS08 돌봄 분야 대부분 → 기초단체장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 기초단체장

2.1.3. 권한일치-법적근거

- 설명: 법적 권한과 배분 일치
- 적용 기준: 광역 권한 정책 → 광역단체장
- 적용 사례:
 -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 광역단체장 (광역 계획)
 -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 광역단체장 (광역 계획)

2.1.4. 광역기반

- 설명: 광역 인프라-기반 정책은 광역
- 적용 기준: 플랫폼, 센터, 기금 → 광역
- 적용 사례:
 - MX01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 광역단체장
 -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 광역단체장

2.1.5. 교육전문-미래세대

- 설명: 교육-학교 연계는 교육감 전담
- 적용 기준: 학교-마을, 청소년 → 교육감
- 적용 사례:
 -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교육감
 -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 교육감
 - MX05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 교육감

2.1.6. 글로벌스탠다드

- 설명: SDGs, 보충성 원칙 등 국제 기준 반영
- 적용 기준: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정책
- 적용 사례:
 -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MC21, MC22 숙의민주주의

2.2 출마자 유형별 배분 확정

유형	정책 수	비율	주요 역할
• 광역단체장	20개	20%	광역 기본계획, 중간지원조직, 광역 기금
• 기초단체장	44개	44%	읍면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현장재생
• 광역의원	12개	12%	광역 조례 제-개정, 광역 예산 심의
• 기초의원	18개	18%	기초 조례 제-개정, 기초 예산 심의
• 교육감	6개	6%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 연계
• 합계	100개	100%	

2.3 배분 비율의 의미

2.3.1. 기초단체장 44% (최다)

- 이유: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장 실행 정책 대부분을 기초에 배분
- 주요 정책: 돌봄, 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현장 밀착형

2.3.2. 광역단체장 20%

- 이유: 광역 인프라, 기반 조성, 중간지원조직
- 주요 정책: 광역 플랫폼, 광역 센터, 광역 기금

2.3.3. 기초의원 18%

- 이유: 기초 조례 제정, 기초 예산 심의
- 주요 정책: 기초 조례, 자산화, 마을기금

2.3.4. 광역의원 12%

- 이유: 광역 조례 제정, 광역 예산 심의
- 주요 정책: 광역 조례, 광역 제도 개선

2.3.5. 교육감 6%

- 이유: 교육-마을 연계 정책으로 한정
- 주요 정책: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 연계

3. 4대 실행 환경 점검

-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4대 실행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3.1 갈등관리

3.1.1. 점검 내용

- 정책 추진 시 예상 갈등 식별 및 조정 방안 포함 여부

3.1.2. 관련 정책

-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MS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 MS33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3.1.3. 왜 중요한가

-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주민 간 갈등입니다. 갈등조정 메커니즘 없이 추진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합니다. 사업 방향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 충돌, 오래 살아온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 사이의 긴장,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공유공간의 사용 방식을 둘러싼 다툼.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참여하던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소수의 적극적 주민만 남아 폐쇄적 집단이 됩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3.2 재정구조

3.2.1. 점검 내용

- 자생적 자원 확보 방안, 공동체 자산 형성 방안

3.2.2. 관련 정책

-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 ME22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3.2.3. 왜 중요한가

- **보조금 의존 → 지속 불가능. 마을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형성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 전국의 마을공동체 사업 대부분은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모임 장소 임대료도, 간사 인건비도, 프로그램 운영비도 사라집니다. 5년간 매년 사업을 수행한 마을도, 보조금이 끊기면 모임 공간을 잃고 흩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공간과 기금과 자산이라는 물적 기반 없이 사람의 열정과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소진을 낳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공간을 소유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3.3 다양성-포용

3.3.1. 점검 내용

- 취약계층-소수자 포용 방안, 디지털 격차 해소

3.3.2. 관련 정책

-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 MS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 MS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 MC25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 ME16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3.3.3. 왜 중요한가

- **마을공동체가 특정 계층만의 공동체가 되면 배제와 차별을 낳습니다. 모두를 위한 마을이어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시간과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장애인, 이주민, 고령 독거노인, 청년 1인가구는 마을활동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되면,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됩니다. 포용은 선언이 아니라 접근성의 설계입니다.

3.4 수행체계

3.4.1. 점검 내용

- 활동가 역량, 중간지원조직 적정성

3.4.2. 관련 정책

-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3.4.3. 왜 중요한가

- **정책의 성패는 사람입니다. 역량 있는 활동가와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 없이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전국에서 마을활동가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경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0년간 마을에 헌신한 활동가가 이직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 위탁 구조로 운영되어, 단체장 교체 시 조직 자체가 해산되거나 인력이 전면 교체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사람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에서 정책이 축적될 수 없습니다. 활동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처우와 경력 경로를 보장하는 것이 수행체계의 핵심입니다.

4. 100대 정책 개요

4.1 사회 영역 (MS) - 33개

4.1.1. 영역 소개

지방자치 30년, 그러나 여전히 돌봄은 개인의 몫입니다.

1인가구 34.5%, 고독사 증가, 돌봄 공백...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33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폭염, 폭우, 가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폭등, 빈집 증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빈집 자산화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4.1.2. 정책 목록 (33개)

4.1.2.1. 돌봄 분야 (MS01~MS08) - 8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광역단체장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기초단체장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초단체장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기초단체장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기초단체장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기초단체장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기초단체장
MS0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기초단체장

4.1.2.2. 안전-환경 분야 (MS09~MS16) - 8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광역단체장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광역단체장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광역단체장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기초단체장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기초단체장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기초단체장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기초단체장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기초단체장

4.1.2.3. 주거-교통 분야 (MS17~MS24) - 8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초단체장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광역단체장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기초의원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기초의원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기초단체장
MS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기초단체장
MS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기초단체장
MS24	보행친화 마을조성	기초의원

4.1.2.4. 공동체-갈등 분야 (MS25~MS33) - 9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S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기초단체장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기초의원
MS27	마을축제 활성화	기초단체장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기초단체장
MS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광역의원
MS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기초단체장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광역의원
MS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광역의원
MS33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기초의원

4.2 문화 영역 (MC) - 25개

4.2.1.영역 소개

마을은 배움의 터전입니다.

학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평생학습 체계를 제안합니다.

마을은 소통의 광장입니다.

마을미디어, 마을방송, 마을신문... 주민이 직접 만드는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마을은 문화의 터전입니다.

생활문화, 마을예술, 마을축제... 주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마을은 공론의 장입니다.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주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4.2.2. 정책 목록 (25개)

4.2.2.1. 교육-학습 분야 (MC01~MC08) - 8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감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교육감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기초단체장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교육감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광역단체장
MC06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기초단체장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광역단체장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기초의원

4.2.2.2. 미디어-소통 분야 (MC09~MC14) - 6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광역단체장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기초단체장
MC11	마을신문-웹진 지원	기초의원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기초의원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기초의원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기초단체장

4.2.2.3. 문화-예술 분야 (MC15~MC20) - 6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기초단체장
MC16	마을예술가 지원	기초단체장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기초단체장
MC18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기초의원
MC19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기초단체장
MC20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광역단체장

4.2.2.4. 공론장 분야 (MC21~MC25) - 5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광역의원
MC22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광역단체장
MC23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기초의원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교육감
MC25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교육감

4.3 경제 영역 (ME) - 25개

4.3.1. 영역 소개

사회적경제기본법 10년째 국회 계류 중.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연대기업이 지역경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25개 경제 정책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이 자산을 소유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마을경제의 핵심은 자산화입니다. 빈집, 공유공간, 토지를 공동체가 소유하고,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여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4.3.2. 정책 목록 (25개)

4.3.2.1. 기반제도 분야 (ME01~ME05) - 5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광역의원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광역단체장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광역단체장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광역단체장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역단체장

4.3.2.2. 조직육성 분야 (ME06~ME11) - 6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기초단체장
ME07	마을기업 육성	기초단체장
ME08	사회적기업 지원	기초단체장
ME09	자활기업 지원	기초단체장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기초단체장
ME11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광역단체장

4.3.2.3. 일자리-소득 분야 (ME12~ME17) - 6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초단체장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광역의원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광역의원
ME15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기초단체장
ME16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기초단체장
ME17	공동체 배당제 도입	광역의원

4.3.2.4. 자산-금융 분야 (ME18~ME22) - 5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기초의원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기초의원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기초의원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기초의원
ME22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광역의원

4.3.2.5. 지역순환 분야 (ME23~ME25) - 3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기초단체장
ME24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기초단체장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기초의원

4.4 거버넌스 영역 (MG) - 12개

4.4.1. 영역 소개

거버넌스는 모든 정책의 운영체제(OS)입니다.

마을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실질화,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민관협치... 이 기반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시 조례 폐지의 교훈: 조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4.4.2. 정책 목록 (12개)

4.4.2.1. 법제화 분야 (MG01~MG03) - 3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광역단체장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광역의원
MG03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광역의원

4.4.2.2. 주민자치 분야 (MG04~MG06) - 3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기초의원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기초단체장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기초단체장

4.4.2.3. 중간지원 분야 (MG07~MG09) - 3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광역단체장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기초단체장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광역단체장

4.4.2.4. 민관협치 분야 (MG10~MG12) - 3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광역단체장
MG11	민관협약제 도입	광역의원
MG12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기초의원

4.5 연계 영역 (MX) - 5개

4.5.1. 영역 소개

100대 정책은 100개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마을을 바꾸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연계 영역 5개 정책은 사회-문화-경제-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4.5.2. 정책 목록 (5개)

코드	정책명	추진주체	연계 영역
MX01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광역단체장	MG+MS+MC+ME
MX02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기초단체장	MS+ME+MC
MX03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기초단체장	MS+ME+MG
MX04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기초단체장	MS+MC+ME
MX05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교육감	MC+MG

5. 10대 정책 패키지

- 100대 정책을 주제별로 묶어 10개 패키지로 제시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5.1. 패키지 1. 돌봄마을 종합 패키지 (8개)

- **슬로건: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을이 돌봅니다”**
- 포함 정책:
 -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 MS0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 총 예산: 2,20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1개 + 기초단체장 7개

5.2. 패키지 2. 기후정의 마을 패키지 (10개)

- **슬로건: “기후위기에 맞서는 마을, 정의로운 전환”**
- 포함 정책:
 -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 총 예산: 2,53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3개 + 기초단체장 7개

5.3. 패키지 3. 주거안정 마을 패키지 (5개)

- **슬로건: “집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듭니다”**
- 포함 정책:
 -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 총 예산: 1,90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1개 + 기초단체장 2개 + 기초의원 2개

5.4. 패키지 4. 마을교육 종합 패키지 (7개)

- **슬로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 포함 정책:
 -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 MX05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 총 예산: 1,180억원 (4년)
- 추진주체: 교육감 5개 + 광역단체장 1개 + 기초단체장 1개

5.5. 패키지 5. 디지털주권 마을 패키지 (6개)

- **슬로건: “주민이 주인인 디지털 마을”**
- 포함 정책:
 -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 MX01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 총 예산: 60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1개 + 기초의원 5개

5.6. 패키지 6. 사회연대경제 기반 패키지 (10개)

- **슬로건: “경쟁이 아닌 연대, 이윤이 아닌 가치”**
- 포함 정책:
 -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 ME07 마을기업 육성
 - ME08 사회적기업 지원
 - ME09 자활기업 지원
 - ME11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 총 예산: 1,13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5개 + 광역의원 1개 + 기초단체장 4개

5.7. 패키지 7. 마을자산화 패키지 (8개)

- **슬로건: “마을이 주인, 공동체가 자산”**
- 포함 정책:
 -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 MC18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 총 예산: 1,080억원 (4년)
- 추진주체: 기초의원 8개

5.8. 패키지 8. 주민자치 실질화 패키지 (6개)

- **슬로건: “주민이 결정하는 진짜 자치”**
- 포함 정책: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 총 예산: 21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1개 + 광역의원 2개 + 기초단체장 2개 + 기초의원 1개

5.9. 패키지 9. 마을활동가 지원 패키지 (5개)

- **슬로건: “활동가가 지속 가능해야 마을도 지속 가능합니다”**
- 포함 정책: -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총 예산: 53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2개 + 광역의원 2개 + 기초단체장 1개

5.10. 패키지 10. 갈등관리-회복적 정의 패키지 (4개)

- **슬로건: “갈등을 넘어 회복으로, 대립을 넘어 연대로”**
- 포함 정책: -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 MS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 MS33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 총 예산: 230억원 (4년)
- 추진주체: 광역의원 2개 + 기초의원 1개 + 기초단체장 1개

6. 후보자 유형별 활용 가이드

6.1 광역단체장 후보 활용 가이드 (20개 정책)

6.1.1. 핵심 역할

- 광역 기본계획 수립
- 광역 중간지원조직 구축
- 광역 인프라-플랫폼-기금 조성

6.1.2. 우선순위 정책 (상위 5개)

순위	코드	정책명	중요도
1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2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
3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4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
5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

6.1.3. 체크리스트

6.1.3.1. 법제화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가 있는가?
- 중앙정부-국회 협력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가?

6.1.3.2. 광역 인프라

-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계획인가?
- MX01 광역 마을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산이 있는가?

6.1.3.3. 광역 계획

-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가?
- MS09 기후재난 대응 광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가?

6.1.3.4. 예산 확보

- 4년간 총 4,0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국비-광역비-기초비 매칭 계획이 있는가?

6.1.4. 공약 작성 예시

- 공약 제목: “마을이 답이다 - 주민주권 광역 마을정책”
- 핵심 공약: 1. 마을기본법 제정 추진 (국회 협력) 2. 광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 (800억원) 3.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600억원) 4. 사회주택 1만호 공급 (1,000억원) 5. 광역 마을지원센터 허브화 (150억원)

6.2 기초단체장 후보 활용 가이드 (44개 정책)

6.2.1. 핵심 역할

- 읍면동 단위 현장 실행
- 주민자치회 활성화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6.2.2. 우선순위 정책 (상위 10개)

순위	코드	정책명	중요도
1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
2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
3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
4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
5	ME07	마을기업 육성	★★★★☆
6	MX03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7	MX04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8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
9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
10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시스템	★★★☆☆

6.2.3. 체크리스트

6.2.3.1. 주민자치 기반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가?
- 주민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가?
- MG05 숙의형 마을총회를 제도화할 계획인가?
- MG06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

6.2.3.2. 중간지원조직

- 읍면동별 주민활동가 배치 계획이 있는가?

-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가?

6.2.3.3. 현장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6.2.3.4. 협력 체계

- 광역-기초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민관협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6.2.4. 공약 작성 예시

- 공약 제목: “마을이 행복한 ○○시/군/구”
- 핵심 공약: 1. 전 읍면동 숙의형 마을총회 정례화 (100억원) 2.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30개 조성 (300억원) 3. 공동체주택 500호 공급 (300억원) 4. 마을기업 50개 육성 (150억원) 5. 읍면동별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200억원)

6.3 광역의원 후보 활용 가이드 (12개 정책)

6.3.1. 핵심 역할

- 광역 조례 제-개정
- 광역 예산 심의-감시
- 광역 정책 제안

6.3.2. 우선순위 정책 (상위 5개)

순위	코드	정책명	중요도
1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
2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
3	MG03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
4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
5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

6.3.3. 체크리스트

6.3.3.1. 조례 제정

- 마을기본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는가?
-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인가?

6.3.3.2. 예산 확보

- 마을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인가?
- 예산 심의 시 마을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것인가?

6.3.3.3. 감시-견제

- 집행부의 마을정책 실행을 감시할 것인가?
- 주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할 채널이 있는가?

6.3.4. 공약 작성 예시

- 공약 제목: “주민주권 조례로 마을 바꾸기”
- 핵심 공약: 1. 마을기본조례 제정 (주민주권-보충성 원칙 명시) 2.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제정 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조례 제정 (100억원) 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조례 제정 (80억원) 5. 마을 예산 매년 20% 증액

6.4 기초의원 후보 활용 가이드 (18개 정책)

6.4.1. 핵심 역할

- 기초 조례 제-개정
- 기초 예산 심의-감시
- 지역 현안 발굴

6.4.2. 우선순위 정책 (상위 5개)

순위	코드	정책명	중요도
1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
2	MG12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
3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
4	ME21	공동체토지신탁 자산화	★★★★☆
5	MS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

6.4.3. 체크리스트

6.4.3.1. 조례 제정

- 기초 단위 마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가?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조례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가?
- MG12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전환을 위한 조례를 검토하는가?

6.4.3.2. 지역 현안

- 지역구 마을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가?
- MG04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6.4.3.3. 예산 확보

- 지역구 마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근거가 있는가?

6.4.4. 공약 작성 예시

- 공약 제목: “○○구/동 마을자치 실현”
- 핵심 공약: 1. MG0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50억원) 2. MG12 공모사업 주민주도 전환 (30억원) 3.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10억원 조성 4. 공동체 토지신탁 5개소 (200억원) 5.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40억원)

6.5 교육감 후보 활용 가이드 (6개 정책)

6.5.1. 핵심 역할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학교-마을 연계 강화
- 청소년 자치 지원

6.5.2. 우선순위 정책 (전체 6개)

순위	코드	정책명	중요도
1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2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
3	MX05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
4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
5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
6	MC25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

6.5.3. 체크리스트

6.5.3.1. 학교-마을 연계

-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 마을교사 활용 계획이 있는가?

6.5.3.2. 청소년 자치

- 청소년 마을활동을 지원하는가?
- 학생자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6.5.3.3. 거버넌스

- 교육청-지자체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6.5.4. 공약 작성 예시

- 공약 제목: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 핵심 공약: 1. 마을교육공동체 100개 조성 (300억원) 2. 전체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운영 (200억원) 3.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 (100억원) 4. 청소년 마을활동 지원 (100억원) 5. 마을박물관 10개 조성 (80억원)

7. 100대 간단 정책카드

001 간단정책카드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부처별-대상별 분절된 돌봄을 마을 단위에서 통합하여 주민이 한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 가치2: 전문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돌봄을 이웃 관계망으로 보완하여 돌봄의 공백을 메운다
- 가치3: 돌봄 위기가구를 마을 단위에서 조기 발견하고 공적-민간 자원을 신속히 연결하여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한다
- 가치4: 디지털 돌봄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발굴로 통합돌봄의 효율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1
- 정책명: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통합돌봄, 커뮤니케이터, 마을돌봄, 이웃돌봄, 돌봄사각지대, 돌봄코디네이터, 거점센터, 공동체돌봄, 긴급돌봄, 돌봄네트워크,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에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단위 마을돌봄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분절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목표2: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1, 배치하고 이웃돌봄 자원봉사단 5,000개를 조직하여 전문돌봄 기관과 마을공동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3: 돌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위기가구 조기 발견율 70% 이상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 광역에서 아동-노인-장애인-정신건강 등 대상별 돌봄 서비스를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보건-자치행정 부서 합동으로 추진한다 광역 돌봄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읍면동 단위 서비스 통합 표준모델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 과제2: 읍면동 마을돌봄 거점센터 설치 - 운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희공간에 마을돌봄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연계-이웃돌봄 조직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서비스 기관이 아닌 기존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과제3: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및 역량강화 - 거점센터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공적 서비스와 마을돌봄 자원을 연결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영국의 링크워커와 일본의 생활지원코디네이터를 참조한 한국형 모델이다 무기계약직 이상 신분을 보장하고 연간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한다

과제4: 이웃돌봄 자원봉사단 조직 및 활동 지원 - 마을 단위 이웃돌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안부 확인-말벗-외출 동행-긴급 연락 등 일상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전문 서비스가 아닌 이웃으로서의 관심과 연결에 집중한다

과제5: 돌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긴급돌봄 네트워크 운영 - 행정 데이터와 마을 현장 정보를 결합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돌봄 핫라인을 운영한다 데이터 기반 예측과 현장 밀착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예측 데이터와 이웃돌봄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연동하고, 긴급돌봄 대응팀(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을 구성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부처별 분절 돌봄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여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돌봄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효과2: 주민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돌봄 상담-연계 창구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현장에서 해소한다

효과3: 전문돌봄 기관과 이웃돌봄 자원봉사단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고 복합 욕구 가구에 맞춤형 돌봄 경로를 설계한다

5. 예산

4년총액: 4,800억원, 연평균 1,2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30%, 시군구비 1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통합돌봄 체계의 아동돌봄 분야와 직접 연계되며 거점센터에서 공동육아 서비스를 연결하고 마을돌봄 코디네이터가 양육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거점센터 내 또는 인근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합돌봄 체계의 노인돌봄 분야를 구체화하며 이웃돌봄 자원봉사단의 핵심 활동 대상인 독거노인 돌봄과 연계한다 노인돌봄 마을공동체의 활동 성과를 거점센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동한다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마을돌봄 코디네이터와 이웃돌봄 자원봉사단의 처우-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통합돌봄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코디네이터 경력개발 경로와 활동가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002 간단정책카드 MS0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0. 핵심가치

- 가치1: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주민 자치적 협력으로 보완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 실현
- 가치2: 부모의 고립 육아를 마을 공동체 기반 협력 육아로 전환하여 양육 부담 경감
- 가치3: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마을 세대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동체 회복 모델
- 가치4: 공동육아 공간에 에코 교육과 친환경 운영을 적용하여 영유아기부터 환경감수성을 함양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2
- 정책명: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돌봄품앗이, 돌봄협동조합, 양육부담경감, 돌봄사각지대, 마을활동가, 부모참여, 공동체돌봄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고, 부모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간을 확대한다
- 목표2: 돌봄품앗이 조직화와 돌봄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 돌봄 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적 운영 구조를 확립한다
- 목표3: 공공 보육기관-주민자치회-돌봄협동조합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통합 돌봄 문화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및 운영 - 마을회관·주민센터 유휴공간·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초 등 저학년 중심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고, 부모와 마을돌봄 활동가가 공동 운영하는 열린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
- 과제2: 돌봄품앗이 조직화 및 운영 지원 - 동일 마을·아파트 단지 내 또래 자녀를 둔 가구 5~10가구를 단위로 돌봄품앗이를 조직하고, 돌봄 시간 교환·공동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눔터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부모 네트워크 모임 주선, 품앗이 운영 매뉴얼 보급, 활동비 소액 지원, 돌봄시간 교환 적립제 운영, 분기별 품앗이 교류회 개최

과제3: 마을돌봄 활동가 양성 및 배치 - 경력단절 부모, 은퇴 교사, 마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마을돌봄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나눔터 및 품앗이에 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돌봄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과제4: 돌봄협동조합 설립 및 자립 지원 - 품앗이·나눔터 운영 경험이 축적된 부모 그룹이 돌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나눔터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체험학습·부모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5: 마을돌봄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 기초자치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자치회·돌봄협동조합·어린이집 등이 참여하는 마을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돌봄 자원 연계와 정책 환류 체계를 운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걸어서 10분 내 접근 가능한 마을돌봄 거점 확보, 긴급·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 부모 교류와 정보 공유의 일상적 공간 마련

효과2: 부모 간 상호 신뢰 형성과 고립 육아 해소, 자발적 마을돌봄 문화 확산, 돌봄협동조합 설립의 토대 마련

효과3: 돌봄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 경력단절 부모의 마을 일자리 창출, 세대 간 교류 촉진,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기반 마련

5. 예산

4년총액: 32억원, 연평균 8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을돌봄 나눔터가 통합돌봄 체계의 영유아·아동 돌봄 거점으로 연계되며, 전 생애주기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돌봄 자원 공유와 연계 체계를 공동 운영한다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마을돌봄 활동가의 처우·경력인정 제도가 나눔터 인력 안정성의 선결 조건이며, 양성 과정 표준화와 보수교육 체계를 공동 설계한다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돌봄협동조합 설립과 자립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초기 자금·교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돌봄 분야 성장을 공동 추진한다

003 간단정책카드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마을공동체가 보완하여 노인의 일상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 가치2: 돌봄을 받는 노인이 동시에 돌봄을 주는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 노년의 존엄과 역할을 회복한다
- 가치3: 고령사회 돌봄 비용 절감과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실현한다
- 가치4: 노인돌봄에 폭염-한파 대비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기후취약 고령자 보호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3
- 정책명: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독거노인, 돌봄이웃, 경로당, 고독사예방, 공동식사, 안부확인, 에이징인플레이스, 호혜돌봄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돌봄이웃단 500개를 조직하고 돌봄활동가 5, 양성하여 독거노인-허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지원 등 일상돌봄을 주민 주도로 운영한다
- 목표2: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노인돌봄 거점공간으로 전환하여 공동식사, 건강체조, 인지훈련, 여가활동 등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목표3: 읍면동별 돌봄필요 노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마을 3자 돌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고독사 제로 마을 100개를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돌봄이웃단 조직 및 운영 - 읍면동별 규모의 마을돌봄이웃단을 조직하여 담당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확인-말벗-생활지원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통리반장-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돌봄이웃을 모집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과제2: 경로당 돌봄거점 전환 사업 - 경로당을 단순 여가공간에서 공동식사-건강체조-인지훈련-세대교류가 이루어지는 마을돌봄 거점으로 전환한다
- 과제3: 돌봄필요 노인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읍면동 단위로 돌봄 사각지대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촘촘한 감지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이웃단-경로당-우체국-수도검침원-가스안전점검원

-택배기사 등 마을 내 접점을 활용한 이상 징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실시간 연동하며, AI 스피커-IoT 센서 등 스마트 안부확인 기술을 병행 도입한다

과제4: 노인 호혜돌봄 및 사회참여 활성화 - 건강한 노인이 허약노인을 돌보고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호혜적 돌봄 모델을 운영하여 돌봄받는 존재에서 돌봄 주체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노인 돌봄자원봉사 시간은 행제(시간적립-활용), 어르신 마을강사(전통기술-생활지혜-요리 전수), 노인일자리와 마을돌봄 연계(경로당 급식도우미-마을정원사-아이돌봄 등)

과제5: 공공 - 민간-마을 돌봄네트워크 구축 - 주민센터-보건소-복지관-마을조직 간 유기적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의 분절을 극복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독거노인 안부확인 100% 달성, 사회적 고립 해소, 고독사 예방

효과2: 경로당 이용률 60% 이상 향상, 노인 영양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돌봄 생태계 형성

효과3: 돌봄 사각지대 50% 감소, 위기 대응 시간 단축(발견 후 이내 개입), 예방적 개입 강화

5. 예산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광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와 마을 단위 노인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한다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마을돌봄이웃단 활동가의 처우개선(활동비-보험)과 체계적 역량강화(교육-슈퍼비전)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경로당 돌봄거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노인-아동-청소년 교류)을 연계하여 노인 돌봄과 세대교류를 동시에 실현하고 마을 결속을 강화한다

004 간단정책카드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0. 핵심가치

- 가치1: 장애인·치매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권 보장과 탈시설 흐름에 부합
- 가치2: 주민 주도의 포용적 마을문화 형성으로 사회통합 실현
- 가치3: 시설 중심 돌봄에서 마을 중심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가치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에서 기후재난 시 취약계층 우선 보호와 대피 체계를 포함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4
- 정책명: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포용마을, 장애인, 치매, 유니버설디자인, 탈시설, 지역사회돌봄, 인식개선, 이웃돌봄, 당사자참여, 마을통합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 단위 장애인·치매 친화환경을 조성하여 물리적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외출·이동·사회활동 참여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 목표2: 주민 대상 장애·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이웃돌봄 훈련을 체계화하여 편견 없는 마을문화를 형성하고 자발적 돌봄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 목표3: 마을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당사자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장애인 - 치매 친화 마을환경 조성 - 마을 내 주요 생활동선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인프라를 구축한다 보도턱 낮춤, 음향신호기 설치, 치매 배회감지 시스템, 쉼터 조성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설계한다
- 과제2: 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이웃돌봄 훈련 체계화 - 장애·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적 돌봄기술을 주민에게 교육한다 치매안심센터·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인증을 운영한다
- 과제3: 마을 통합돌봄 거점공간 운영 -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내에 장애인·치매 당사자가 함께 이용하는 거

점공간을 조성한다 주간보호, 인지재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며 주민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과제4: 당사자 사회참여 및 자립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치매 어르신이 마을 안에서 역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텃밭, 생활공예, 마을카페 보조, 마을환경정비 등 당사자 맞춤형 활동을 기획한다

과제5: 포용마을 통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포용마을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당사자·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자 자기결정권 존중 지표, 주민 참여도, 환경 접근성 등을 포함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당사자의 외출과 이동이 안전해지고 마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된다

효과2: 주민의 편견이 줄고 위기상황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자발적 돌봄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효과3: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이 감소하고 시설 입소 지연 효과로 돌봄비용이 절감된다

5. 예산

4년총액: 48억 원, 연평균 12억 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포용마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을 단위 실행모델로 연계된다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치매 어르신 돌봄이 노인돌봄 마을공동체의 핵심 대상이다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장애인·치매 당사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이 연동된다

005 간단정책카드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0. 핵심가치

가치1: 돌봄활동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여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돌봄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가치2: 체계적 교육으로 돌봄 전문성을 높여 마을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신뢰를 강화한다

가치3: 소진예방과 상호지원으로 활동가의 건강한 활동을 보장하고 마을돌봄 생태계를 안정화한다

가치4: 돌봄활동가 역량에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05

정책명: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대영역: 사회

분야: 돌봄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역량강화, 활동수당, 4대보험, 교육체계, 경력인정, 소진예방, 휴식권, 마을 돌봄

2. 정책목표

목표1: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수당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4대보험 가입률을 60%로 높인다

목표2: 기초-심화-전문 3단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4년간 2,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고 경력인정 등록을 1,500건 달성한다

목표3: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여 활동지속률을 55%에서 75%로 개선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활동수당 체계화 -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돌봄활동가의 정의, 활동수당 기준, 4대보험 지원, 경력인정, 교육권, 휴식권을 제도화한다 기초의회와 협력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돌봄활동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과제2: 3단계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 기초과정(돌봄기본-대인관계-안전관리), 심화과정(영역별 전문돌봄-사례관리), 전문과정(통합돌봄코디네이터-위기대응-지역자원연계)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이론 50%)-오프라인(실습 50%) 혼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과제3: 돌봄활동 경력인정제 운영 - 돌봄활동 경력 DB를 구축하여 활동이력(시간-분야-교육-성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직-재취업 시 공식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경력등록-증명서 발급 실무를 담당한다 연간 활동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며 교육이수 실적을 가산한다

과제4: 소진예방 및 휴식권 보장 체계 - 돌봄활동가 전용 심리상담, 동료 수퍼비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연간 유급휴식 10일과 긴급휴식제를 보장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돌봄활동가 협의회가 동료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한다 휴식 시 대체인력을 사전 확보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과제5: 마을돌봄 네트워크 상호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단위 돌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례공유-상호학습-긴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단위 돌봄활동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읍면동별 이상의 돌봄활동가가 정례모임을 갖고, 분기별 시군구 전체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일상적 정보교류와 긴급지원 요청을 가능하게 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처우의 제도적 근거가 확보되어 활동수당의 안정적 지급과 사회보험 보장이 가능해지고, 활동가의 경제적 안정으로 장기활동 기반이 마련된다

효과2: 돌봄 전문역량의 표준화와 향상으로 서비스 질이 제고되고, 단계별 성장경로가 제시되어 활동가의 직업정체성과 동기가 강화된다

효과3: 돌봄활동의 공식적 경력 인정으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력 축적에 따른 처우개선 연동으로 장기활동 동기가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120억원, 연평균 3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적자원인 돌봄활동가의 처우와 역량을 강화하여 통합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MS0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인돌봄 현장의 활동가 처우개선과 전문교육을 연계하여 고령자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광역 경력관리시스템과 기초 돌봄활동 경력인정제를 호환하여 경력증명의 범용성을 확보하고 경력-처우 연동 기반을 구축한다

006 간단정책카드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0. 핵심가치

- 가치1: 병원 중심 치료에서 마을 중심 예방으로 건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 가치2: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밀착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실현한다
- 가치3: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을 돌보는 역량을 키워 행정 변동에 독립적인 지속가능한 마을건강공동체를 실현한다
- 가치4: 마을건강돌봄이 기후재난 시 건강모니터링과 응급대응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6
- 정책명: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건강돌봄센터, 예방적건강관리, 마을건강활동가, 주민건강위원회, 건강불평등, 커뮤니티케어, 일차보건의료, 건강마을, 통합돌봄, 주민주도건강관리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마을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의료기관-마을공동체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1차 건강관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
- 목표2: 마을건강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형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의 주민주권을 실현한다
- 목표3: 주민 참여형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마을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과 건강 불평등 완화를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읍면동 마을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마을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상담, 만성질환 모니터링, 건강교육, 방문건강관리 등 예방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제2: 마을건강활동가 양성 및 배치 -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마을건강활동가로 양성하여 이웃 주민의 건강 모니터링, 건강정보 전달, 고위험군 발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일상적 건강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과제3: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마을건강계획 수립 - 읍면동별로 주민, 마을건강활동가, 보건소 직원, 지역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단위 건강조사에 기반한 마을건강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마을의 건강 의제를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주민주권의 핵심 기구이다
- 과제4: 보건소 - 의료기관-마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마을건강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지역의원, 약국, 사회복지관, 방문간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강돌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뢰와 연계를 체계화한다
- 과제5: 예방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교실, 건강걷기 모임,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 정신건강 자조모임, 건강한 식생활 공동체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센터 중심으로 운영한다 주민건강위원회가 발굴한 건강 의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건강활동가가 진행을 담당하며, 보건소 전문인력이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구조로 운영한다

4. 기대효과

- 효과1: 주민의 1차 건강관리 접근성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이 감소하여 지역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 효과2: 주민 간 건강돌봄 관계망이 형성되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악화 조기 발견율이 향상되고 사회적 고립이 완화된다
- 효과3: 주민이 건강정책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되어 마을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건강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52억원, 연평균 13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광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의 기초 단위 실행 거점으로서 마을건강돌봄센터가 연동되며 센터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다
-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마을건강돌봄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활동가가 정신건강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1차 상담을 지원한다
-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마을건강활동가의 처우 개선, 활동비 안정화, 경력인정 체계 구축이 돌봄활동가 정책과 연계되어 통합적 활동가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

007 간단정책카드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0. 핵심가치

- 가치1: 코로나19 이후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을 단위 예방적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 가치2: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해소하여 누구나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한다
- 가치3: 주민이 정신건강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여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신건강 마을공동체를 구현한다
- 가치4: 정신건강 돌봄이 기후재난 피해자 심리지원과 기후불안 대응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7
- 정책명: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 대영역: 사회
- 분야: 돌봄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정신건강마을돌봄, 마을활동가, 조기발견,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정신건강낙인해소, 자조모임, 사회적고립, 회복지향, 커뮤니티케어, 심리적안전망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정신건강 마을돌봄 거점을 설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마을공동체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확보한다
- 목표2: 정신건강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이웃을 돌보는 자치형 정신건강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3: 주민 참여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고 도움요청 문화를 마을 안에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읍면동 정신건강 마을돌봄 거점 설치 및 운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유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마을돌봄 거점을 설치하고 심리상담, 정신건강 스크리닝, 자조모임 운영, 전문기관 연계 등 예방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제2: 정신건강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치 -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신건강 마을활동가로 양성하여 이웃

주민의 정신건강 위험신호 관찰, 심리적 지지, 자조모임 진행, 전문기관 연계 등 일상적 정신건강 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과제3: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마을 안전망 구축 - 이장, 통장, 아파트 관리인, 편의점 종사자, 택배기사, 종교인 등 주민 접촉 빈도가 높은 마을 구성원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여 자살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마을 안전망을 구축한다

과제4: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소-마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 마을돌봄 거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돌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견에서 치료까지 연계를 체계화한다

과제5: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개선 활동 전개 - 스트레스 관리 교실, 마음건강 걷기 모임, 우울예방 자조모임, 은둔청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거점 중심으로 운영하고 마을 단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증 단계 조기개입을 통해 중증화 예방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과부하가 완화된다

효과2: 마을 안에 정신건강 돌봄 관계망이 형성되어 고립된 주민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1차 안전망이 구축된다

효과3: 마을 곳곳에 자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인적 안전망이 형성되어 자살예방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위기 상황 발견과 연계 속도가 향상된다

5. 예산

4년총액: 44억원, 연평균 11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마을건강돌봄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1차 스크리닝과 정신건강 마을돌봄 거점으로서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활동가와 정신건강 활동가의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MS0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긴급돌봄 대상 중 정신건강 위기가구의 발견과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에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가 필수적이며 위기개입 공동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MS0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치매 어르신과 정신장애인의 마을 내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포용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돌봄의 포용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008 간단정책카드 MS0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0. 핵심가치

가치1: 돌봄자 입원이나 사망 등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즉시 대응하여 2차 위기를 예방한다

가치2: 행정 중심 복지전달이 아닌 주민 참여형 이웃돌봄 네트워크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가치3: 긴급돌봄과 장기요양 등 중장기 제도를 연계하여 지속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가치4: 긴급돌봄이 기후재난 시 응급대응에 활용되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08

정책명: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대영역: 사회

분야: 돌봄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위기대응, 돌봄공백, 24시간핫라인, 돌봄SOS, 일시재가, 식사배달, 마을돌봄활동가, 중장기돌봄연계

2. 정책목표

목표1: 읍면동 단위 긴급돌봄 핫라인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돌봄공백 위기 발생 시 접수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이내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목표2: 읍면동당 마을돌봄 활동가 이상을 배치하고 일시재가와 동행지원과 식사배달과 주거편의와 안심돌봄 등 5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4년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목표3: 긴급돌봄 종료 후 통합사례관리 의무 연계와 3개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중장기 돌봄 연계율을 30%에서 70% 이상으로 높인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24시간 긴급돌봄 핫라인 구축 및 운영 - 기초지자체에 통합 긴급돌봄 상담전화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배치하여 돌봄공백 위기를 접수하고 읍면동별 대응팀에 즉시 연결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야간과 휴일은 사회복지관 당직 또는 전문 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읍면동 담당자와 마을돌봄 활동가 간 비상연락망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과제2: 읍면동별 마을돌봄 활동가 양성 및 배치 - 읍면동당 마을돌봄 활동가 이상을 양성하여 긴급돌봄 초기 대응과 이웃 상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치한다 표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월 활동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며 보수교육과 사례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과제3: 5대 긴급돌봄 서비스 표준화 및 제공 - 일시재가돌봄과 동행지원과 긴급식사배달과 주거편의와 안심 돌봄 등 5대 긴급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 서비스별 제공기준과 이용한도를 매뉴얼로 정비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액 지원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한다

과제4: 긴급 - 중장기 돌봄 연계 체계 구축 - 긴급돌봄 종료 후 통합사례관리사 연계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보험과 돌봄서비스 등 중장기 제도 안내와 신청을 지원한다 긴급돌봄 종결 시 통합사례관리 전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고 연계 후 3개월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단절 여부를 점검한다

과제5: 읍면동 마을돌봄위원회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 읍면동별 마을돌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점검과 활동가 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를 총괄한다 정례회의를 통해 사례 공유와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고 읍면동 긴급돌봄 운영현황 보고와 평가를 실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돌봄공백 발생 시 접수부터 초기 대응까지에서 이내로 단축하여 위기가구 방치를 방지한다

효과2: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이웃 단위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고 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한다

효과3: 돌봄공백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매칭하여 위기가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돌봄 위기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5. 예산

4년총액: 24억원, 연평균 6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0%,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긴급돌봄이 통합돌봄 체계의 위기대응 기능을 담당하며 긴급-중장기 돌봄 연계의 기반이 된다

MS0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마을돌봄 활동가의 활동비와 사회보험과 역량강화 체계가 긴급돌봄 인력 안정성을 좌우한다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긴급돌봄 대상 중 정신건강 위기가구의 발견과 연계에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가 필수적이다

009 간단정책카드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전선 안전망 구축
- 가치2: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는 마을 단위 주민 자율대응 역량 강화
- 가치3: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 가치4: 기후재난 대응이 정책의 핵심이며 폭염-한파-홍수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마을 단위 대응 역량 구축을 통합하고 AI 기반 조기경보와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응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09
- 정책명: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 환경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기후재난, 폭염, 한파, 집중호우, 재난대응, 취약계층, 마을안전망, 자율방재단, 조기경보, 쉼터,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자치단체에 기후재난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365일 상황실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목표2: 읍면동 단위 마을 자율방재단 500개를 조직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평시 예방부터 재난 시 대응, 복구까지 주민 자율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목표3: 폭염, 한파 쉼터를 1만 개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4년간 기후재난 사망자를 50% 감소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기후재난 통합대응센터 설치 - 광역자치단체에 기상, 재난, 환경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후재난 통합대응센터를 기상청 실시간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재난정보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 과제2: 조기경보 다중전달 시스템 구축 -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을 전 예측하여 주민에게 다중 채널로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바일 앱,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마을 자율방재단 연락망을 활용한 4중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수신 확인 및 미응답자 추적 기능을 갖춘다

과제3: 마을 자율방재단 조직 및 역량강화 - 읍면동별 규모의 마을 자율방재단을 조직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율방재단원 모집, 초기교육, 분기별 실전훈련,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과제4: 폭염, 한파 쉼터 확대 및 민간참여 - 공공시설 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은행, 편의점, 약국 등 민간 쉼터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쉼터 환경기준(온도, 음용수, 의료키트)을 강화한다

과제5: 취약계층 안전확인 이중 안전망 시스템 -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150만 명을 등록하고 시 음성 안부확인과 폭염, 한파 경보 발령 시 시가 등록 대상자에게 1일 3회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4. 기대효과

효과1: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시간이 현행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되고

효과2: 기후재난 경보 주민 도달률이 현행 60%에서 95%로 향상되어 사전 대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효과3: 재난 발생 시 행정 도달 전 골든타임 내 이웃 간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5. 예산

4년총액: 2,000억원, 연평균 5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40%, 시군구비 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본 정책의 취약계층 안전확인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며 냉난방비 지원과 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한다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자율방재단의 마을 단위 활동을 안전마을 인증 및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후속 정책이다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010 간단정책카드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0. 핵심가치

- 가치1: 기후재난 사망자의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호체계가 시급하다
- 가치2: 마을 단위 이웃돌봄과 기술을 결합한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 정책이다
- 가치3: 공동체 기반 안전망이 행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모델이다
- 가치4: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가 정책의 핵심이며 에너지빈곤층-독거노인-장애인의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보호체계를 구현하고 AI 안전확인 시스템과 디지털 모니터링으로 기후재난 취약계층을 실시간 보호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0
- 정책명: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취약계층, 기후재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안전망, 냉난방비지원, 건강관리, 기후정의,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자치단체가 기후재난 취약계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150만 명을 사전 등록하여 재난 발생 시 안전확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목표2: 재난 발생 시 AI 음성전화, 이웃돌봄주민 방문, 자율방재단 긴급방문의 3단계 안전확인 체계를 가동하여 폭염과 한파 시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한다
- 목표3: 냉난방비 지원 50만 가구, 취약주거환경 개선 5,000가구, 긴급구호물품 읍면동 비축을 통해 기후재난의 직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빈곤을 해소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취약계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150만 명의 건강, 주거, 사회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광역 단위로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를 연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한다
- 과제2: 3단계 안전확인 시스템 운영 - 재난 경보 발령 시 AI 음성전화(즉시), 이웃돌봄주민 방문(내), 자율방재단 긴급방문(내)의 단계별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1단계 AI 전화 미응답자를 자동 분류하여 2단계

이웃돌봄주민에게 알리를 전송하고, 2단계 미확인 시 3단계 자율방재단이 긴급출동한다

과제3: 냉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 - 전기-가스요금 자동차감 또는 에너지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와 대상자 확인을 담당한다

과제4: 취약주거환경 긴급 개선 -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냉난방설비가 미설치된 5,000가구의 주거환경을 긴급 개선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지자체가 직접 시공하며, 건물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제5: 읍면동 긴급구호물품 비축 및 배분 - 폭염 시 생수, 냉각팩, 부채, 염분보충제, 한파 시 담요, 핫팩, 내복, 고열량식품을 읍면동별로 비축하고 요청 시 내에 배분한다 주민자치회와 자율방재단이 배분 거점을 운영하고, 마을복지관과 경로당을 물품 수령 장소로 활용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 전수 파악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안전확인과 지원이 실현된다

효과2: AI 기술과 마을 주민조직을 결합하여 행정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확인 완료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

효과3: 냉난방기기 보유 가구의 미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온열-한랭 질환 발생을 예방한다

5. 예산

4년총액: 3,600억원, 연평균 9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40%, 시군구비 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기후재난 전체 대응체계의 하위 정책으로 취약계층 특화 보호를 담당하며 재난 경보 발령 체계와 대응 조직 운영을 공유한다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과 안전마을 인프라를 공유하며 취약계층 보호가 안전마을의 핵심 기능으로 연계된다

MS0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기후재난 시 건강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마을건강돌봄센터가 담당하여 평시와 재난 시를 연결하는 연속적 돌봄 체계를 제공한다

011 간단정책카드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0. 핵심가치

- 가치1: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 단위 기후위기 대응 실천 기반 구축
- 가치2: 주민이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 가치3: 발전 수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마을경제 순환구조와 공동체 자산 형성
- 가치4: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이 정책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생산-에너지효율화-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차원 기후정의를 실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1
- 정책명: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기후위기, 주민참여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자치단체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형·도시형·어촌형 유형별로
- 목표2: 마을 단위 태양광·지열·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ESS를 연계하여 총 500MW 발전 용량을
- 목표3: 마을별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주민이 조합원으로 발전소를 공동 소유하고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에너지자립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선정 - 광역자치단체별 4년 단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지·재생에너지 잠재력·공공시설 보유 여건을 기준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마을 유형별 목표를 설정하여 농촌형 70개, 도시형 20개, 어촌형 10개로 구분하고, 주민 설명회와 에너지 진단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정한다.
- 과제2: 마을 맞춤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 태양광 400MW, 지열 냉난방 80MW, 소수력 2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마을별 자연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옥상 태양광과 마을 부지 활용 태양광을 병행하고, 공공시설 중심 지열 냉난방과 하천 보유 마을 소수력을 결합하여 에너지원을 다각화한다.
- 과제3: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및 비상전력 체계 마련 - 마을당 3MWh 규모 ESS를 설치하여 주간 태양

광 발전 전력을 저장하고 야간 전력 자급을 실현하며, 정전 시 비상전력 공급체계를 갖춘다 ESS를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연계하여 자립률을 30%에서 50%로 끌어올리고, 주민센터·복지관 등 필수시설에 우선 비상전력을 공급한다.

과제4: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수익 배분체계 운영 - 마을당 에너지 협동조합 1개를 설립하여 주민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운영비·마을기금·조합원 배당으로 배분한다

과제5: 주민 참여 교육 및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 - 마을별 설명회와 주민 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별 설명회 개최, 주민 과반 찬성 투표 실시, 재생에너지 및 협동조합 운영 교육, 선진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실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으로 사업의 현실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효과2: 단일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지형 조건에 따른 안정적 발전량 확보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효과3: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재난 시 마을 단위 에너지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5. 예산

4년총액: 5,500억원, 연평균 1,375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10%, 민간기타 30%

6. 연계정책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공유하며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과 생태환경 보전을 결합하여 마을 단위 탄소중립의 종합 모델을 구성하며

ME09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수익 배분 구조를 경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012 간단정책카드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0. 핵심가치

- 가치1: 탄소중립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기후정의 실현
- 가치2: 산업 전환기 노동자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 보장
- 가치3: 에너지 전환 지역의 경제 붕괴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 가치4: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이 정책의 핵심이며 화석연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2
- 정책명: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탈석탄, 일자리 전환, 재교육,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보호, 공정 전환, 에너지 전환, 녹색 일자리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가 정의로운 전환 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탈석탄과 내연기관 산업 축소로 영향받는 노동자에게 맞춤형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에너지 효율 컨설팅, 친환경 자동차 정비, 사회적경제 창업 등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4년간 5,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
- 목표2: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녹색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 1,500개, 건물 에너지 효율 분야 1,000개, 친환경 산업 분야 500개를 목표로 하며 정규직 비율 80% 이상을 달성한다.
- 목표3: 노사정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환 과정의 공동 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유산 관광, 친환경 농업, 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 경제 다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일 산업 의존도를 낮춘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정의로운 전환 지역 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 에너지 전환 영향 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지역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노동조합, 기업, 행정, 주민 구성된 노사정주민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별 정의로운 전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당 규모의 전환 기금을

조성한다.

과제2: 노동자 맞춤형 재교육 및 전직 지원 - 탈석탄과 내연기관 축소로 영향받는 노동자에게 분야 맞춤형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과제3: 녹색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녹색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여 전환 노동자의 안정적 재취업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 인센티브와 공공 투자를 병행하여 민간 부문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공공 일자리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과제4: 지역 경제 다변화 프로그램 운영 - 단일 산업 의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 농업, 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경제 다변화 프로그램 50개를 운영한다.

과제5: 취약계층 포괄적 생활 안전망 구축 -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고령 노동자, 하청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전환 과정의 민주적 결정 구조가 확립되어 이해관계자 갈등이 최소화되고, 법적 기반과 재원이 확보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효과2: 4년간 5,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 역량을 확보하고 전직 성공률 70% 이상을 달성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효과3: 정규직 비율 80% 이상과 월 평균 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기존 산업 수준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한다.

5. 예산

4년총액: 4,000억원, 연평균 1,0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0%, 시군구비 2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11 마을 에너지자립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 지역의 핵심 경제 다변화 수단이자 녹색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직결된다.

ME03 마을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전환 지역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과 마을기업 전환이 지역 경제 다변화의 실행 수단으로 연계된다.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정의로운 전환 조례의 상위 법적 근거로서 주민 참여와 자치 기반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013 간단정책카드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유휴지를 녹지로 전환하여 도시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
- 가치2: 공동체텃밭이 자연스러운 이웃 교류 공간이 되어 단절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한다
- 가치3: 세대통합 농사체험으로 어르신 고립과 아동 자연결핍을 함께 해결하는 상호돌봄을 실현한다
- 가치4: 도시농업과 마을텃밭이 탄소흡수-먹거리자급-생태교육을 통합하며 기후위기 시대 지역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3
- 정책명: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도시농업, 마을텃밭, 공동체텃밭, 도시녹화, 식량자급, 공동체회복, 세대통합, 치유농업, 생태교육, 주민운영,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유휴지, 옥상, 학교 공터를 활용해 마을 공동체텃밭을 조성하고 참여 가구 5만 가구를 달성한다.
- 목표2: 도시농업 전문가과정과 기초교육을 통해 도시농부 1만 명을 양성하고 세대통합 농사체험을 정착시킨다.
- 목표3: 마을별 텃밭운영위원회 자율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의존 없는 주민 주도 텃밭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 공동체텃밭 조성 - 읍면동별 유휴지를 활용하여 평균 1,000㎡ 규모의 공동체텃밭을 조성하고 급수시설, 농기구창고, 퇴비장, 쉼터를 설치한다 1가구 1구획(10㎡) 분양 체계를 운영하고 연 분양료를 부과하되 취약계층은 무료 분양하며 배려텃밭을 별도 운영한다
- 과제2: 옥상텃밭 및 학교텃밭 확대 - 아파트와 공공시설 옥상에 경량텃밭을 설치하고 초중고 학교텃밭을 조성하여 생태교육과 연계한다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과 방수공사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교텃밭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한다

과제3: 주민 도시농부 양성 교육 - 도시농업 전문가과정(연)과 주민 기초교육(연 2)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협회가 교육을 공동 운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배법 공유와 질의응답을 지원한다

과제4: 세대통합 농사멘토링 - 어르신과 아동을 1대1 매칭하여 6개월 단위 농사멘토링 프로그램(모종심기부터 수확축제까지)을 운영한다 연 100쌍 매칭 목표로 주민자치회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고 멘토링 활동비를 지원한다

과제5: 공동체 활동 및 자율운영 정착 - 봄 모종심기 행사, 가을 수확축제, 텃밭품평회, 요리교실, 나눔장터 등 연중 공동체 활동을 운영한다 마을별 텃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 관리, 행사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은 기반시설과 기술지원에 집중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간 신규 조성으로 녹지 30만㎡ 확보 및 3만 가구 직접 참여 달성

효과2: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옥상과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접근성 확대

효과3: 4년간 도시농부 1만 명 양성으로 텃밭 자율운영 역량 확보 및 주민 리더 양성

5. 예산

4년총액: 20억원, 연평균 5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0%,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텃밭을 통한 탄소흡수와 녹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적 수단이 된다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마을텃밭은 생태마을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순환농법과 퇴비화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농사멘토링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대표적 실천 모델로서 상호 연계 운영이 효과적이다

014 간단정책카드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0. 핵심가치

- 가치1: 기후위기 시대 주민 환경문해력 향상과 생활전환 역량 강화
- 가치2: 마을 공동체 기반 상향식 탄소중립 실천 거점 구축
- 가치3: 세대 간 환경학습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문화 형성
- 가치4: 하향식 캠페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주민 자율적 학습-실천 모델 확립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4
- 정책명: 기후환경 마을학교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기후환경교육, 마을학교, 기후문해력, 탄소중립, 마을교사, 환경실천, 생태전환교육, 주민참여, 세대통합학습, 녹색생활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가 기후환경 마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을 설치하여 주민 주도 환경교육 체계를 정착시킨다
- 목표2: 마을교사 1, 양성하고 아동-청소년-성인-어르신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10만 명의 교육 참여를 달성한다
- 목표3: 마을학교를 거점으로 탄소발자국 측정-감축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참여 마을의 생활 탄소배출량 20% 감축을 실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기후환경 마을학교 설치 -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가 기후환경 마을학교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을학교 유형을 도시형(아파트단지 중심), 농촌형(마을회관 중심),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설계한다
- 과제2: 기후환경 마을교사 양성 체계 구축 - 마을 주민 중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선발하여 양성과정(기후과학 기초, 교수법, 실천프로젝트 설계, 퍼실리테이션)을 운영하고 마을학교에 배치한다 환경교육 센터-시민단체-대학이 공동으로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 4기를 운영한다 기존 마을활동가와 환경 동아리 구성원을 우선 모집하여 초기 조직역량을 확보한다

과제3: 세대별 맞춤형 기후환경 교육과정 운영 - 아동(기후놀이학교), 청소년(기후행동프로젝트), 성인(생활탄소 감축실천), 어르신(기후건강교실)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각 과정을 10-12회 단위로 설계하고 이론-체험-실천을 결합한다

과제4: 마을 탄소발자국 측정 - 감축 실천 프로젝트 - 마을학교 참여 가구가 자가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마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교육과 실천을 연결하는 핵심 과제이다 탄소발자국 측정 앱을 보급하고 마을교사가 가구별 에너지진단과 감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제5: 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모델 확산 - 개별 마을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자료-운영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광역-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분기별 마을학교 교류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육자료-사례를 공유한다 기후환경 마을학교 축제를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조례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행정 담당자 교체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 주도 운영위원회가 현장 수용성을 담보한다

효과2: 외부 전문강사 의존을 탈피하고 주민 간 또래학습 구조가 형성되어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활동비와 경력인정으로 활동가 소진을 방지한다

효과3: 세대별 눈높이 교육으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마을 공동체 결속을 강화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학습 문화가 형성되며 특히 어르신의 절약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되는 역세대 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5. 예산

4년총액: 280억원, 연평균 7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기후환경 마을학교의 체험학습 거점으로 마을텃밭을 활용하고 생태순환교육과 먹거리교육을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높인다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마을학교 교육 성과가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의 주민역량 기반이 되며 생태마을의 실천사례가 교육자료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인프라와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기후환경교육을 마을 평생학습 체계에 통합한다

015 간단정책카드 MS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0. 핵심가치

- 가치1: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마을 단위 실현 거점 구축
- 가치2: 에너지-자원-생태를 통합한 주민 주도 녹색전환 모델 확산
- 가치3: 기후위기 적응과 마을 공동체 회복력 동시 강화
- 가치4: 생태적 생활양식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문화 정착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5
- 정책명: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탄소중립, 생태마을, 재생에너지자립,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생태복원, 녹색전환, 탄소감축, 기후적응, 주민참여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별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을 조성하여 마을 단위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정착시킨다
- 목표2: 참여 마을의 재생에너지 자급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원순환률을 70%까지 향상시켜 탄소 배출량 40% 감축을 달성한다
- 목표3: 탄소중립 마을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민 주도 녹색생활 실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태마을 운영의 자립성과 확산성을 확보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유형을 도시형(아파트-주택단지),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마을별 탄소배출 현황을 진단(에너지-폐기물-교통-농업 부문)하고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비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마을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과제2: 마을 재생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 -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 소규모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한다 마을회관-경로당-공동시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효율화(단열-LED-고효율가전 교체)를 병행한다

과제3: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마을 체계 구축 - 마을 단위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재사용 나눔장터, 리필스테이션 등 제로웨이스트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을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수거-재가공을 주민 참여로 운영한다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텃밭-도시농업에 활용한다

과제4: 마을 생태공간 복원 및 기후적응 인프라 조성 - 마을 내 녹지-습지-빗물정원-옥상녹화 등 생태공간을 복원하고 도시열섬 완화, 빗물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마을 내 유휴공간과 노후 주차장 등을 생태공원-빗물정원-텃밭으로 전환한다 투수성 포장, 나무심기, 벽면녹화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마을 생태지도를 주민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다

과제5: 탄소중립 마을 인증제 도입과 네트워크 구축 - 탄소중립 생태마을 인증제(3단계: 시작-성장-자립)를 도입하여 마을별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모델을 확산한다 인증 기준(에너지자급률, 자원순환률, 생태공간 비율, 주민참여도, 탄소감축률)을 마련하고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고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으로 실행 동력과 현장 수용성이 확보된다

효과2: 마을 재생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 참여 동기가 강화된다

효과3: 마을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마을 내 물질 순환 경계가 형성된다 퇴비화 연계로 도시농업과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5. 예산

4년총액: 350억원, 연평균 87.5억원

재원: 국비 40%

6. 연계정책

MS14 기후환경 마을학교: 마을학교에서 양성된 기후교육 역량이 생태마을 주민 참여의 기반이 되며 생태마을의 실천 사례가 교육 콘텐츠로 환류되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자원순환 퇴비화와 마을텃밭의 연계가 먹거리-환경 선순환을 만들고 생태공간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태마을 에너지자립과 자원순환의 운영 주체로서 경제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환원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016 간단정책카드 MS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0. 핵심가치

- 가치1: 기후재난 증가 추세에서 마을 단위 초기 대응은 인명 피해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 가치2: 행정 중심 방재의 한계를 주민 자율 방재체계로 보완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가치3: 민관협치 기반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 가치4: 기후재난 안전마을이 정책의 핵심이며 자율방재단-안전인프라-조기경보체계를 마을 단위에서 구축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6
- 정책명: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 대영역: 사회
- 분야: 안전·환경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자율방재단, 마을안전지도, 재난대응, 주민참여, 민관협치, 안전훈련, 방재조직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마을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규약을 제도화하여 상시적 안전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이통장이 협력하는 3자 협의체 모델을 표준화한다.
- 목표2: 계절별 맞춤형 재난훈련을 정례화하고 마을안전지도를 주민참여 방식으로 제작하여 마을별 재난 취약지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전 대응력을 확보한다.
- 목표3: 마을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율방재 장비를 보급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주민 자율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마을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적 동기를 부여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안전협의체 구성 및 제도화 -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이통장이 참여하는 마을안전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규약을 제정한다 시군구 안전마을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회의와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협의체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 과제2: 계절별 시나리오 기반 재난훈련 정례화 - 마을별 재난 취약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 맞춤형 훈련을 이상 실시한다 여름 집중호우, 겨울 한파, 봄 산불, 가을 태풍 등 계절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취약계층 대피 지원 훈련을 포함한다.
- 과제3: 주민참여형 마을안전지도 제작 -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 취약지점, 대피경로, 대피소, 위험시

설을 표시한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한다 마을별 안전지도 제작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밀도를 높이며, 디지털 지도와 인쇄물을 동시 제작한다.

과제4: 마을안전지킴이 양성 및 장비 보급 - 마을당 이상의 마을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율방재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보급한다 기본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주민을 안전지킴이로 위촉하고, 활동수당과 상해보험을 지원하며, 비상키트와 안전장비를 보급한다.

과제5: 안전마을 인증제 및 네트워크 운영 - 우수 안전마을 인증제를 도입하고 마을 간 경험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안전마을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인증 마을에 우선 예산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마을 간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 단위 상시적 안전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체계성이 확보된다.

효과2: 형식적 훈련에서 실전형 훈련으로 전환되어 주민의 실제 재난 대응력이 향상된다.

효과3: 주민의 마을 안전 인식이 높아지고,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5. 예산

4년총액: 20억원, 연평균 5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0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광역 단위 기후재난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 실행체계를 보완하는 관계이며, 광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보가 마을 협의체로 신속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MS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안전마을 협의체가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담당하여 보호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명단을 공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MS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마을: 기후위기 대응의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안전마을 협력체계가 취약지역 우선 지원의 기반이 되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017 간단정책카드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주권 실현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입주민이 결정하는 주거 자치 모델 구축
- 가치2: 공유공간 기반 이웃관계 형성으로 1인가구 고립과 돌봄 공백 해소
- 가치3: 협동조합 소유 구조로 투기 방지와 지역자산화를 동시에 달성
- 가치4: 공동체주택에 에너지효율-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여 주거 부문 탄소감축에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7
- 정책명: 공동체주택 활성화
- 대영역: 사회
- 분야: 주거-교통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공동체주택,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유공간, 입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주거안정, 공동육아, 상호돌봄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지자체 공동체주택 지원조례를 정비하고 인정기준-인증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목표1 현장적용: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목표2: 토지-건물 지원, 설계-운영 컨설팅,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한다
목표2 현장적용: 입주 희망 그룹이 전문가 없이도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실용적 가이드를 보급한다
- 목표3: 4년간 공동체주택을 조성하고 입주민 1,000세대의 자립운영 모델을 정착시킨다
목표3 현장적용: 조성 후 최소 3년간 운영 안정화 지원을 병행하여 공동체 와해를 방지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입주희망자 그룹 형성 지원 - 공동체주택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희망자 매칭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룹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코하우징 체험 워크숍, 선배 입주민 멘토링, 그룹 형성 컨설팅을 연계 제공한다
- 과제2: 설계 - 건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공공토지 장기임대 우선공급과 설계비-건축비 저리 융자(금리 2% 이하)를 확대하여 초기 자본 부담을 경감한다
LH-SH공사 협력으로 유휴 공공토지를 확보하고 공유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며 건축 전문가 매칭을 지원한다

과제3: 입주민 협동조합 운영 지원 - 입주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체 운영규약 수립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원스톱 안내, 운영규약 표준모델 보급, 갈등조정 전문가 연계, 정기 운영 점검을 실시한다

과제4: 공동체주택 제도 기반 정비 - 공동체주택 지원조례를 제정-정비하고 인정기준 및 인증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동체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교육-컨설팅-인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과제5: 공동체주택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관내 공동체주택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단지가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연대 모델을 운영한다 공동체주택 네트워크 연례 포럼 개최, 연대 기여금 시스템 시범 도입, 타 지역 공동체주택과의 교류를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공동체주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입주 그룹 형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연간 이상 신규 그룹을 창출한다

효과2: 토지-자금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공유공간 중심의 공동체 친화적 건축을 유도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인다

효과3: 입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지속 운영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와해를 예방한다

5. 예산

4년총액: 100억원, 연평균 25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모델과 공동체주택 공공토지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정책의 상호보완 관계로 토지 확보 전략을 공유한다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빈집을 공동체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소규모 모델 연계로 토지 확보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자산화를 촉진한다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주거협동조합 기반 자산화 전략과 공동체주택 협동조합 소유 모델의 제도적 연계로 비투기적 주거 생태계를 구축한다

018 간단정책카드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0. 핵심가치

- 가치1: 공공임대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 기반 주택공급 다변화
- 가치2: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모델 구현
- 가치3: 청년과 1인가구 급증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기반 주거권 보장
- 가치4: 사회주택에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부문 탄소감축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8
- 정책명: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대영역: 사회
- 분야: 주거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주택, 저렴주택, 청년주거, 주거안정, 공공토지, 민관협력, 지속가능주거

2. 정책목표

- 목표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5,000호를 공급하여 공공임대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시세 80% 이하 저렴주택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목표2: 사회주택 사업자 이상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거사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사업자 인큐베이팅과 사회적금융 연계로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 규모를 확대한다
- 목표3: 입주자 커뮤니티 기반 자치운동을 지원하여 장기거주율 60%를 달성하고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사회주택을 단순 거주공간이 아닌 마을공동체 연계형 사회적 주거공간으로 전환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체계 구축 - 공공토지를 40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저렴주택 공급구조를 마련한다 유휴 공공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임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부지를 선정하며 건설비 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 과제2: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 및 역량강화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주택사업 진입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촉진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계획 컨설팅과 설계비를 지원하며 선진 사업자 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과제3: 사회적금융 연계 건설자금 조달 지원 - 사회주택 건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사회적금융기관과 연계하

여 안정적으로 조달한다 사회주택 전용 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기관 용자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임팩트 투자 유치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제4: 사회주택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업자 지원과 입주자 관리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 광역 단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주자 모집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업자 사업관리와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과제5: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연계 - 사회주택 입주자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입주 초기 공동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치회 운영비를 지원하며 인근 마을공동체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토지비 제거로 시세 70% 이하 임대료를 실현하고 4년간 5,000호 신규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효과2: 사업자 이상 육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주택 생태계를 조성한다

효과3: 사업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 사회적 자본의 주거분야 유입을 촉진한다

5. 예산

4년총액: 2,000억원, 연평균 50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45%, 시군구비 0%, 민간기타 15%

6. 연계정책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은 사회적경제 기반 주거모델로서 사업자 육성과 토지확보 전략을 공유한다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주거협동조합이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참여하며 자산화 전략과 사회적금융 활용 경로가 연동된다

ME06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주택 건설자금 조달과 보증기금 운영에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019 간단정책카드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0. 핵심가치

- 가치1: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가치2: 공동체 소유 공간 확보로 청년주거와 마을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 가치3: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을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 가치4: 빈집 자산화에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여 주거 에너지효율 향상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19
- 정책명: 빈집 공동체자산화
- 대영역: 사회
- 분야: 주거·교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빈집, 공동체자산화, 빈집뱅크, 마을재생, 협동조합, 주민자치, 공유공간, 지역자산, 주민참여, 빈집활용

2. 정책목표

- 목표1: 빈집뱅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빈집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GIS 기반 정보시스템으로 빈집의 위치와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실시간 관리한다
- 목표2: 공동체자산화 펀드를 조성하여 빈집의 매입과 리모델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금융과 민관 매칭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구축한다
- 목표3: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빈집을 청년주거와 공유공간과 마을카페 등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주도 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빈집뱅크 플랫폼 구축 - GIS 기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의 위치와 상태와 소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활용형과 철거형으로 등급 분류하여 소유자와 수요자 매칭 시스템을 운영한다
- 과제2: 공동체자산화 펀드 조성 - 빈집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한 전용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 자산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민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우선 지원하며 사회적금융과 연계한다
- 과제3: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 빈집의 수리와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주민 주도로 설

립하고 육성한다 집수리 기술교육과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과제4: 빈집 활용 공간 다각화 - 빈집을 청년주거와 공유작업실과 마을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한다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용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 설계 과정을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과제5: 제도 기반 정비와 소유자 인센티브 설계 - 빈집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소유자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제공 소유자에게 세제 감면과 관리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빈집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소유자 참여를 촉진하여 매칭 성공률을 높인다

효과2: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어 주민조직의 자산화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효과3: 주민이 직접 빈집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와 자립운동을 실현한다

5. 예산

4년총액: 60억원, 연평균 15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과 빈집 공동체자산화가 저렴주거 공급이라는 공통 목표로 연계된다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주거협동조합이 빈집을 활용하여 조합원 주거를 확보하는 연계 구조이다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빈집 활용이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 수단으로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

020 간단정책카드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0. 핵심가치

- 가치1: 투기를 배제하고 영구 저렴주택을 확보하여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가치2: 주민 공동소유 구조로 부동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 가치3: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주거복지 모델로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를 회복한다
- 가치4: 주거안정 협동조합이 친환경 주거를 추구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20
- 정책명: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 대영역: 사회
- 분야: 주거·교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주거협동조합, 자산화, 주거안정, 공동소유, 출자, CLT, 커뮤니티랜드트러스트, 사회적경제, 주민 자치, 영구저렴주택

2. 정책목표

- 목표1: 주거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합원 출자 기반의 공동소유 주택을 공급하고 협동조합 주거문화를 확산시킨다
- 목표2: 공동체토지신탁(CLT) 모델을 시범 도입하여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판매 가격 제한으로 영구 저렴주택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든다
- 목표3: 사회적금융 연계와 공공 출자 지분 참여를 통해 초기 자금 장벽을 낮추고 4년간 협동조합 설립과 200호 이상 협동조합 주택 공급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거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 주거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설립 컨설팅과 조합원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립 초기 운영비를 조합당 지원한다
- 과제2: 공동체토지신탁(CLT) 시범사업 추진 - 토지는 공동체가 영구 소유하고 건물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CLT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CLT 운영 모델을 연구하고 설계하여 공공토지 우선 임대와 연계하고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 과제3: 사회적금융 연계와 공공 출자 지원 확대 - 협동조합 주택의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사회적금융 연계

저리 대출과 공공자금 출자를 지원한다 사회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자금 출자와 지분 참여 모델을 설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과제4: 협동조합 주택 인허가 간소화와 제도 정비 -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인허가 특례와 세제 감면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정비한다 주거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과제5: 협동조합 주거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 -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협동조합 주거문화를 확산하고 조합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거협동조합 박람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조합 간 연대기금과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거협동조합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4년간 이상의 신규 조합 설립을 촉진한다

효과2: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영구 저렴주택 공급의 제도적 모델을 확립한다

효과3: 조합원의 초기 출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이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보한다

5. 예산

4년총액: 80억원, 연평균 2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30%,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과 협동조합 주택이 공공성 있는 주거 공급이라는 공통 목표로 연계된다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빈집을 협동조합이 매입하여 조합원 주거로 활용하는 자산화 연계 구조이다

ME06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협동조합 주택의 초기 자금 조달과 장기 금융 지원의 핵심 연계 정책이다

021 간단정책카드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스스로 주거환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질적 생활 개선을 실현한다
- 가치2: 골목길 단위의 현장밀착형 접근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
- 가치3: 정비 후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관리를 실현한다
- 가치4: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에너지효율 향상-그린리모델링-기후적응형 주거를 적극 반영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21
- 정책명: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 대영역: 사회
- 분야: 주거·교통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골목길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자율관리, 협력거버넌스, 현장중심, 지속가능성, 마을관리협동조합,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골목길 단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주거환경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참여 구조를 만든다
- 목표2: 노후 하수관과 골목길 포장과 조명과 안전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정비하여 체감도 높은 환경 개선을 실현한다
- 목표3: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자율관리 약속 체결을 통해 정비 성과를 주민이 스스로 유지하고 확산하는 지속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골목길 단위 주민협의체 구성과 계획 수립 - 골목길 10~20가구를 단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환경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골목길별 핵심 주민을 발굴하여 협의체를 조직하며 마을별 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과제2: 노후 골목길 생활 인프라 정비 - 노후 하수관과 상수도와 골목길 포장과 조명과 안전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주민협의체가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수관 교체와 포장 개선과 LED 조명과 CCTV 설치와 담장 정비를 시행한다

과제3: 주민 역량강화와 마을활동가 배치 - 주민협의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퍼실리테이터와 마을활동가를 배치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 리더 교육과 갈등조정 워크숍을 운영하고 마을간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과제4: 마을관리 자율체계 구축 - 골목길 자율청소와 관리 약속을 체결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 간 자율관리 약속을 체결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지원하며 행정과 주민의 협력 유지관리 체계를 설계한다

과제5: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정과 제도화 -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하며 예산 편성 근거를 확보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 만족도와 참여율이 높아진다

효과2: 보행 안전과 위생과 방범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일상적 생활 질이 향상된다

효과3: 주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 사업 종료 후에도 자율적인 마을관리가 가능해진다

5. 예산

4년총액: 100억원, 연평균 25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빈집 활용이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 자원으로 연계된다

MS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거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관리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협의체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자율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

022 간단정책카드 MS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0. 핵심가치

가치1: 버스 미운행 마을의 고령 주민에게 병원과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여 이동권을 실현한다

가치2: 마을버스 운영 대비 40%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택시업계에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가치3: 주민이 직접 운영을 협의하고 전담기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가치4: 수요응답형 교통에 디지털 호출-배차 시스템을 적용하여 교통 접근성을 혁신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2

정책명: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대영역: 사회

분야: 주거·교통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DRT, 100원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교통복지, 고령층이동권, 농촌교통, 현장중심,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목표1: 버스 미운행 마을에 전담 택시를 배치하고 주민 협의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 주민의 병원과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목표2: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협력 모델을 통해 미터요금 차액을 보전하고 택시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재정 효율성과 민간 수익을 동시에 확보한다

목표3: 4년간 마을 이상에 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간 5만 회 이용을 달성하며 주민 만족도 85점 이상의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마을교통 수요 조사와 운영 계획 수립 - 버스정류장 700m 이상 마을을 전수 조사하고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마을별 이동 패턴표를 작성하고 목적지와 시간대와 이용 빈도를 분석하여 우선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과제2: 주민 협의형 운영체계 구축 - 마을 주민 협의로 전담 택시 1대를 선정하고 운영 시간과 노선을 주민이 결정하는 체계를 만든다 마을회관 출발 기준으로 주 2~4회 장날 중심으로 운행하며 면 소재지 100원과 읍 소재지 버스요금을 부담한다

과제3: 지자체와 택시업계 협력체계 구축 - 택시조합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미터요금 차액을 지자체가 보전

하는 재정 구조를 설계한다 택시조합과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일지 제출과 정산과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제4: 서비스 범위 확대와 특화 서비스 연계 - 연차별로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고교생 안심택시 등 특화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범 10개에서 마을로 단계적 확대하고 야간 안심택시와 의료 방문 지원 등을 추가한다

과제5: 마을교통 지원 조례 제정과 운영 제도화 - 수요응답형 마을교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마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보조금 편성 근거와 택시 업계 협약 체계와 운영협의회 구성을 명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실제 수요에 기반한 운행 계획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확보한다

효과2: 주민이 직접 운영을 설계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효과3: 택시기사에게 월 이상의 안정적 추가수입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예산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9 빈집 공동체자산화: 빈집 활용 마을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종합 개선한다

MS23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교통 서비스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마을교통 운행 협의와 자율관리의 거버넌스 기반이 된다

023 간단정책카드 MS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0. 핵심가치

- 가치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이동제약 인구 500만명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가치2: 장애인 외출 포기 사유 1위가 교통수단 부족으로 사회참여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가치3: 읍면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도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교통 소외를 해소해야 한다
- 가치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디지털 호출-안내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동권을 보장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3

정책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영역: 사회

분야: 주거·교통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교통약자, 이동권, 장애인, 고령자, 특별교통수단, 수요응답형, 저상버스, 휠체어, 무장애, 이동지원,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 150%까지 확충하고 콜센터를 운영하여 휠체어 이용자와 거동불편 고령자의 평균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 목표2: 읍면동 단위 수요응답형 교통을 도입하여 월 10만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앱과 전화 예약을 병행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한다
- 목표3: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이고 무장애 정류장을 정비하여 일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 150%까지 확보하고 이동지원센터를 내실화한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동휠체어 충전 인프라를 설치한다
- 과제2: 수요응답형 마을교통 도입과 운영 - 읍면동 단위로 수요응답형 셔틀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한다 앱과 전화 예약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 과제3: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버스정류장을 무장애화하여 일상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이고 경사로와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휠체어 승하차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과제4: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 - 장애인과 고령자 당사자가 정책 설계와 서비스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용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당사자위원회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이용 경험 조사를 실시한다

과제5: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제정과 제도화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확충 의무와 운영비 편성 근거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평균 대기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이용 포기율을 낮추어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한다

효과2: 월 10만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과 시장 등 필수시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효과3: 교통약자가 일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 자립성을 높인다

5. 예산

4년총액: 80억원, 연평균 20억원

재원: 국비 40%, 광역비 25%, 기초비 3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수요응답형 마을교통 인프라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기반이 된다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무장애 골목길 정비가 교통약자의 정류장 접근성을 높인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 교통약자 이동 지원의 거버넌스 기반이 된다

024 간단정책카드 MS24 보행친화 마을조성

0. 핵심가치

- 가치1: 한국의 보행자 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로 주거지역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 가치2: 보행친화 환경이 이웃 교류와 골목 놀이와 상권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
- 가치3: 네덜란드 본엘프와 바르셀로나 수퍼블록 등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적용한다
- 가치4: 보행친화 마을조성이 자동차 의존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녹색교통 전환의 기반이 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4

정책명: 보행친화 마을조성

대영역: 사회

분야: 주거·교통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보행자우선도로, 생활도로, 교통안전, 교통정온화, 속도저감, 마을재생, 커뮤니티존, 보행친화환경, 주민참여, 본엘프,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주거지역 내 생활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하고 물리적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도로 내 교통사고를 30% 이상 감소시킨다
- 목표2: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리빙랩 방식의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4년간 지구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한다
- 목표3: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보행환경 만족도를 35%에서 70%로 높인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보행자우선도로 지구 지정과 조례 제정 - 기초의회가 주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를 지정한다 폭 12m 이하이고 보행량이 일 이상이며 주민 동의 70%를 확보한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5개에서 30개로 연차별 확대한다
- 과제2: 물리적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와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강제 저감한다 지구당 5~에 고원식 시설을 설치하고 차선을 4m에서 3m로 축소하며 볼라드와 플랜터로 거주자와 서비스 차량만 진입하도록 제한한다
- 과제3: 보행 공간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 - 주정차 공간을 재배치하고 보행로를 확장하여 걷기 좋은 골목 환경을 조성한다 보행로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고 벤치와 그늘막과 화분을 배치하며 막다른 골목을

활용하여 소규모 놀이터와 공터를 조성한다

과제4: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체계 구축 - 지구별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리빙랩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보행 환경 개선을 설계한다 지구별 주민계획단을 구성하여 3개월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구간 지도화와 시범 설치를 거쳐 마을총회에서 주민 동의 70%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과제5: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과 단속 강화 -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과 규칙을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문화를 전환한다 보행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CCTV와 이동식 단속을 강화하며 만족도와 교통 사고 감소율을 평가하여 환류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한속도와 단속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효과2: 도로 구조 자체가 과속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30% 이상 감소시킨다

효과3: 보행환경 만족도를 35%에서 70%로 높이고 이웃 교류와 골목 놀이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

5. 예산

4년총액: 30억원, 연평균 7억5천만원

재원: 국비 50%, 광역비 25%, 기초비 25%

6. 연계정책

MS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보행자우선도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직접 제공한다

MS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친화 마을조성이 상호 보완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의 거버넌스 기반이 된다

025 간단정책카드 MS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0. 핵심가치

가치1: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약화된 지역 공동체를 주민 주도로 복원하는 기초 단위이다

가치2: 주민모임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성장 경로를 제공한다

가치3: 180개 지자체에서 검증된 모델로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가치4: 주민모임 지원에 온라인 매칭-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임 활성화를 촉진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5

정책명: 주민모임 지원 사업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주민모임, 공모사업, 단계별지원, 씨앗새싹열매, 소액보조금, 자발적결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동체활성화, 주민주도,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목표1: 3인 이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에 단계별 소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연간 모임을 지원하고 참여 주민 7, 달성한다

목표2: 씨앗에서 새싹을 거쳐 열매로 이어지는 3단계 성장 체계를 구축하여 모임의 40%가 상위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목표3: 지원 종료 후에도 60% 이상의 모임이 2년 이상 지속되도록 자립 기반과 사회적경제 전환 경로를 제공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씨앗 - 새싹-열매 3단계 공모사업 운영 - 주민모임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3단계 공모사업을 설계하여 자연스러운 성장을 지원한다

과제2: 신청과 심사 체계 구축 - 3인 이상 주민모임이면 비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모 체계를 구축한다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주민대표 40%와 공무원 30%와 전문가 30%로 구성하며 씨앗 단계는 간소화 신청서 3~5쪽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다

과제3: 행정 지원과 정산 간소화 - 신청 설명회와 1대1 컨설팅과 온라인 정산 시스템으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씨앗 단계는 간이영수증과 활동 사진으로 정산하고 결과보고서를 3쪽으로 축소하며 이하 소액

지출은 간이영수증을 허용하고 센터가 모임당 정산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제4: 모임 역량 강화와 컨설팅 연계 -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모임의 역량 강화 교육과 분기별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전 설명회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모임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제5: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공유 - 돌봄과 환경과 문화와 교육 등 분야별 모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분야별 모임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주민모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과 우수 사례 공유를 추진하며 성과보고회와 우수 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모임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40%의 모임이 상위 단계로 성장한다

효과2: 비법인 허용과 간소화된 신청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한다

효과3: 행정 경험이 없는 주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연간 모임 지원이 가능해진다

5. 예산

4년총액: 68억원, 연평균 17억원

재원: 광역비 30%, 기초비 70%

6. 연계정책

MS26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모임의 활동 공간이 모임 지속률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이다

MS27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 주민모임 리더의 역량 강화가 모임의 성장과 자립을 촉진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모임 발굴과 홍보와 네트워크 운영의 거버넌스 기반이 된다

026 간단정책카드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0. 핵심가치

가치1: 임대료 상승과 재개발로부터 마을 공간을 보호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가치2: 주민이 직접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의사결정권과 운영권의 물적 토대를 마련한다

가치3: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산기반 복지를 실현한다

가치4: 공유공간 자산화에 에너지효율화와 친환경 리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6

정책명: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공동체자산화, 토지신탁CLT, 사회적소유, 마을공간, 젠트리피케이션방어, 협동조합, 주민자치, 공유경제, 장기임대, 자산기반복지

2. 정책목표

목표1: 마을회관과 카페와 공방과 돌봄센터 등 마을공유공간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공동소유하거나 장기임대권을 확보하여 임대료 상승과 재개발로 인한 공간 상실을 방지한다

목표2: 토지신탁(CLT)과 협동조합 소유와 장기임대권 확보 등 다양한 자산화 모델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교육과 기금을 통해 자산화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3: 4년간을 자산화하고 참여 주민 2,과 지속운영률 90%를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자산화 유형별 지원 체계 구축 - 토지신탁(CLT)과 협동조합 소유와 장기임대권 확보 등 공간의 특성에 맞는 자산화 모델을 지원한다 토지신탁 방식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99년 장기임대료 운영하며 협동조합 방식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1인 1표로 의사결정하고 장기임대 방식은 공공이나 민간과 10~3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과제2: 초기 자금 지원과 사회적금융 연계 - 자산화 기금과 공공토지 우선공급과 사회적금융을 연계하여 초기 자금 장벽을 해소한다 자산화 기금으로 매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유휴 공공토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양도하며 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저리대출(연 2~3%)을 연계한다

과제3: 운영 역량 강화와 전담 지원 체계 - 법인설립부터 신탁계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자산화 컨설팅으로 법인설립과 토지매입과 신탁계약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간지원조직에 전담팀 배치한다

과제4: 복합 공간과 수익모델 개발 - 카페와 공유오피스와 다목적홀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1층 카페(수익)와 2층 공유오피스(임대)와 3층 다목적홀의 복합 공간을 설계하고 마을주민과 외부 지지자의 월 1~ 후원 회원제를 운영하며 주민자치회와 마을교육과 돌봄 위탁사업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과제5: 공동체자산화 지원 조례 제정과 법제도 강화 - 기금과 세제와 공공토지 공급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체자산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조성과 세제 감면과 공공토지 우선공급을 명시하고 토지신탁법 개정을 추진하여 CLT 세제 혜택을 신설하며 공공자산 매각 시 자산화 조직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다양한 자산화 경로를 제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효과2: 초기 자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민 주도 자산화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효과3: 체계적인 역량 강화로 자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운영률 90%를 달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175억원, 연평균 43.8억원

재원: 국비 5%, 광역비 30%, 기초비 50%

6. 연계정책

MS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주민모임이 성장하여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자산화로 연계된다

ME03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자산화 공간이 마을기업의 안정적 활동 거점이 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공동체자산화의 거버넌스 기반과 공공위탁의 주체가 된다

027 간단정책카드 MS27 마을축제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가치2: 세대와 계층 간 교류를 촉진하여 고령화와 세대 단절 문제를 완화한다
- 가치3: 축제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돌봄과 안전과 교육 등 다른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된다
- 가치4: 마을축제에 디지털 홍보-참여-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제 접근성을 확대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7

정책명: 마을축제 활성화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마을축제, 주민기획, 공동체활성화, 지역문화, 주민참여, 세대통합, 마을정체성, 문화민주주의, 소규모축제, 일상문화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와 아파트단지와 골목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연 이상 발굴하고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기획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2: 세대와 계층 간 교류를 촉진하고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한다
- 목표3: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자연자원을 재발견하여 마을정체성을 확립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기획단 중심 축제 기획과 운영 지원 -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민기획단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 역할에 머문다 축제 6개월 전에 주민기획단을 공개모집하여 세대와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획 워크숍 6회(마을자원 탐색과 콘셉트 도출과 예산 편성)를 운영하며 주민총회 승인 절차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 과제2: 씨앗 - 새싹-열매 3단계 공모사업과 예산 지원 - 축제의 성장 단계에 맞는 차등 지원으로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한다
- 과제3: 마을자원 발굴과 세대 간 협업 콘텐츠 개발 - 마을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주민의 재능을 발굴하여 축제 콘텐츠로 개발한다 마을자원 조사와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주민의 재능(노래와 춤과 요리와 공예 등)을 발굴하여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어르신인 전통놀이와 청년의 공연과 아동의

전시 등 세대 간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과제4: 지역 예술가와 사회적경제조직 협업 체계 구축 - 지역 예술가와 사회적경제조직이 마을축제에 참여하여 콘텐츠의 질과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매칭하고 출연료를 별도 지원하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먹거리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마을기금에 환원하며 청년 예술가에게 마을축제 무대를 제공한다

과제5: 축제 네트워크 구축과 자립 운영 기반 확보 - 축제 간 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촉진하고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는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주민기획단 교류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축제 정보와 후기와 영상을 공유하며 후원 회원제와 부스 수익금과 굿즈 판매 등 자립 수익구조를 확립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이 문화기획 역량을 갖추고 마을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를 만든다

효과2: 단계별 성장 경로가 제공되어 축제의 지속개최율이 70%로 향상된다

효과3: 마을정체성이 확립되고 세대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공동체 결속력이 높아진다

5. 예산

4년총액: 84억원, 연평균 21억원

재원: 광역비 20%, 기초비 7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S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주민모임에서 축적된 관계와 역량이 마을축제 기획의 기초가 된다

MC19 마을예술교육 활성화: 마을예술교육을 통해 양성된 주민 예술가가 축제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축제의 거버넌스 기반이자 네트워크 확산의 주체가 된다

028 간단정책카드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0. 핵심가치

- 가치1: 핵가족화로 소멸된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의도적으로 회복한다
- 가치2: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교환하여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 가치3: 어르신을 돌봄 대상이 아닌 마을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여 고령친화 마을을 조성한다
- 가치4: 세대통합에 디지털 기기 교육과 온라인 소통을 포함하여 세대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28

정책명: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세대통합, 세대간교류, 1·3세대프로그램, 세대갈등완화, 상호돌봄, 지혜전수, 청년노인협력, 핵가족화극복, 고령친화마을, 전세대공동체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연 이상 운영하여 전 세대 간 정기적 교류 활동을 활성화한다
- 목표2: 경로당-어린이집 결연과 청년-노인 멘토링 등 다양한 세대 조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목표3: 4년간 참여자 6,과 세대 간 이해도 30%p 향상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다양한 세대 조합 프로그램 운영 - 1세대와 3세대 교류부터 청년-노인 협력까지 다양한 세대 조합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세대와 3세대 프로그램(텃밭 가꾸기와 전래놀이와 손주 결연)과 청년-노인 프로그램(디지털 교육과 진로 멘토링과 세대 토크)과 전 세대 프로그램(마을축제 공동 기획과 세대별 재능 발표회)을 읍면동별로 연 이상 운영한다
- 과제2: 경로당 - 어린이집 결연과 세대통합 거점 조성 -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세대 간 일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점을 조성한다 경로당-어린이집 결연으로 공유 공간과 일과 중 교류 활동을 운영하고 학교-경로당 결연으로 상호 방문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대통합센터에 전 세대가 이용하는 카페와 도서관과 공방을 설치한다
- 과제3: 세대통합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전문 지원 -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다 양성 교육(세대 이해와 갈등 조정과 프로그램 기획)을 실시하고 중장년 활동가를 우

선 선발하여 월 50만~ 활동비를 지급하며 세대 조합별과 주제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한다

과제4: 세대 간 상호 돌봄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일상적 상호 돌봄과 안부 확인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손주 결연(독거 어르신-인근 아동 가족 정기 교류)과 시간은행(세대 간 재능과 돌봄 교환 시스템)과 긴급 돌봄(참여자 간 연락망과 안부 확인 체계)을 운영한다

과제5: 세대통합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 세대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통합 문화를 확산한다 세대공감 캠페인(세대 갈등 이슈 공론장 운영)과 세대통합 주간(전국 동시 프로그램 개최)과 학교 교육 연계(창의적 체험활동 경로당 방문)를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세대 간 이해도가 30%p 향상되고 정기 참여율이 60%에 달한다

효과2: 4년간 결연을 확보하고 세대 간 일상적 만남이 제도화된다

효과3: 4년간 퍼실리테이터 양성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된다

5. 예산

4년총액: 60억원, 연평균 15억원

재원: 광역비 30%, 기초비 60%, 국비 10%

6. 연계정책

MS27 마을축제 활성화: 마을축제가 전 세대 참여의 장이 되어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MS03 초고령사회 마을돌봄 체계: 세대 간 상호 돌봄 네트워크가 마을돌봄 체계의 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거버넌스와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된다

029 간단정책카드 MS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0. 핵심가치

- 가치1: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마을 단위 사회통합이 시급하다
- 가치2: 인구감소 시대에 이주민은 지역활력의 핵심 구성원이다
- 가치3: 일방적 동화가 아닌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 가치4: 다문화 포용에 다국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29
- 정책명: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 대영역: 사회
- 분야: 공동체·갈등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마을공동체, 상호문화주의,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차별예방, 주민참여, 마을활동가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단위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조례를 제정하여 이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목표2: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차별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포용적 마을문화를 확산한다
- 목표3: 4년간 포용마을을 지정하고 이주민 마을활동가 양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다문화 포용마을 조례 제정과 제도 기반 구축 - 광역 단위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조례를 제정하여 이주민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주민 마을공동체 참여권 보장과 문화다양성 증진과 차별예방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 포용마을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청회와 이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
- 과제2: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일방적 동화가 아닌 쌍방향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한다 상호문화 교육(선주민의 이주민 문화 이해와 이주민의 한국 문화 체험)과 다문화 마을축제와 문화교류 행사를 지원하며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과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 과제3: 이주민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참여 활성화 - 이주민이 마을공동체의 적극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가를 양성하고 참여를 확대한다 이주민 마을활동가 양성하여 포용마을에 배치하고 주민자치회에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다문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과제4: 차별예방 체계 구축과 갈등조정 기능 강화 - 마을 단위 차별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갈등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문화 차별예방 교육을 주민자치회와 마을 관련 기관에 의무화하고 마을 갈등조정위원회에 다문화 전문위원을 배치하며 차별 신고와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과제5: 다문화 포용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확산 - 포용마을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포용마을 교류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다국어 지원)에서 사례를 공유하며 우수 포용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모델을 확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이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포용마을 지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효과2: 연 5만명이 상호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을 단위 포용 문화가 확산된다

효과3: 이주민 마을활동 참여율이 5%에서 30%로 향상되고 이주민 주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국비 40%, 광역비 35%, 기초비 20%, 민간 5%

6. 연계정책

MS28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대통합과 다문화 포용이 결합하여 전 세대와 전 문화 배경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MC07 마을미디어 활성화: 다국어 마을미디어가 이주민의 정보 접근과 의견 표현의 통로가 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주민자치회의 이주민 참여 확대가 포용마을 거버넌스의 기반이 된다

030 간단정책카드 MS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0. 핵심가치

가치1: 마을리더의 고령화와 고정화를 극복하고 세대 교체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속성을 확보한다

가치2: 자원봉사자가 마을리더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가치3: 번아웃 예방과 지속 지원 체계로 마을리더의 장기 활동을 보장한다

가치4: 마을리더에게 기후-환경 역량을 부여하여 마을 차원 기후대응 리더십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30

정책명: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마을리더, 주민리더, 자원봉사, 역량강화, 리더십교육, 퍼실리테이션, 주민주도, 공동체조직화, 활동가양성, 사회자본

2. 정책목표

목표1: 읍면동별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연 이상의 마을리더를 배출하고 활동률 80%를 달성한다

목표2: 자원봉사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계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을 15%에서 35%로 향상시킨다

목표3: 마을리더가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와 지속 지원 체계로 장기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합쳐의 통합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멘토링을 연계한다 기초과정(리더십과 퍼실리테이션과 사업기획 기초)과 심화과정(실습 프로젝트와 갈등조정과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하고 수료 후 6개월간 선배 리더 1대1 멘토링을 제공한다

과제2: 자원봉사와 마을공동체 연계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을리더 성장을 지원한다 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축제와 텃밭과 돌봄 등 정기 봉사)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봉사자에서 마을리더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체계화한다

과제3: 마을리더 네트워크 운영과 지속 지원 - 마을리더 간 상호 학습과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정기 모임(사례 공유와 상호 지원)과 분기별 슈퍼비전(전문가 자문과 번아웃 예방)과 휴식 프로그램(힐링 워크숍과 재충전)을 제공한다

과제4: 마을리더 활동 기반 조성 - 마을리더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과 지원 인프라를 조성한다 읍면동별 마을리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교육과 활동과 자원봉사 통합 관리)을 구축하며 법률과 회계 무료 자문단을 운영한다

과제5: 마을리더 문화 확산과 다양성 확대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구층의 마을리더 참여를 확대한다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마을리더의 날을 지정하며 청년 마을리더 별도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여성과 이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연 이상의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수료 후 활동률이 35%에서 80%로 향상된다

효과2: 자원봉사 참여율이 15%에서 35%로 향상되고 자원봉사에서 마을리더로의 전환이 활성화된다

효과3: 마을리더의 활동 지속률이 30%p 향상되고 소진 없이 장기 활동이 가능해진다

5. 예산

4년총액: 38억원, 연평균 9.5억원

재원: 기초비 60%, 광역비 30%, 국비 10%

6. 연계정책

MS25 주민모임 활성화: 주민모임에서 발굴된 리더가 마을리더 양성 과정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연계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양성된 마을리더가 주민자치회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며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MG07 중간지원조직 혁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마을리더 양성의 실행 주체로 협력한다

031 간단정책카드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0. 핵심가치

가치1: 마을공동체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여 공동체를 보전한다

가치2: 행정 산하가 아닌 독립적 조정기구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가치3: 갈등 1건당 소송 비용 약 5천만원을 조정 비용 500만원으로 90% 절감한다

가치4: 갈등조정이 환경갈등 해결에 활용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31

정책명: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광역의원

핵심키워드: 갈등조정위원회, 주민조정가, 이웃분쟁조정, 독립성, 공정성, 조정중재, 참여민주주의, 갈등예방, 갈등관리, 마을갈등

2. 정책목표

목표1: 광역 단위 독립적이고 공정한 마을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간 갈등과 광역 정책 갈등과 이웃 분쟁을 법적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한다

목표2: 주민조정가를 양성하여 읍면동에 배치하고 마을 단위 갈등 예방과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목표3: 4년간 연 20건 이상 조정과 70% 이상 성공률을 달성하고 갈등 비용을 절감하며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광역 갈등조정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 구축 - 마을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갈등 예방과 조정과 중재 절차를 명문화하며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한다

과제2: 독립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와 전담 사무국 운영 -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5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사무국을 운영한다 주민과 전문가(변호사와 갈등조정 전문가)와 공무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호선하며 전담 사무국(5인 이상)을 설치하여 접수와 조정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과제3: 주민조정가 양성과 읍면동 배치 - 마을 단위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조정가를 양성하

고 배치한다 연 4년간 총 주민조정가를 양성하되 2개월 교육과정(갈등관리와 의사소통과 조정기법)을 제공하고 읍면동 단위에 배치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과제4: 갈등 예방과 조기개입 체계 구축 - 갈등이 첨예화되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 광역 사업 대상으로 갈등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기 조정 의뢰 권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갈등 모니터링과 사전 경보 체계를 운영한다

과제5: 갈등조정 문화 확산과 기초 단위 확대 - 갈등조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모델을 기초 단위로 확대한다
다 갈등조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조정 사례집을 발간하며 기초단체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고 조정 결과의 공신력이 높아진다

효과2: 연 20건 이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70% 이상의 성공률을 달성한다

효과3: 간단한 이웃 분쟁이 주민 자율 조정으로 해결되고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5. 예산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재원: 광역비 80%, 기초비 15%, 민간 5%

6. 연계정책

MS32 마을공동체회복프로그램: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 이후 공동체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MG10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한다

MC21 마을공론장: 마을공론장이 갈등의 사전 예방과 대화 촉진의 기반이 된다

032 간단정책카드 MS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0. 핵심가치

- 가치1: 갈등 예방이 사후 조정보다 비용을 5~10배 절감한다
- 가치2: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 기반을 넓힌다
- 가치3: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관협치를 강화한다
- 가치4: 갈등예방에 온라인 소통을 활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S32
- 정책명: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 대영역: 사회
- 분야: 공동체·갈등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갈등예방, 갈등관리교육, 퍼실리테이션, 평화교육, 비폭력대화, 공동체회복력, 주민역량강화, 갈등전환, 조기개입, 예방적대화

2. 정책목표

- 목표1: 주민과 활동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와 심화와 전문가 3단계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목표2: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갈등 대응 역량을 표준화한다
- 목표3: 갈등 징후 모니터링과 예방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갈등 발생률을 20% 감소시키고 조기 해결률을 70%까지 향상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기초와 심화와 전문가 3단계 갈등예방 교육 프로그램 - 주민과 활동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갈등관리 교육을 운영한다 기초 과정은 갈등 이해와 비폭력 대화와 관계 회복을 다루고 심화 과정은 퍼실리테이션과 갈등 조정 기법을 훈련하며 전문가 과정은 조정자 양성과 복잡한 갈등 조정을 실습한다
- 과제2: 갈등관리 매뉴얼 3종 개발과 보급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마을공동체 갈등관리 매뉴얼(갈등 유형별 체크리스트)과 주민자치회 갈등관리 매뉴얼(투명성 확보 방법)을 개발하고 갈등관리 툴킷 100세트(퍼실리테이션 도구)를 배포한다
- 과제3: 갈등 조기경보와 예방적 대화 시스템 구축 - 갈등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체계

를 구축한다 분기별 갈등 징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는 예방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갈등 핫라인(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평일 운영한다

과제4: 갈등관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인증제 운영 -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가 풀 구성(조정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하고 분기별 네트워크 모임과 슈퍼비전과 워크숍을 운영하며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교육과 실습 10건)를 도입한다

과제5: 갈등예방 문화 확산과 청소년 평화교육 -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를 넘어 평화교육을 확대한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발표회와 갈등관리의 날을 지정하며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는 청소년 평화교육을 확대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연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갈등 대응 자신감이 95% 이상 향상된다

효과2: 매뉴얼 보급률이 20%에서 80%로 향상되고 갈등 대응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효과3: 갈등 발생률이 20% 감소하고 조기 해결률이 40%에서 70%로 향상된다

5. 예산

4년총액: 21억원, 연평균 5.25억원

재원: 광역비 70%, 국비 30%

6. 연계정책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설치: 갈등예방 교육 수요자가 갈등조정위원회의 주민조정가로 활동할 수 있다

MS33 마을공동체회복프로그램: 갈등 발생 후 공동체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예방 교육이 연계된다

MC21 마을공론장: 공론장이 갈등의 사전 예방과 건설적 대화의 장으로 기능한다

033 간단정책카드 MS33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기돌봄 프로세스로 주민주권을 실현한다
- 가치2: 갈등을 공동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강화한다
- 가치3: 법적 소송 대비 비용을 5~10배 절감하고 갈등 재발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 가치4: 회복적 정의가 환경피해 회복에 적용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S33

정책명: 회복적 정의 마을실천

대영역: 사회

분야: 공동체·갈등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회복적정의, 서클, 대화모임, 관계회복, 갈등전환, 비폭력대화, 공동체치유, 자기돌봄, 진행자양성, 조정자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 단위 회복적 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회복적 정의 센터를 설치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목표2: 회복적 서클과 대화모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의 일상적 관계 형성과 갈등의 회복적 해결을 지원한다
- 목표3: 서클 진행자와 대화모임 조정자를 양성하여 주민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회복적 정의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 구축 - 기초 단위 회복적 정의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와 센터와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에 목적과 위원회 구성과 센터 설치와 예산 근거를 명시하고 회복적 정의 센터(직원)를 설치하며 회복적 정의 가이드북(A4 100페이지와 2000부)을 발간한다
- 과제2: 회복적 서클 운영을 통한 일상적 관계 형성 -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회복적 서클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동체 구축 서클과 돌봄 서클과 문제 해결 서클과 축하 서클 등 4가지 유형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상 실시한다
- 과제3: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한 갈등의 회복적 해결 - 실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을 목표로 대화모임을 운영한다 사전 모임(개별 면담)과 본 모임(2~대면 대화)과 사후 모임의 3단계로 진

행하며 마을공동체 내부와 이웃 간과 세대 간과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을 대상으로 연 50건 이상 운영한다

과제4: 서클 진행자와 대화모임 조정자의 단계별 양성 - 주민이 직접 서클과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3단계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 과정(과 외)은 서클 진행을 다루고 심화 과정(과 외)은 대화모임 조정을 훈련하며 전문가 과정(과 외)은 슈퍼비전 역량을 강화한다

과제5: 회복적 정의 문화 확산과 기관 연계 네트워크 - 회복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인식 개선 캠페인과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회복적 정의의 날을 지정하며 학교와 마을과 경찰서와 보호관찰소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회복적 정의의 제도적 지속성이 확보되고 예산과 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효과2: 주민 간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 발생 시 회복적 해결이 가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효과3: 갈등의 50% 이상이 회복적으로 해결되고 재발률이 60%에서 30%로 감소한다

5. 예산

4년총액: 21억원, 연평균 5.25억원

재원: 기초비 80%, 광역비 20%

6. 연계정책

MS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설치: 갈등조정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연계하여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MS32 마을갈등예방프로그램: 갈등예방 교육과 회복적 서클이 결합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MC21 마을공론장: 공론장이 회복적 서클의 일상적 대화 공간으로 기능하여 갈등 예방의 토양을 형성한다

034 간단정책카드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마을 네트워크형 교육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
- 가치2: 교육청-지자체-학교-마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 주민자치를 실현
- 가치3: 마을교육공동체로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소멸에 대응
- 가치4: 마을교육공동체에 환경-생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통해 생태시민 양성에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1
- 정책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교육감
- 핵심키워드: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학교-마을연계, 교육생태계, 마을학교, 교육거버넌스, 마을교육과정, 배움터, 교육주민자치, 학습생태계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단위로 교육자치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1:1 매칭펀드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목표2: 기초 단위로 이상 마을학교를 설치하고 연 학생이 마을교육과정에 참여하며 학교별 이상 마을 자원 활용 수업을 운영한다.
- 목표3: 연 이상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이상 운영하여 학생의 마을 소속감 80% 이상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교육자치협력지구 협약 및 거버넌스 구축 - 교육청과 지자체가 4년 단위 교육자치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고 1:1 매칭펀드를 조성하며 교육자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청-지자체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협약 내용을 설계하고 광역-기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분기별 협의회를 운영한다.
- 과제2: 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 마을 유휴 공간을 마을학교로 리모델링하고 생태-예술-요리-미디어-목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자치회가 기획에 참여한다.

과제3: 학교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이상 마을 자원 활용 수업을 운영하고 마을 현장학습-마을 강사 초청-마을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학교-마을 연계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교육과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한다.

과제4: 마을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마을의 장인-예술가-활동가-전문가를 발굴하여 마을교사로 양성하고 마을교사 인증제를 도입하며 우수 마을교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제5: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 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를 개최하고 학부모-교사 대상 설명회-연수를 학교별 실시하며 사례집 발간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학교 성과를 가시화하여 학부모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학교 교사의 연수와 업무 경감을 병행하여 참여 동기를 강화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교육청과 지자체의 실질적 협력 구조를 확보하고 안정적 재원으로 정책 지속성을 보장한다.

효과2: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공간과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

효과3: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학생이 자신의 마을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경험을 확대한다.

5. 예산

4년총액: 85억원, 연평균 21.25억원

재원: 교육청 5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6. 연계정책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확장한다.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마을학교와 마을학당이 상호 보완하여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아우르는 마을 단위 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

MC06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마을도서관이 마을학교의 학습 거점이 되어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035 간단정책카드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0. 핵심가치

- 가치1: 교과서를 넘어 마을에서 배우는 경험으로 학생의 학습 참여도와 마을 소속감을 향상
- 가치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 성장을 촉진
- 가치3: 학교-마을 협력으로 마을 활력을 증진하고 교육 기반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
- 가치4: 학교-마을 연계에 디지털 학습환경과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2
- 정책명: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교육감
- 핵심키워드: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재구성, 마을교육과정, 마을자원지도, 지역화교재, 교사역량, 장소기반교육, 앎과삶연계, 프로젝트학습, 마을현장학습,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지역 특성별(농촌-도시-역사문화-생태-산업)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모델 5개를 개발하고 기초 단위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여 교사의 수업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2: 읍면동별 마을 자원 지도 10개를 제작하고 교사 연수 누적 1, 양성하여 마을 자원 활용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확보한다.
- 목표3: 학교-마을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하고 학교에서 이상 연계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 학습 참여도 80% 이상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학교 - 마을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 - 지역 특성별 모델(농촌형-도시형-역사문화형-생태형-산업형)을 개발하고 각 모델에 교육과정 연계 방안-마을 자원 목록-수업 방법-학습 목표-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 과제2: 마을 자원 지도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읍면동별 마을 자원을 4유형(공간-사람-이야기-문제)으로 조사하여 마을 자원 지도 10개를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 주민과 마을활동가가 참여하여 자원을 조사하고 온라인과 종이 지도를 병행 제작하며 매년 업데이트하여 교사가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제3: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 마을 자원 활용 수업 설계(기초)와 프로젝트 학습-현장학습 기획(심화)과

학교 전체 교육과정 재구성(전문가)으로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학습공동체를 조직한다.

과제4: 학교 - 코디네이터가 학교와 마을을 매칭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며 마을 강사 초청-마을 현장학습-마을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과제5: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학교-마을 연계 수업 우수 사례를 연 20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발표회(참가)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간 교류를 촉진하며 우수 교사와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교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화 교재로 학생이 자기 마을을 배우는 기회를 확대한다.

효과2: 교사가 마을 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마을 주민이 자원 조사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효과3: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확산한다.

5. 예산

4년총액: 48억원, 연평균 12억원

재원: 교육청 70%, 시군구비 30%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상위 정책 기반으로 마을학교-마을교사-교육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통합 구축한다.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학당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정규 교육과 비정규 학습이 상호 보완하는 마을 단위 학습 생태계를 형성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마을교육에 참여하고 마을 자원 발굴과 교육 자원 연결에 주민자치 역량을 활용한다.

036 간단정책카드 MC03 마을학당 설치-운영

0. 핵심가치

- 가치1: 평생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동 취약계층의 학습 기회를 보장
- 가치2: 주민을 학습 대상에서 학습 주체로 전환하여 자존감과 자긍심을 향상
- 가치3: 학습이 관계로 관계가 공동체로 발전하는 마을학습공동체 형성-확산
- 가치4: 마을학당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과 디지털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접근성을 확대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03

정책명: 마을학당 설치-운영

대영역: 문화

분야: 교육-학습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마을학당, 평생학습, 마을강사, 행복학습센터, 마을학습공동체, 읍면동학습거점, 주민주도학습, 숨은고수, 주민배움터, 평생학습도시,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 단위로 마을학당(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 목표2: 마을 주민 중 재능 있는 사람을 마을강사(숨은고수)로 양성하여(누적)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는 주민 주도 학습문화를 확산한다.
- 목표3: 마을학당 기반 주민 참여 연 10,과 학습모임 50개를 달성하여 학습-관계-실천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학습공동체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학당 20개소 설치 - 주민 마을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운영위원회가 공간 관리와 강좌 편성과 마을강사 섭외를 자치적으로 수행한다.
- 과제2: 마을강사(숨은고수) 100명 양성 - 마을 주민 중 요리-공예-원예-건강-디지털-인문 등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초과정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강사 활동비를 시간당 3~ 지급한다 읍면동 이장-통장-주민자치회를 통해 숨은고수를 추천받고 양성 교육에서 교수법-소통-프로그램 기획을 교육하며 마을강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기별 모임-멘토링을 실시한다.
- 과제3: 주민 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 - 마을학당당 연 강좌(생활문화-건강-디지털-인문-기술)를 운영하고 무료 또는 저렴한 수강료(재료비 실비)로 운영하며 저소득층-노인-장애인의 수강료를 면제한다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전-오후-저녁-주말 시간대를 다양화하며 강좌 종료 후 학습모임 형성을 지원한다.

과제4: 마을학당 네트워크 운영 - 마을학당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기별 모임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관-마을학당 간 2단계 평생학습 생태계를 연계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학당별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주민이 가까운 마을학당의 프로그램을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학당 간 마을강사 교류를 촉진한다.

과제5: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기초지자체 마을학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마을학당 인증제를 시행하며 부터 주민 자립 모델로 전환한다 조례에 마을학당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인증 기준(운영위원회 구성-프로그램 수·참여 인원)을 충족한 마을학당에 예산을 우대하며 수강료 수익과 마을기업 운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 생활권 내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 거점을 확보하고 주민 운영위원회의 자치적 운영으로 주민 주도성을 확보한다.

효과2: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강사의 활동이 소득과 보람을 동시에 창출한다.

효과3: 주민 욕구 기반 프로그램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모임으로 강좌 종료 후에도 학습이 지속되며 관계가 확장된다.

5. 예산

4년총액: 38억원, 연평균 9.5억원

재원: 시군구비 80%, 교육청 20%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학당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평생학습 거점으로 기능하며 마을학교와 마을학당이 학령기와 성인 학습을 상호 보완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

MC06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마을도서관과 마을학당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독서-문화-학습이 통합된 마을 학습-문화 거점을 형성한다.

MS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마을강사(숨은고수)가 마을리더로 성장하고 학습모임이 마을 자원봉사와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되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037 간단정책카드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청소년을 마을의 현재이자 미래 주민으로서 마을만들기의 동등한 주체로 세움
- 가치2: 실제 의사결정 참여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의 실질적 형성
- 가치3: 학교-마을 연계를 수동적 체험에서 청소년 주도적 참여로 심화
- 가치4: 청소년 자치활동에 환경-기후 의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가 핵심 목표는 아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04

정책명: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대영역: 문화

분야: 교육-학습

추진주체: 교육감

핵심키워드: 청소년자치, 청소년참여, 마을활동,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자치회, 마을기획, 지역사회참여,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주도

2. 정책목표

- 목표1: 학생자치회에 예산과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여 기초 전체 학교의 80%에서 학생자치를 실질화한다.
- 목표2: 기초 단위 청소년의회(위원)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예산 심의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 제안 정책 채택률 30%를 달성한다.
- 목표3: 청소년 주도 마을 프로젝트를 연 팀 지원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 6,(참여율 10%)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학교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 교육감이 학생자치 활성화 지침을 발령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별 자치 예산을 교부하며 학교장 연수를 통해 학생자치 지원 의지를 확보한다.
- 과제2: 기초 단위 청소년의회 구축 - 운영 - 기초 단위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초등 고학년~대학생) 정기회의와 분과 활동과 정책 제안을 운영하며 청소년의회 코디네이터(정규직)를 배치한다 청소년총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 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 등 실제 의회 방식을 적용하며 지자체 예산 심의와 정책 제안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 과제3: 청소년 주도 마을 프로젝트 지원 - 연 팀을 공모로 선정하여 팀당 지원하고 멘토 배정과 공간 지원과 성과 공유회를 제공하며 교통안전-환경-문화-복지-공간 등 주제를 자율로 선정한다 청소년이 직접 마

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기획하여 공모에 지원하며 성인 멘토는 조력자 역할에 한정하고 청소년이 실행과 평가를 주도한다.

과제4: 청소년 - 주민 세대통합 프로그램 - 청소년-주민 마을총회를 공동 개최하고 청소년-주민 협력 프로젝트를 연 지원하며 청소년의회-주민자치회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청소년과 성인 주민이 함께 마을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며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한다.

과제5: 청소년 참여 생태계 구축 - 청소년 참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예산 의무 편성) 학교 간-청소년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조례에 청소년의회 설치-운영과 학생자치 지원과 청소년 참여 예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센터가 코디네이션과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학생자치회가 형식적 조직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전환되고 학생이 학교와 마을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다.

효과2: 청소년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대한 심의-제안 경험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체득한다.

효과3: 청소년이 마을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형성하고 프로젝트 역량을 키운다.

5. 예산

4년총액: 25.3억원, 연평균 6.3억원

재원: 교육청 60%,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청소년 참여 축을 형성하며 마을학교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가 상호 연계하여 청소년의 마을 학습-실천 경험을 확대한다.

MC02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학교-마을 연계 수업과 청소년 주도 마을 프로젝트가 연계하여 수동적 체험 학습을 넘어 청소년 주도 문제해결형 학습으로 발전한다.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청소년-주민 마을총회 공동 개최와 청소년의회-주민자치회 간담회가 마을 거버넌스에서 세대 대표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

038 간단정책카드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읍면동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학습 접근성 격차를 해소
- 가치2: 학습-실천 연계로 마을 문제 발견-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기반을 조성
- 가치3: 광역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학습공동체 성장 기반을 확보
- 가치4: 평생학습 체계에 환경-기후 주제를 포함하고 주민의 기후위기 인식과 실천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5
- 정책명: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평생학습도시, 마을배움터, 학습동아리, 평생교육진흥원, 주민자치학습, 평생학습네트워크, 마을학습공동체, 생애주기별학습, 학습권보장, UNESCO학습도시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평생교육진흥원-기초 평생학습센터-마을배움터의 3단계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평생학습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 목표2: 읍면동 50% 마을배움터를 설치하고 학습동아리 3,000개를 조직하여 주민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실천 연계를 강화한다.
- 목표3: 기초 80%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 참여율 50%를 달성하고 UNESCO 학습도시 가입으로 국제 수준의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마을학습지원팀을 신설하고 광역 평생학습진흥위원회(위원장 부시장급, 위원)를 구성하며 5개년 광역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진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진흥원이 기초 평생학습센터와 마을배움터를 지원하며 광역 학습동아리 연합회(이상)를 조직한다.
- 과제2: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마을배움터 설치 - 기초 80%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미지정 기초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읍면동 50% 마을배움터를 설치한다
- 과제3: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연계 - 주민당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광역 3,000개를 달성하고 학

습동아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하는 학습-실천 연계를 지원한다

과제4: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및 소외계층 지원 - 부모교육(영유아기)-청소년자치학습-청년취창업-중장년생 애 전환-노인건강참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소외계층(문해교육-장애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제5: UNESCO 학습도시 가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광역 1개와 기초 이상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국제 학습도시 교류를 활성화한다 가입 희망 도시에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하고 국제 학습도시 회의(ICLC)에 참가하며 해외 학습도시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광역-기초-마을의 3단계 체계를 확립하고 평생학습과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가 통합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효과2: 기초 전역에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읍면동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한다.

효과3: 학습동아리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학습이 마을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580억원, 연평균 145억원

재원: 국비 1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평생학습 체계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인 학습 축을 담당하며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 평생학습이 생애 전 과정의 학습 생태계를 형성한다.

MC04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 학습과 청소년 동아리가 평생학습 체계에 포함되어 청소년기부터 주민 주도 학습문화를 체험하고 마을 참여로 연결된다.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마을만들기-주민자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039 간단정책카드 MC06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생활밀착형 독서 인프라를 강화하여 주민 근거리 문화 접근권을 보장
- 가치2: 작은도서관을 독서동아리-마을교육-주민자치가 연결되는 문화 사랑방으로 육성
- 가치3: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로 장서-프로그램-전문인력을 공유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 가치4: 마을도서관에 환경-기후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주민 인식 제고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6
- 정책명: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독서문화, 마을공동체, 공공도서관연계, 순회사서, 독서동아리, 마을배움터, 책나눔, 생활밀착형문화공간

2. 정책목표

- 목표1: 전국 6,800여 개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휴폐관을 정상화하며 문화소외지역에 신규 설치를 확대한다.
- 목표2: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연계율 80%를 달성하고 순회사서를 배치하여 장서-프로그램-전문인력을 공유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3: 독서동아리를 관당 3개로 확대하고 마을교육-주민자치와 연계하여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 문화 사랑방으로 육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 및 운영 내실화 - 4년간 기초당 평균를 신규 설치하되 문화소외지역을 우선하고 기존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선과 장서 확충을 지원하며 휴폐관을 정상화하거나 등록을 말소 정리한다
- 과제2: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연계 체계 구축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시스템 참여율을 80%로 확대하고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재배치와 신간 순회 전시를 체계화하며 작은도서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 과제3: 순회사서 배치 및 운영자 역량 강화 - 작은도서관 30개당 순회사서 배치하고 운영자 정기 교육(기초

-심화 과정)을 실시하며 운영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순회사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하며 장서 관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자 실무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과제4: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연계 - 작은도서관 거점 독서동아리를 관당 3개로 확대하고 마을 책 읽어주기와 마을 역사 아카이빙과 세대통합 독서 프로그램 등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동아리당 연 지원하고 마을 책 축제를 개최하며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자발성을 핵심으로 과도한 행정 개입을 지양한다.

과제5: 책나눔 문화 확산 및 제도화 - 책나눔 주간을 운영하여 연 5만권 기증을 목표로 하고 작은 책 교환 상자(Little Free Library 모델)를 설치 지원하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기업 CSR과 연계하여 도서 기증을 유도하고 주민 자발 설치형 책 교환 상자에 개당 지원하며 조례에 예산 의무 편성을 명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작은도서관 양적 확충과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효과2: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품질이 향상되어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

효과3: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5. 예산

4년총액: 62억원, 연평균 15.5억원

재원: 국비 1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작은도서관이 마을배움터 기능을 겸하여 평생학습 인프라의 읍면동 거점이 되고 학습동아리와 독서동아리가 연계하여 학습-독서 통합 생태계를 형성한다.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작은도서관이 마을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독서동아리와 생활문화동아리가 연계하여 주민 문화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MS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작은도서관이 마을 공유공간으로서 공동체 자산화를 추진하고 주민 공동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문화 자산으로 발전한다.

040 간단정책카드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여 직업 정체성을 확립
- 가치2: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시민이 마을활동가로 재진입하는 경로를 마련
- 가치3: 경력 축적과 처우 개선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가치4: 마을활동가 양성에 기후-환경 역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직접적 기후정의 정책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7
- 정책명: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이력관리, 자격인증, 처우개선, 전문성, 평생학습, 사회적인정, 지속가능성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단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활동가의 경력을 공식 기록하고 이직과 재취업과 창업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목표2: 기초-중급-고급 3단계 양성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마을활동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목표3: 경력인정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를 추진하여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활동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마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광역 단위 웹 플랫폼을 구축하고 회원가입과 활동 이력 등록과 활동 확인서 발급과 구인-구직 매칭과 교육-자격 정보 연동 기능을 갖춘 다 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등록하고 중간지원조직이 활동을 확인하며 까지 누적 2, 등록을 달성 한다.
- 과제2: 기초 - 중급-고급 3단계 양성 교육과정 표준화 - 기초과정(마을공동체 이해-주민 조직화-사업 기획)과 중급과정(리더십-사업 관리-정책 제도)과 고급과정(연구방법론-코칭 멘토링-네트워크 구축)을 표준화 한다

과제3: 마을활동가 자격인증제 도입 - 기초(경력 1년+이수)와 중급(경력 2년+필기)과 고급(경력 5년+과제) 3 등급의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광역단체장 명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동한다 마을 사업 공모 가점과 채용 우대와 경력 증빙으로 활용 경로를 확보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처우 차등을 적용한다.

과제4: 멘토링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고급 활동가가 신규 활동가를 1대3으로 멘토링하고 광역 단위 정기 네트워크 모임을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과 전국 대회 참가를 지원하며 세대 간 경험 전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

과제5: 경력인정 조례 제정 및 제도화 - 광역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력관리 시스템과 양성교육과 자격제와 예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를 추진한다 조례에 마을활동가 정의와 경력 인정 범위와 지원 사항과 예산 편성 의무를 명시하고 통계청과 협의하여 직업 분류 등재를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활동가의 경력이 공식 기록되어 이직과 재취업과 창업 시 경력 증빙으로 활용되고 구인-구직 매칭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진다.

효과2: 마을활동가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학점 취득이 가능하여 평생학습 경로가 확보된다.

효과3: 마을활동가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인증되고 사회적 인정이 확보되어 장기 활동 유인이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44억원, 연평균 11억원

재원: 국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양성체계와 자격인증이 처우 차등화의 기준이 되고 경력인정 시스템이 처우개선 정책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거버넌스 영역의 경력인정 제도와 문화 영역의 양성체계가 상호 보완하여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지위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이 광역 평생학습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고 학점은행제 연계로 마을활동 경험이 평생학습 이력으로 인정된다.

041 간단정책카드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0. 핵심가치

- 가치1: 디지털 격차 해소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포용사회를 실현
- 가치2: 세대 간 디지털 멘토링으로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고 상호학습 문화를 확산
- 가치3: 기술 활용을 넘어 정보 판별력과 디지털 윤리와 AI 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
- 가치4: 디지털주권 문해교육이 정책의 핵심이며 주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8
- 정책명: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시민성, 정보판별력, 디지털격차해소, 미디어문해, AI리터러시, 디지털윤리, 정보보호, 세대별교육, 마을디지털공동체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마을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여 도보 10분 거리의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한다.
- 목표2: 세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되 정보 판별력과 디지털 윤리와 AI 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한다.
- 목표3: 마을 디지털 서포터즈와 학습동아리와 세대 간 멘토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조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 디지털 배움터 구축 및 운영 - 마을학당과 도서관과 주민센터와 경로당 내에 디지털 배움터를 지정하고 읍면동별 최소를 운영하여 도보 10분 접근성을 확보한다 개소당 태블릿 10대와 와이파이와 프로젝터 등 교육 장비를 구비하고 전담 강사 배치하며 주 5일 운영한다.
- 과제2: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령층(스마트폰-카카오톡-키오스크, 1대5 소그룹)과 중장년층(스마트워크-온라인 구직-금융앱)과 청소년-청년(가짜뉴스 판별-디지털 윤리-AI 리터러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 과정 운영한다 고령층은 큰 글씨와 반복 학습과 실습 중심으로 설계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공공서비스 이용 등 생활밀착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과제3: 마을 디지털 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 - 연 4년간 마을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배움터 보조강사와 1대1 디지털 상담과 찾아가는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양성 교육(디지털 교육 기법-공감 교육-실습)을 이수하고 활동비 월 지급하며 보수 교육으로 역량을 유지한다.

과제4: 세대 간 디지털 멘토링 - 청년 대학생이 고령층에게 1대1 디지털 기기 교육을 제공하는 세대 간 멘토링을 연 20쌍 운영한다 3개월간 주 1회 멘토링을 진행하고 청년 멘토에게 활동비 월 지급하며 대학 사회봉사 학점과 연계한다.

과제5: 마을 디지털 학습동아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5인 이상 자발적 디지털 학습동아리에 연 활동비를 지원하고 연 동아리를 조직하며 디지털 재능 나눔 장터와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한다 동아리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동아리 간 경험 공유와 우수 사례 발표를 지원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디지털 교육이 가장 필요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생활공간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효과2: 세대별 필요와 수준에 맞는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한다.

효과3: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는 상호학습 문화가 정착되고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5. 예산

4년총액: 41억원, 연평균 10.25억원

재원: 국비 2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디지털 문해교육이 광역 평생학습 체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입되고 마을 배움터와 디지털 배움터가 공간과 인력을 공유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인다.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디지털 문해교육 수요자가 마을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경로가 되고 미디어 문해력과 디지털 시민성이 마을미디어의 콘텐츠 품질을 높인다.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주민이 마을방송국 운영에 참여하고 디지털 서포터즈가 마을방송 기술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는 연계가 가능하다.

042 간단정책카드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화
- 가치2: 중앙 언론이 다루지 않는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공론화
- 가치3: 마을미디어 제작 과정 자체가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공동체를 강화
- 가치4: 마을미디어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배포를 통해 주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화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09
- 정책명: 마을미디어 활성화
- 대영역: 문화
- 분야: 미디어-소통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TV, 주민기자, 미디어교육, 미디어접근권, 지역소통, 마을콘텐츠,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작 공간과 장비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마을미디어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 목표2: 마을신문과 마을라디오와 마을TV와 마을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미디어단체를 육성하여 주민이 미디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목표3: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와 편집 독립성을 보장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광역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간 150제곱미터에 촬영실과 편집실과 녹음실을 갖추며 카메라와 녹음기와 편집 장비를 무료 대여한다 전담인력 배치하고 미디어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연 이상에게 제공하며 기초별 마을미디어단체에 순회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 과제2: 마을미디어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 마을신문과 마을라디오와 마을TV와 마을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분기별 1회 운영하며 우수 콘텐츠 어워드를 시상한다.
- 과제3: 주민기자 양성 및 참여 확대 - 주민기자 양성과정(8주, 연)을 운영하고 청소년-청년 마을미디어 동아

리 10개를 지원하며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제보-인터뷰-UCC 공모)을 활성화한다 취재와 촬영과 편집과 글쓰기 기술 교육과 함께 미디어 윤리와 저작권과 초상권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고 양성과정 수료 후 마을미디어단체 활동을 연계한다.

과제4: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및 축제 운영 - 광역 단위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마을미디어 축제를 개최(참여 목표)하며 마을미디어 간 콘텐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과 합동 취재를 지원하며 광역-기초-시청자미디어재단-언론사를 연계한다.

과제5: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제도화 - 광역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와 단체 지원과 마을미디어위원회와 예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편집 독립성 원칙을 명시한다 마을미디어위원회(민간 위원 과반수, 회의)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마을미디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의 미디어 제작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고품질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진다.

효과2: 마을미디어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마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효과3: 주민이 마을 이야기의 생산자로 참여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활동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30억원, 연평균 7.5억원

재원: 국비 2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가 마을방송국의 콘텐츠 생산 기반이 되고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공동체라디오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한다.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수료자가 마을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경로가 되고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품질과 윤리를 높인다.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마을미디어 활동가의 경력이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양성체계를 통해 미디어 활동가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043 간단정책카드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 누구나 미디어 생산자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
- 가치2: 중앙 방송이 다루지 못하는 읍면동 단위 상세 재난정보를 신속 제공
- 가치3: 방송 제작 과정이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장이 되어 공동체 결속을 강화
- 가치4: 마을방송이 디지털 송출과 팟캐스트-유튜브 등 다매체 확장으로 디지털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10

정책명: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대영역: 문화

분야: 미디어-소통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공동체라디오, 마을방송, 소출력FM, 비영리라디오, 지역미디어, 주민DJ, 재난방송, 지역소통, 미디어접근권, 마을공동체,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FM 10W 이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여 마을 현안과 주민 인터뷰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민 목소리로 전달한다.
- 목표2: 주민DJ를 양성하고 자체 제작 비율 70% 이상을 달성하여 주민이 미디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참여형 방송 생태계를 구축한다.
- 목표3: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여 읍면동 단위 상세 재난정보를 내에 신속하게 송출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 -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취득하여 FM 10W 이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한다 스튜디오(100제곱미터 이상)와 송신시설(10W)을 구축하고 카메라와 녹음기와 편집장비를 구비하며 상근인력(방송국장-PD-기술-행정홍보)을 채용한다.
- 과제2: 주민DJ 양성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DJ 양성교육을 연 4기(기당, 연)로 운영하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 70% 이상과 일일 방송을 목표로 한다 마을 현안과 주민 인터뷰와 문화-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청소년-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며 이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과제3: 재난방송 체계 구축 및 운영 -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난문자(CBS) 수신 시스템을 연동하여 재난 발생 시 내 긴급 방송을 송출한다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대피소 정보와 도로 통제와 마을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과제4: 청취자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FM 라디오 수신기 200대를 보급하고 온라인 스트리밍과 팟캐스트를 병행 송출하여 청취 범위를 확대한다 방송국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유튜브와 팟캐스트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며 청취자 참여 코너(문자-SNS-전화)를 운영한다.

과제5: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례 제정 및 재정 안정화 - 기초자치단체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연 이상의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편집 독립성 원칙을 명시한다 조례에 지원 근거와 위원회 구성과 예산 의무와 편집 독립성을 규정하고 청취자 회비와 후원금과 협찬 수입을 다각화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 인프라가 구축된다.

효과2: 주민이 미디어의 주체로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마을 공론장이 형성된다.

효과3: 읍면동 단위 상세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주민 안전이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10.5억원, 연평균 2.63억원

재원: 국비 3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광역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공동체라디오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고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라디오와 마을신문-웹진 간 콘텐츠 교류가 이루어진다.

MC11 마을신문-웹진 지원: 마을신문과 웹진이 공동체라디오와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고 주민기자가 라디오와 신문에 동시 참여하여 마을미디어 생태계를 풍성하게 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공동체라디오가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자치회 현안을 공론화하는 매체로 기능하여 주민자치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인다.

044 간단정책카드 MC11 마을신문-웹진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중앙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읍면동 마을 현안을 주민 목소리로 공론화
- 가치2: 마을신문 제작 과정 자체가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공동체를 강화
- 가치3: 주민기자 활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가짜뉴스 판별 능력을 제고
- 가치4: 마을신문이 웹진-SNS-뉴스레터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11

정책명: 마을신문-웹진 지원

대영역: 문화

분야: 미디어-소통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마을신문, 웹진, 하이퍼로컬뉴스, 주민기자, 인쇄매체, 온라인매체, 지역소통, 마을이슈, 공론장, 마을언론,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신문(인쇄)과 웹진(온라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초당 이상의 마을미디어 단체를 육성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언론을 활성화한다.
- 목표2: 주민기자를 양성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지역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읍면동 단위 이슈를 주민 목소리로 전달한다.
- 목표3: 기초의원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기초단체장이 실행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신문 - 웹진 지원 조례 제정 - 기초의원이 마을신문-웹진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여 마을미디어위원회 설치 근거와 예산 확보 의무와 편집 독립성 원칙을 명시한다 타 지역 조례 제정 사례를 분석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기초의회 내 마을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원 동의를 확보한다.
- 과제2: 마을신문 발행 지원 및 주민기자 양성 - 주민기자 양성과정을 연 2기(기당)로 운영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과 편집 기술과 미디어 윤리를 교육하며 수료 후 마을신문 참여를 연계한다.
- 과제3: 마을 웹진 발행 지원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기초당 마을 웹진 발행을 지원하고 웹사이트 구축비와

도메인-호스팅 비용을 지원하며 마을 웹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 플랫폼에서 각 마을 웹진의 콘텐츠를 모아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SNS 연동과 뉴스레터 발송 기능을 제공한다.

과제4: 마을신문 - 웹진 네트워크 구축 및 품질 지원 - 기초 단위 마을미디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동 인쇄와 공동 배포로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마을신문-웹진 시상과 품질 컨설팅을 제공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편집 기술과 취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취재를 지원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과제5: 마을신문 배포 확대 및 주민 인지도 제고 - 공공기관과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도서관에 마을신문 의무 비치를 추진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규모 상점 등 민간 배포처를 발굴한다 마을신문 발행일에 맞춘 SNS 홍보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신문 축제와 마을미디어 박람회를 개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신문-웹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단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 예산이 확보된다.

효과2: 마을신문의 안정적 발행이 가능해지고 주민기자 역량이 강화되어 콘텐츠 품질이 향상된다.

효과3: 인쇄비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확산하고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예산

4년총액: 12억원, 연평균 3억원

재원: 국비 1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광역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마을신문-웹진의 교육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신문과 마을라디오와 마을TV 간 콘텐츠 교류가 이루어진다.

MC10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마을신문의 기사가 공동체라디오에서 소개되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마을 신문 기사로 전환되어 미디어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마을신문-웹진의 콘텐츠가 오픈플랫폼에 통합 게시되고 플랫폼의 주민 의견이 마을신문의 취재 소재가 되어 상호 연계된다.

045 간단정책카드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온라인에서 이웃을 연결하고 오프라인 마을공동체로 확장하는 디지털 공동체 구현
- 가치2: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청년과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마을 참여 확대
- 가치3: 비영리 공공 플랫폼으로 주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광고-상업적 활용을 금지
- 가치4: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이 정책의 핵심이며 데이터 주권 보장과 비영리 공공서비스 원칙을 실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2
- 정책명: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 대영역: 문화
- 분야: 미디어-소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주민소통플랫폼, 동네앱, 마을네트워크, 이웃소통, 지역정보공유, 온라인커뮤니티, 하이퍼로컬, 공공알림, 주민참여, 스마트마을,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단위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웹+앱)을 구축하여 읍면동 동네방 기반으로 주민이 이웃과 소통하고 마을 정보를 공유한다.
- 목표2: 중고거래-나눔-재능기부와 공공 알리를 통합하여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비영리 공공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 목표3: 주민자치회 온라인 참여와 주민 제안과 참여예산 투표를 연계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오픈소스 기반 주민 소통 플랫폼 구축 - 오픈소스 기반(Discourse 등)으로 웹과 앱을 개발하고 읍면동 단위 동네방(커뮤니티)을 구성하여 실명 인증과 주소 기반으로 주민을 자동 배정한다 기초의원이 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 API를 제공하여 공공데이터와 연동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한다.
- 과제2: 소통 - 거래-나눔 통합 기능 구현 - 마을 소식 공유와 중고거래-나눔-재능기부-품앗이 게시판과 공공알림(재난-날씨-쓰레기 배출 일정)과 마을 지도와 축제 캘린더를 통합한다 동네방별 게시판을 운영하

고 카테고리별 필터링을 제공하며 위치 기반 검색으로 가까운 이웃의 나눔과 거래를 연결한다.

과제3: 주민자치 온라인 참여 기능 연계 - 주민자치회 온라인 회의와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과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와 온라인 마을총회를 플랫폼에 연계한다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안건 공개와 의견 수렴과 투표 기능을 구현하고 민원 신고와 처리 결과 피드백 기능을 제공한다.

과제4: 주민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주민 플랫폼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층 대상 경로당 방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며 큰 글씨 UI와 다국어 지원을 적용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읍면동주민센터가 교육을 실행하고 가입 이벤트와 오프라인 모임 연계로 활성화를 촉진한다.

과제5: 플랫폼 운영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기초의원이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와 데이터 주권과 비영리 운영 원칙을 제도화한다 플랫폼 운영위원회(민간 과반)를 구성하고 동네방 운영자(주민자치회-자원봉사자)를 위촉하며 이용수칙과 콘텐츠 모더레이션 기준을 마련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비영리 공공 플랫폼으로 주민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고 오픈소스로 타 지역에 무료 공유가 가능하다.

효과2: 하나의 플랫폼에서 마을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거래와 나눔이 이루어져 이웃 간 연결이 강화된다.

효과3: 주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 범위와 질이 향상된다.

5. 예산

4년총액: 10.2억원, 연평균 2.55억원

재원: 국비 1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11 마을신문-웹진 지원: 마을신문-웹진의 콘텐츠가 오픈플랫폼에 통합 게시되고 플랫폼의 주민 의견과 제보가 마을신문의 취재 소재가 되어 상호 연계된다.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오픈플랫폼에 축적된 마을 기록과 사진과 이야기가 디지털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마을의 집단 기억을 형성한다.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주민의 플랫폼 활용 역량을 높이고 데이터 주권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건전한 플랫폼 문화를 조성한다.

046 간단정책카드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재개발과 고령화로 사라지는 마을 기억을 디지털로 영구 보존
- 가치2: 주민이 기록의 생산자이자 관리자가 되는 풀뿌리 역사쓰기 실현
- 가치3: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 주민과 젊은 세대에게 마을 역사를 전승
- 가치4: 마을 디지털아카이브가 정책의 핵심이며 마을기록의 디지털 보존과 주민 데이터 자치를 구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3
- 정책명: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대영역: 문화
- 분야: 미디어-소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마을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마을기록, 공동체기억, 주민기록, 구술사, 마을역사, 기록보존, 아카이빙, 마을정체성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단위 마을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사진과 영상과 문서와 구술사 등 마을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공유한다.
- 목표2: 시민기록가를 양성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 기록을 생산하고 마을 어르신의 구술사를 채록하여 사라지는 마을 기억을 보존한다.
- 목표3: 기초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아카이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초의원이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과 추진체계와 예산과 시민기록가와 운영위원회와 저작권 등을 규정하고 기초단체장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과제2: 마을 기록물 수집 및 구술사 채록 - 주민이 보관하던 옛 사진과 영상과 문서를 기증받거나 디지털화하고 재개발 예정 지역은 긴급 수집 대상으로 지정하며 마을 어르신(70세 이상)의 생애사와 마을 변천사를 구술사로 채록(1인당 2~ 면담)한다
- 과제3: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오픈소스 아카이브 소프트웨어(Omeka 등)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진-영상-문서-구술사 업로드와 더블링크어 메타데이터 표준 적용과 주제별-시대

별-지역별 검색과 타임라인-지도 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과제4: 시민기록가 양성 및 주민 참여 확대 - 마을 기록 전시회와 구술사 상영회와 마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학교-마을 연계로 학생이 마을 탐방과 어르신 구술사 채록에 참여한다.

과제5: 마을 현황 기록 및 디지털화 사업 - 마을의 현재 모습(건물-골목-명소-축제-행사)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주민이 보관한 아날로그 자료(VHS-8mm필름-카세트테이프)를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며 메타데이터(제목-날짜-장소-인물-키워드)를 작성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다.

효과2: 사라지는 마을 기억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구술사로 영구 보존된다.

효과3: 누구나 마을 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로 비용을 절감한다.

5. 예산

4년총액: 16억원, 연평균 4억원

재원: 국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C12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오픈플랫폼에 축적된 마을 기록과 사진과 이야기가 디지털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마을의 집단 기억을 형성한다.

MC09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미디어가 제작한 영상과 사진과 기사가 아카이브에 수집되고 아카이브 자료가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소재로 활용되어 상호 연계된다.

MC08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시민기록가와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교육하여 기록물 디지털화와 메타데이터 작성과 플랫폼 활용 능력을 높인다.

047 간단정책카드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0. 핵심가치

- 가치1: 비난-판단-강요 중심의 폭력적 소통 문화를 공감-존중-경청의 문화로 전환
- 가치2: 마을 갈등을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는 역량 확보
- 가치3: 다양한 소통 방법론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와 협력적 공동체의 토대 형성
- 가치4: 비폭력대화 교육에 온라인 과정과 디지털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확대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4
- 정책명: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 대영역: 문화
- 분야: 미디어-소통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비폭력대화, 비폭력소통, 공감, 갈등조정, 회복적대화, 감정코칭, 경청, 소통문화, 마을갈등해결, 공동체소통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비폭력대화 마을학교를 설립하여 비폭력대화(NVC), 감정코칭, 회복적 대화, 마음챙김 소통, 적극적 경청 등 다양한 비폭력 소통 방법론을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목표2: 마을 갈등을 승패나 시비 판단이 아닌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조정하는 마을 갈등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목표3: 비폭력 소통 실천가를 양성하고 마을 곳곳에서 소통 연습 모임과 대화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비폭력 소통이 일상화되는 마을 문화를 형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설립 및 기반 조성 -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으로 비폭력대화 마을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비폭력 소통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인력-커리큘럼 기반을 조성한다
마을학교는 특정 기법이나 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적 운영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 과제2: 다양한 비폭력 소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정 기법에 국한하지 않고 비폭력대화(NVC), 감정코칭, 회복적 대화, 마음챙김 소통, 적극적 경청, 공감대화, 열린 대화(Open Dialogue) 등 다양한 비폭력 소통 방법론을 포괄하는 기초-심화-전문가 3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과제3: 마을 갈등조정 및 회복적 대화 지원 - 마을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과 공동체 내 갈등, 주민자치회

운영 갈등 등을 관계 회복 중심으로 조정하는 서비스와 회복적 대화 모임을 운영한다

과제4: 학교 - 마을 연계 비폭력 소통 교육 - 학교 폭력 예방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비폭력 소통 교육을 학교와 마을학교가 연계하여 제공한다

과제5: 비폭력 소통 실천가 양성 및 마을 소통 문화 확산 - 전문가과정 수료자를 비폭력 소통 실천가로 인증하고 마을 곳곳에서 소통 연습 모임을 운영하며 마을 대화 축제와 캠페인을 통해 비폭력 소통 문화를 확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 누구나 무료 또는 저가로 비폭력 소통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공 교육 인프라가 마련된다

효과2: 4년간 누적 1, 이상이 비폭력 소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마을 전체의 소통 역량이 향상된다

효과3: 마을 갈등을 승패가 아닌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으로 전환하여 공동체 신뢰가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8억원, 연평균 2억원

재원: 국비 10%, 시도비 25%, 시군구비 6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05 평생학습 체계 구축: 비폭력대화 마을학교는 평생학습 기관으로 설립되며 평생학습 체계와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강사풀-학습 이력 관리를 공유한다

MC04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학교-마을 연계 비폭력 소통 교육과 또래조정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및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며 청소년 자치 회의에서의 소통 문화를 개선한다

MS0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비폭력 소통 역량은 정서적 건강과 관계 회복에 기여하며 정신건강 마을돌봄과 연계하여 주민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예방한다

048 간단정책카드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을 문화 소비자에서 창작자·기획자로 전환하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
- 가치2: 문화예술 동호회와 축제를 매개로 세대·계층을 잇는 마을공동체 강화
- 가치3: 시설 중심 생활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주민 활동 직접 지원 체계 구축
- 가치4: 마을문화예술이 환경-생태 주제를 다루어 기후위기 인식 확산과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5
- 정책명: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 대영역: 문화
- 분야: 문화·예술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생활문화, 마을예술, 주민문화예술, 문화동호회, 생활예술, 공연, 전시, 축제, 문화공간, 문화향유, 마을예술가, 문화민주주의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한다
활동비, 연습 공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여 동호회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2: 마을 주민 가운데 재능 있는 이들을 마을 문화예술가로 발굴·양성하고, 마을 무대·갤러리를 통해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문화 생산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목표3: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마을 문화예술 축제를 정례화하고, 생활문화 공간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 단위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적 순환 구조를 만든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문화예술 동호회 발굴 및 통합 지원 - 장르는 음악·무용·연극·미술·공예·사진·영화·문학 등 제한 없이 공모한다
3인 이상 문화예술 동호회를 공모하여 연 50개를 선정하고, 동호회당 연 활동비(연습비·강사비·재료비·공연경비)와 공공시설 연습 공간, 동호회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합 제공한다
- 과제2: 마을 주민 문화예술가 발굴 및 양성 - 포트폴리오 제출 기반 선발, 인당 연 활동비 지원, 마을예술가 DB 구축(온라인 공개)으로 주민·기관의 강사 섭외 활성화, 마을예술가 네트워크 모임으로 교류와 협업 촉진
- 과제3: 마을 무대·갤러리 운영 및 공연·전시 기회 확대 - 읍면동별 마을 무대에서 매월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센터·도서관·복지관에 마을 갤러리를 조성하여 교체 전시를 운영한다 경로당·복지관·학교를 찾아가는 공연과 우수 동호회 광역·전국 교류 공연(연 동호회)도 지원한다

과제4: 주민 주도 마을 문화예술 축제 정례화 - 읍면동별 축제 기획단(동호회 대표·마을예술가·주민자치위원·주민)을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출연하는 마을 문화예술 축제를 정례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동호회 공연, 마을예술가 전시, 주민 체험 부스(악기 체험·그림 그리기·공예 만들기), 먹거리 장터(마을 음식·농산물), 어린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다

과제5: 생활문화 공간 확충 및 아카이브·네트워크 구축 - 주민센터·도서관·복지관·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 기존 공공시설을 문화예술 활동 공간(연습실·전시실·공연장·창작스튜디오)으로 개방하고, 읍면동별 마을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동호회 저변 확대와 활동 지속성 확보로 주민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 기반 마련, 소규모 동호회의 접근성 향상

효과2: 마을 내 문화예술교육 강사·축제 기획자 양성으로 외부 전문가 의존도 감소 및 주민 문화 역량 자립

효과3: 동호회 발표 기회 확대로 활동 동기 강화, 마을예술가 활동 무대 확보, 주민 문화 향유 접근성 향상

5. 예산

4년총액: 24억원, 연평균 6억원

재원: 국비 15%, 시도비 20%, 시군구비 55%, 민간기타 10%, 기초비 50%, 민간 10%

6. 연계정책

MC16 마을예술가 지원: 마을예술가 발굴·양성(과제2)과 직접 연계되며, MC16이 개별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심화 지원을 담당하고 MC15는 동호회·축제·공간을 포함한 생활문화 생태계 전체를 지원한다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과제1)과 상호 보완 관계로, MC17이 동아리 자체의 결성과 활동에 집중하고 MC15는 공연·전시·축제·네트워크까지 포괄하는 종합 활성화 정책이다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마을 문화예술 아카이브(과제5)가 MC13의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과 연계·통합되어 마을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보존·전승을 실현한다

049 간단정책카드 MC16 마을예술가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예술가 경제적 안정으로 마을 기반 창작 활동 지속 가능
- 가치2: 예술가-주민 협력 커뮤니티 아트로 마을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력 증진
- 가치3: 마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 민주주의 실현
- 가치4: 마을예술가가 환경-생태 주제 작품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인식 확산과 문화적 전환에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6
- 정책명: 마을예술가 지원
- 대영역: 문화
- 분야: 문화·예술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지역예술가, 커뮤니티아티스트, 창작활동비, 작업실, 레지던시, 마을연계프로젝트, 주민참여예술, 예술가네트워크, 문화기획, 사회참여예술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거주 예술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창작활동비·작업공간을 종합 지원하여 마을 기반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목표2: 예술가와 주민이 협업하는 마을연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마을 문제 해결과 공동체 연대를 촉진한다.
- 목표3: 전시·공연·출판 기회 확대와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예술가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예술가 발굴 및 DB 구축 - 기초자치단체 거주 예술가를 공개 모집(장르 무제한)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름·장르·경력·포트폴리오를 포함한 DB를 구축·운영한다 4년간 등록을 목표로 하며, 인증서 발급과 공공시설 우선 대관·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 과제2: 창작활동비 지원 - 재료비·장비비·작업실 임대료·작품 발표 경비 등에 사용하며, 지원 예술가는 4년 내 1회 이상 공개 발표 의무를 부여한다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예술성·지역 기여도·주민 협력 의지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다 연말 성과 보고회 개최, 우수 예술가 시상, 성과집 발간으로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한다.

과제3: 작업공간(스튜디오) 조성 및 지원 - 폐교·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전용 공공 작업실(각 10실, 총 20실)를 4년간 조성한다 입주 기간 2년, 사용료 무료 또는 저가로 운영한다 공공 작업실 미확보 예술가에게는 민간 임대료를 월 지원(연)한다 유휴 공간 사전 조사 후 장르별 특성(소음·분진·크기)을 고려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과제4: 마을연계 프로젝트(커뮤니티 아트) 지원 - 주민 참여 공연·전시·벽화·공공미술, 마을 이야기 기록(구술사·사진·영상), 마을 문제 해결(환경·공동체·안전), 마을 축제 기획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주민 참여 워크숍을 필수로 하고, 예술가 단독이 아닌 주민·마을 단체와의 협업 프로젝트만 선정한다

과제5: 전시·공연·출판 지원 및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 공공 문화시설 마을예술가 우선 대관(대관료 50% 할인), 기초단체 기획 전시·공연, 작품집·시집 등 출판 지원을 실시한다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작품 공개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전국 예술가 네트워크 연계 및 대화·워크숍 참가비를 지원(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 거주 예술가 현황 파악으로 지원 정책 기초 자료 확보, 예술가 가시성 향상, 주민·기관과의 연결 기반 마련

효과2: 예술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창작 지속성 확보, 작품 발표 의무를 통한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효과3: 예술가 안정적 창작 환경 확보로 마을 정착 촉진, 오픈스튜디오를 통한 예술가·주민 교류 활성화

5. 예산

4년총액: 17억 8,700만원, 연평균 4억 4,675만원

재원: 국비 10%, 시도비 25%, 시군구비 60%, 민간기타 5%, 국비 10%, 광역비 30%

6. 연계정책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마을예술가가 생활문화 동호회 지도, 마을축제 출연, 마을 무대·갤러리 활용 등 MC15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참여하며, 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마을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MC15의 공간·프로그램 인프라는 MC16 예술가의 활동 무대가 된다.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마을예술가가 생활문화동아리의 예술 지도자·멘토로 활동하여 주민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동아리가 마을연계 프로젝트의 주민 참여 통로 역할을 한다 예술가의 전문성과 동아리의 자발성이 결합하여 마을 문화 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

ME11 마을기업 육성: 예술가 굿즈 제작·판매, 마을축제 경제효과,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예술 기반 마을 경제 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050 간단정책카드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관객이 아닌 창작 주체로서 문화 민주주의 실현
- 가치2: 정기 모임과 협업을 통한 세대·계층 간 연결 및 마을공동체 강화
- 가치3: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의 문화적 처방
- 가치4: 생활문화동아리에 환경-생태 분야를 포함하여 주민의 일상적 환경실천을 촉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7
- 정책명: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 대영역: 문화
- 분야: 문화·예술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생활문화동아리, 문화동호회, 아마추어예술, 생활예술, 동아리네트워크, 문화공동체, 발표기회, 생활문화축제, 자발적참여, 사회적환원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거주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생활문화동아리에 활동비·공간·발표 기회를 종합 지원하여, 연 동아리·1, 이상 주민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 목표2: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동아리 간 교류·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환원 활동을 통해 동아리가 마을공동체의 핵심 결절점이 되도록 한다.
- 목표3: 정기 발표회·생활문화 축제·찾아가는 공연 등 발표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원 동아리가 연 2~3회 이상 발표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생활문화동아리 공모 및 활동비 지원 - 장르 제한 없이 음악·무용·미술·공예·사진·연극·문학 등을 포괄하며, 활동 경력 3개월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우선 지원 비율(신규 30%, 취약계층 20%, 장기활동 50%)을 설정하고, 재신청 가능(최대 3년 연속)으로 지속성을 확보한다 연말 우수 동아리 시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 과제2: 활동 공간 지원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 생활문화센터·주민센터·도서관·복지관·문화원·학교·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동아리 연습 공간으로 개방하여 확보한다 기초자치단체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동아리에게 우선 예약권 및 대관료 50% 할인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

화센터 조성 사업에 신청하여 4년간 신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제3: 발표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 축제 개최 - 찾아가는 공연과 광역 축제 참가 지원(연 동아리)도 실시한다 정기 발표회는 지원 동아리 순환 출연으로 모든 동아리가 연 2~3회 발표 기회를 확보하도록 편성한다 생활문화 축제에는 먹거리 장터·체험 부스를 병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동아리 시상을 축제에서 진행한다

과제4: 역량 강화 교육 및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동아리 운영 교육(조직·회계·홍보·회원 관리, 연), 공연·전시 기획 교육(기획·연출·무대 매너, 연), 장르별 심화 교육(전문 강사 초빙, 연)을 운영한다 전문가 컨설팅과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한다 교육은 주말·저녁 시간대로 편성하여 직장인 참여를 보장하고, 동아리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과제5: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 홍보물(리플렛·포스터) 제작 및 주민센터·복지관·문화센터 배포,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상시 운영, 동아리 모집 설명회(상·하반기)를 개최한다 동아리 활동 사진·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 공유하고, 지역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동아리 발표회·축제 취재를 유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지원 규모 확대로 동아리 활동 안정화, 선정률 향상으로 소외 동아리 감소, 사회공헌 심사 기준으로 동아리의 공공성 확보

효과2: 동아리 활동 공간 부족 해소, 예약 편의성 향상, 공공시설 유휴 시간 활용률 제고

효과3: 발표 기회 확보로 동아리 활동 동기 지속, 생활문화 축제를 통한 동아리 가시성 향상, 찾아가는 공연으로 취약계층 문화 향유 확대

5. 예산

4년총액: 17억 8,600만원, 연평균 4억 4,650만원

재원: 국비 10%, 시도비 30%, 시군구비 6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동아리가 활동하는 마을 문화 공간·프로그램·축제 인프라를 MC15가 제공하며, 동아리는 MC15의 핵심 참여 주체로서 마을무대·갤러리·축제에 출연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두 정책이 공동 구축·활용한다.

MC16 마을예술가 지원: 마을예술가가 동아리의 예술 지도자·멘토로 활동하여 주민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동아리 회원이 마을연계 프로젝트의 주민 참여 통로 역할을 한다 MC16 예술가 + MC17 동아리의 결합이 마을 문화 생태계의 핵심 구조이다.

MS14 마을건강 돌봄 네트워크: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사회적 처방(호주 Men's Shed 모델)으로 활용하여, 노인·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계층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복지·문화 연계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051 간단정책카드 MC18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0. 핵심가치

- 가치1: 단체장 교체·임대 만료에도 공간이 유지되는 장기적 안정성 확보
- 가치2: 주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프로그램·수익을 자율 결정하는 주민주권 실현
- 가치3: 공공 예산 의존에서 자생적 운영으로 전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
- 가치4: 마을공연장 자산화가 친환경 건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18

정책명: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대영역: 문화

분야: 문화·예술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공동체자산화, 마을공연장, 마을갤러리, 공간자산화, 협동조합, 장기무상사용, 유휴공간활용, 주민 공동소유, 커뮤니티에셋트랜스퍼, 자생적운영

2. 정책목표

- 목표1: 공공 유휴시설(폐교, 구청사, 유휴 공공건물 등)을 마을공연장-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 주민 공동체에 장기 무상 사용(10년 이상) 또는 소유권 이전하는 자산화 모델을 실현한다.
- 목표2: 마을공연장-갤러리 운영 주체로서 주민 협동조합 2개를 설립하고, 주민 출자+공공 매칭 기금으로 자생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 목표3: 기초의원 발의로 공동체 자산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주민 공동체 이전 절차와 리모델링·운영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공연장 - 갤러리 공동체 자산화 지원 조례 제정 - 기초의원 발의로 공공 유휴시설을 마을공연장·갤러리로 전환하여 주민 공동체에 자산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에 장기 무상 사용(10년 이상, 갱신 가능), 공동체 이전(매각·증여·신탁),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초기 운영비 지원, 자산화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다.
- 과제2: 유휴 공공시설 발굴 및 마을공연장 - 갤러리 리모델링 - 기초자치단체 관내 유휴 공공시설(폐교, 구청사, 유휴 공공건물, 폐쇄 공공시설 등)을 조사하여 마을공연장·갤러리로 전환 가능한 시설을 발굴한다. 선정된 시설을 소규모 공연장(50~100석)과 전시 갤러리를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과제3: 주민 협동조합 설립 및 공간 자산화 기금 조성 - 마을공연장-갤러리를 운영할 주민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출자금+공공 매칭 방식의 공간 자산화 기금을 조성한다 협동조합이 공간의 장기 사용권자 또는 소유자가 되어 운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출자를 모집한다

과제4: 자산화 공간 운영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 - 자산화된 마을공연장-갤러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자 교육, 수익 모델 설계,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를 종합 지원한다 초기 3년간 운영비(인건비·시설 관리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자체 수익 비율을 높여 40% 이상 자립을 목표로 한다

과제5: 마을공연장 - 갤러리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자산화된 공간에서 주민 공연·전시·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마을예술가·생활문화동아리·주민자치회 등 마을 내 문화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간이 마을공동체의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공동체 자산화의 법적 경로 확보로 행정 불확실성 제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모범 조례 모델 창출

효과2: 유희 시설의 가치 재생, 도보 15분 이내 마을 문화 공간 확보, 주민 일상 속 공연·전시 접근성 향상

효과3: 주민이 공간의 공동 소유자가 되어 운영 책임감과 지속 동기 확보, 출자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5. 예산

4년총액: 8억 2,000만원, 연평균 2억 500만원

재원: 국비 20%, 시도비 20%, 시군구비 50%, 민간기타 10%, 민간 200%

6. 연계정책

MC16 마을예술가 지원: 자산화된 마을공연장-갤러리에 마을예술가가 입주하여 레지던시·멘토링 활동을 하고, 마을예술가의 창작 공간이자 주민과의 접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자산화된 공간이 동아리의 연습실·발표 무대·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며, 동아리 연합회(협동조합)가 공간 운영 주체로 성장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ME21 마을자산 공동체 소유: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는 문화 공간에 특화된 마을자산화 모델로서, ME21의 공동체 토지신탁·협동조합 소유 모델과 법적 기반(조례)·운영 방법론을 공유한다.

052 간단정책카드 MC19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관람객이 아닌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주민주권 실현
- 가치2: 축제 기획 과정 자체가 마을공동체 형성의 핵심 수단(정기 모임·역할 분담·합의)
- 가치3: 마을 고유 역사·자연·문화를 소재로 한 마을 정체성 형성과 지역경제 순환
- 가치4: 마을축제 기획에 환경 주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19
- 정책명: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 대영역: 문화
- 분야: 문화·예술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주민주도축제, 축제기획교육, 문화공동체, 주민자치, 분과위원회, 마을브랜드, 축제네트워크, 지역경제순환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관내 마을에 주민기획단(마을당)을 구성하고, 축제 기획 역량 교육(연)·컨설팅·벤치마킹을 통해 자율적 축제 운영 역량을 확보한다.
- 목표2: 마을별 주민 주도 축제를 개최하되, 마을 고유의 역사·자연·문화·특산물을 소재로 하여 마을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로 기획하고, 축제당 평균 2, 방문객을 유치한다.
- 목표3: 주민기획단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간 교류·협업을 촉진하고, 축제를 통한 마을기업·협동조합·생활문화동아리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별 주민기획단 구성 및 축제 기획 역량 교육 - 마을당 주민기획단을 구성하고, 축제 기획 역량 교육(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운영·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마을 별 공개 모집(주민자치회·동아리·상인회·학부모 등 다양한 참여 독려)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프로그램·홍보·먹거리·안전·체험)를 편성한다
- 과제2: 마을 축제 개최 예산 지원 및 행정 절차 원스톱 처리 - 마을당 연 축제 개최 예산을 지원하고, 축제 관련 행정 절차(도로 점용·소음 허가·식품 위생·안전 신고)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원스톱 처리하여 주민의 행정 부담을 해소한다 행정 절차는 담당 공무원 전담 창구로 일괄 처리한다.

과제3: 마을 자원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마을기업 참여 - 축제 프로그램을 마을 내 생활문화동아리·마을예술가·마을기업·협동조합 중심으로 편성하여, 외부 업체 의존을 최소화하고 마을 자원이 축제 콘텐츠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 동아리 공연(노래·춤·악기·연극)·마을예술가 워크숍·마을기업 먹거리 장터·주민 체험 부스(공예·전시·놀이)·주민 장기자랑 등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

과제4: 축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주민 주도 축제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축제 기획 전문가 컨설팅과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축제의 질적 수준을 지속 향상시킨다 축제 안전 매뉴얼(군중 관리·응급 처치·화재 예방·식품 위생)을 제작하여 기획단에 배포하고, 경찰·소방·보건소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과제5: 주민기획단 네트워크 구축 및 축제 성과 확산 - 관내 마을 주민기획단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축제를 발굴·시상하여 주민 주도 축제 문화를 기초자치단체 전역에 확산시킨다 주민기획단 연합회(교류회)를 운영하고, 마을 간 상호 방문·공동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말 우수 축제 시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 백서를 발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의 축제 기획 자립 역량 확보, 기획 과정의 정기 모임이 마을공동체 결속으로 직결

효과2: 기획단이 행정이 아닌 콘텐츠에 집중, 우수 축제 확대 지원으로 질적 향상 동기 부여

효과3: 축제 수익의 마을 내 순환, 동아리·마을기업의 발표 기회 확대, 주민이 관람객이 아닌 출연자로 참여

5. 예산

4년총액: 23억 1,100만원, 연평균 5억 7,775만원

재원: 국비 10%, 시도비 20%, 시군구비 60%, 민간기타 10%, 민간 10%

6. 연계정책

MC17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생활문화동아리가 마을축제의 핵심 출연 주체(공연·전시·체험)이며, 축제는 동아리의 연간 최대 발표 기회이다 동아리 활동의 축적이 축제 콘텐츠의 질을 결정한다.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마을문화예술 동호회·마을예술가·문화 공간이 축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축제는 MC15의 연간 활동을 집약하여 주민에게 보여주는 종합 무대 역할을 한다.

MC14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축제 기획 과정의 갈등 조정에 비폭력대화 기법을 적용하고, 기획단 교육에 민주적 의사결정·갈등 조정 워크숍을 포함하여 기획 과정의 질을 높인다.

053 간단정책카드 MC20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0. 핵심가치

- 가치1: 문화재단의 공공성 강화 -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주민의 일상문화를 직접 지원
- 가치2: 마을문화예술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 - 영세한 마을단위 문화활동에 재단의 전문성과 재정 지원
- 가치3: 문화재단-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간 시너지 창출로 지역문화 순환경제 구축
- 가치4: 지역문화재단이 환경-생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문화적 대응 기반을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20
- 정책명: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 대영역: 문화
- 분야: 문화·예술, 거버넌스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지역문화재단, 마을문화예술, 생활문화, 주민참여거버넌스, 문화민주주의, 중간지원조직협력, 예술가지원, 동아리지원, 문화생태계, 재단공공성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에 마을문화예술 전담팀을 설치하고, 재단 조례에 마을공동체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전체 사업 예산의 15% 이상을 마을문화예술 분야에 배분한다.
- 목표2: 재단 심의위원회에 주민·마을활동가·중간지원조직 관계자가 위원의 40% 이상 참여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영역 의견을 실질 반영한다.
- 목표3: 문화재단-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정기협의체를 운영하고, 연 3건 이상의 공동사업 (마을예술가 지원, 생활문화축제, 마을문화자산화 등)을 개발·추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문화재단 조례 개정 및 마을문화예술 예산 배분 의무화 - 광역·기초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에 마을공동체·생활문화·주민예술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전체 사업 예산의 15% 이상을 마을문화예술 분야에 배분하도록 명시한다 조례 개정안 표준안 제시(재단협회·문체부 협력), 광역·기초 의회 발의 및 통과, 재단별 예산 편성 지침 반영
- 과제2: 마을문화예술 전담팀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 재단 조직 내 마을문화예술팀을 신설하여 마을예술가 발굴·육성,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마을기업 문화사업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협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재단별 정원 증원 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마을문화예술 경력자 공채, 전담팀 업무 매뉴얼 표준화

과제3: 주민참여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개편 - 재단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시 주민·마을활동가·중간 지원조직 관계자가 위원의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기준에 "마을공동체 기여도" 항목을 추가한다 재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주민위원 추천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주민자치회·동아리 연합회), 심의 기준표 재설계

과제4: 마을예술가·생활문화동아리·마을기업 직접 지원 사업 확대 - 재단별 공모사업 신설, 중간지원조직 추천제 병행, 간소화된 신청·정산 절차 마을예술가 창작 지원금, 생활문화동아리 활동비, 마을기업 문화사업 보조금을 재단이 직접 지원한다

과제5: 재단 - 중간지원조직 정기협의체 및 공동사업 개발 - 문화재단-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자 정기협의체(분기별)를 구축하고, 연 3건 이상의 공동사업(마을축제, 문화예술교육, 마을문화자산화 등)을 기획·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재단의 마을문화예술 지원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전환,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 확보

효과2: 마을문화예술 지원의 전문성·지속성 확보, 중간지원조직과의 실질 협력 창구 마련

효과3: 재단 의사결정의 민주성·현장성 강화, 마을 현장 수요의 정책 반영 경로 확보

5. 예산

4년총액: 12,000,000,000원(120억원), 연평균 3,000,000,000원(3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50%, 시군구비 2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C15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마을예술가·동아리 발굴 및 활동 지원의 실행 주체로 문화재단 협력 필수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마을문화예술 활동가 경력 인정 시 재단의 교육-인증 프로그램 활용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문화사업 추진 시 재단의 전문성 지원 연계

054 간단정책카드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0. 핵심가치

- 가치1: 다수결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통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가치2: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평범한 주민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주권을 구현한다
- 가치3: 찬반 대립을 넘어 근거 기반 토론과 상호 이해로 마을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한다
- 가치4: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같은 마을 의제를 주민 숙의로 결정하여 기후민주주의를 실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21
- 정책명: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 대영역: 문화
- 분야: 민주주의·공론장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시민배심원단, 무작위추첨, 퍼실리테이션, 합의형성, 주민자치, 정책반영, 공정성중립성, 갈등조정,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내 마을 단위 공론장을 정례화하고, 무작위 추첨 시민배심원단이 집중 숙의를 통해 마을 중요 의제를 직접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2: 독립 운영위원회와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공론장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목표3: 숙의 결과를 주민자치회 의결과 지방의회 보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공론장이 실질적 정책 결정력을 갖도록 제도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공론장 운영 체계 구축 - 마을별 독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 선정·추첨 공정성·정보 균형을 감독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실무 운영을 담당한다 의제는 주민자치회·주민 제안 중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현안을 우선 선정한다
- 과제2: 시민배심원단 무작위 추첨 및 대표성 확보 - 마을 주민 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층화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한다 추첨 과정을 공개하고 운영위원회가 대표성을 검증하여 특정 집단의 의견 독점을 방지한다

- 과제3: 전문 퍼실리테이터 배치 및 중립적 토론 진행 - 인증된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모든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소그룹 토론과 전체 발표를 병행하여 소수 의견이 묻히지 않도록 진행한다
- 과제4: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자문 - 시민배심원단에게 찬성·반대·중립 입장의 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전문가가 객관적 근거와 정책 영향을 설명한 뒤 배심원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과제5: 숙의 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화 - 공론장 권고안을 주민자치회가 의결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집행부가 정책 반영 계획 또는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광역 조례로 명시한다 미반영 시 재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 효과1: 마을공론장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적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하고, 주민이 마을 의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주권이 실현된다
- 효과2: 무작위 추첨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특정 이익집단이나 목소리 큰 주민의 의견 독점 구조를 해체한다
- 효과3: 근거 기반 숙의와 공정한 진행으로 참여자가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며, 소수 의견 반영으로 공동체 통합에 기여한다

5. 예산

- 4년총액: 72억원, 연평균 18억원
- 재원: 국비 30%, 시도비 50%, 시군구비 2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공론장의 숙의 방법론을 마을총회에 적용하여 거수 표결 중심의 형식적 총회를 숙의 기반 의사결정으로 전환한다
- MC22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공론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퍼실리테이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증제를 통해 품질을 보장한다
- MG06 마을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공론장을 통한 자율적 갈등 조정과 법적 분쟁조정을 상호 보완하여 마을갈등을 다층적으로 해결한다

055 간단정책카드 MC22 속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0. 핵심가치

- 가치1: 숙의민주주의의 품질은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달려 있으며, 인력 없이 제도만으로는 공론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 가치2: 마을 현장에서 갈등을 대화로 전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
- 가치3: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여 숙의 문화가 일상화되고, 마을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강화된다
- 가치4: 퍼실리테이터가 기후·환경 의제의 주민 숙의를 촉진하여 기후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22
- 정책명: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 대영역: 문화
- 분야: 민주주의·공론장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퍼실리테이터, 숙의민주주의, 토론진행, 합의형성, 중립성, 갈등조정, 인증제, 마을공론장, 주민자치, 민주주의교육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단위 숙의 퍼실리테이터 인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인증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한다
- 목표2: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를 마을공론장·주민자치회·갈등조정·마을계획 현장에 파견하여 숙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목표3: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학습·보수교육·윤리 심의를 운영하고, 마을 민주주의 전문인력으로 지속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숙의 퍼실리테이터 인증 교육과정 운영 - 숙의민주주의 원리,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립성·윤리 규범, 마을자치 제도 이해, 다양성 감수성 등 이론교육과 공론장 참관·회의 진행 실습·갈등조정 시뮬레이션 등 현장실습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대학 연구소·퍼실리테이터협회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 과제2: 멘토 - 멘티 현장 실습 체계 운영 - 신규 퍼실리테이터를 경험 있는 선배와 매칭하여 실제 마을 현장

에서 보조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며 역량을 쌓는다 현장 진행 후 피드백 세션과 분기별 합동 워크숍으로 실전 역량을 강화한다

과제3: 인증제 및 등급 체계 도입 - 광역 조례에 근거하여 초급·중급·전문 3등급 인증제를 운영한다 현장 활동 실적과 보수교육 이수에 따라 등급이 상승하며, 인증위원회가 심사·윤리 심의를 담당한다

과제4: 보수교육 및 윤리 규범 운영 - 인증 퍼실리테이터에게 최신 속의 기법, 갈등조정 심화, 다양성 감수성, 사례 분석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립성 유지·이해충돌 회피·참여자 존중 등 윤리 규범을 제정·적용한다

과제5: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 구축 - 인증 퍼실리테이터 전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 모임, 사례 공유, 전국 교류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사무국이 파견 조율·활동비 지급·인증 갱신 행정을 담당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마을 민주주의 특화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확보하고, 인증제로 품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효과2: 멘토링을 통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선후배 간 상호 학습으로 역량이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효과3: 등급 체계로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 등급 퍼실리테이터가 양성과정 강사로 환류하여 인재 재생산 구조를 구축한다

5. 예산

4년총액: 52억원, 연평균 13억원

재원: 국비 25%, 시도비 50%, 시군구비 20%,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C21 속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공론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공급하며, 퍼실리테이터의 현장 실습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져 양성과 활동이 직접 연동된다

MG05 속의형 마을총회 운영: 주민자치회 마을총회에 인증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형식적 총회를 속의 기반 토론·합의형 총회로 전환한다

MG06 마을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퍼실리테이터가 마을 갈등의 1차 대화 조정자로 활동하여 법적 분쟁 이전에 자율적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056 간단정책카드 MC23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0. 핵심가치

- 가치1: 재개발과 고령화로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적 장소와 전통문화를 보존
- 가치2: 주민이 마을 역사의 발굴자이자 해설자가 되는 풀뿌리 문화자치 실현
- 가치3: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으로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가치4: 마을역사문화에 디지털 기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23
- 정책명: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 대영역: 문화
- 분야: 역사문화-공론장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마을역사, 문화유산, 생활유산, 역사문화자원, 마을보존, 탐방길, 문화해설, 향토문화, 마을정체성, 주민참여보존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단위 마을역사문화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역사적 건물과 장소와 전통문화와 생활유산의 보존 목록을 작성하고 긴급 보전 대상을 선정한다.
- 목표2: 마을역사 탐방길과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해설 서비스를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마을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 목표3: 기초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잡는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역사문화자원 보존 - 활용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초의원이 마을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 조사와 보존 목록과 마을역사문화위원회와 해설사 양성과 예산 등을 규정하고 기초단체장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과제2: 마을역사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보존 목록 작성 - 읍면동별 마을역사문화자원을 현장 조사하여 역사적 건물과 장소와 전통행사와 생업기술과 구전설화 등을 분류하고 보존 목록을 작성하며 긴급 보전이 필요한 자원을 선정한다
- 과제3: 마을역사 탐방길 조성 및 해설 서비스 운영 - 마을의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는 도보 탐방길을 조성하

여 역사 안내판과 QR코드 연동 음성 해설과 마을지도를 설치하고 마을역사문화 해설사가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제4: 마을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및 주민 참여 확대 - 마을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교육(향토사-문화유산 이론-해설 기법-안전관리)을 실시하여 연간 양성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며 주민 구술 채록과 역사 발굴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문화원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교육을 운영하고 향토사연구회와 지역대학이 강의를 지원하며 해설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자율적 학습과 현장 활동을 지속한다.

과제5: 마을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마을의 전통 행사 복원과 전통 음식 체험과 전통 생업 기술 체험과 역사 퀴즈 탐방과 사진전 등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읍면동별 연간 2~4개씩 운영한다 마을역사문화 기획단(해설사-주민자치회-청년-어르신)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축제와 연계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역사문화 콘텐츠를 상품화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계적 보존-활용이 가능하다.

효과2: 마을 역사문화자원의 전체상이 파악되어 보존과 활용의 근거 자료가 확보된다.

효과3: 마을 역사가 일상적으로 체험되고 소규모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5. 예산

4년총액: 20억원, 연평균 5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5%,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C13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마을역사문화 실태조사와 해설 콘텐츠가 디지털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어 온라인에서도 마을 역사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마을역사문화자원 보존 목록과 해설 콘텐츠가 마을박물관의 전시 자료로 활용되고 박물관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거점 공간이 된다.

MC19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마을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탐방길이 마을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연계되어 주민기획단과 해설사가 협력하여 역사문화 축제를 기획한다.

057 간단정책카드 MC24 마을박물관-역사기록

0. 핵심가치

- 가치1: 고령화로 사라지는 마을 기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공공자산으로 보존한다.
- 가치2: 학생이 역사 기록자이자 전승자가 되어 세대 간 역사 연결과 마을 정체성을 강화한다.
- 가치3: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에코뮤지엄 모델로 보존-교육-관광을 통합한다.
- 가치4: 마을박물관이 디지털 아카이빙과 온라인 전시를 통해 마을기록의 디지털 보존을 실현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C24

정책명: 마을박물관-역사기록

대영역: 문화

분야: 역사-기록-교육

추진주체: 교육감

핵심키워드: 마을박물관, 에코뮤지엄, 구술사, 생활사기록, 마을역사교육, 역사채록, 마을기억, 세대전승, 학교 연계, 마을정체성,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학교 유희교실-마을회관-빈집을 활용한 마을박물관(에코뮤지엄)를 조성하고 상설전시와 주민기획 특별 전시를 운영하여 연간 방문자 5만 명을 달성한다.
- 목표2: 마을별 주민-학생 공동 구술채록단(10인)을 편성하여 어르신 구술사 1,000건을 기록하고 옛 사진-영상-문서-생활도구-의복 등 생활사 자료 5,000점을 수집-보존-디지털화한다.
- 목표3: 초중고 마을역사 학습과정(연)을 편성하고 학년별 교재를 개발하여 100개교 2만 명 학생이 마을 역사를 배우고 기록하는 교육 체계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박물관(에코뮤지엄) 조성 및 운영 - 학교 유희교실-마을회관-주민센터-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에코뮤지엄 방식으로 실내 전시와 마을 현장 답사지를 통합 전시 동선으로 연결한다 박물관별 마을큐레이터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상설전시와 주민기획 특별전시를 이상 개최하며 마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과제2: 주민 - 학생 공동 구술채록단 운영 - 마을별 10인(주민 5인+학생 5인)으로 구성된 구술채록단이 어르신 생애사-마을 변천사-전통 생업-의례-놀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자유학기제-봉사활동 학습시간을 연계하고 채록 기법-녹음-촬영-정리-윤리교육 후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4년간 1,000건의 구술사를 마

을역사 아카이브에 등록한다.

과제3: 생활사 자료 수집 - 보존-디지털화 - 주민이 소장한 옛 사진-영상-문서-생활도구-의복-가구 등 생활사 자료를 기증-위탁 방식으로 수집하여 전문 보존 처리 후 디지털화한다 4년간 5,000점을 수집하고 원본은 마을박물관에 보존하며 디지털 사본은 MC13 마을디지털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온라인 접근-교육-연구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과제4: 학교 교육과정 내 마을역사 학습 편성 - 초중고 학년별 마을역사 교육과정(연)을 편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사회과 연계 수업으로 운영한다 초등은 마을탐방-그림지도, 중등은 구술채록-마을역사 보고서, 고등은 마을역사 연구-전시기획으로 학년별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100개교 2만 명이 참여한다.

과제5: 마을역사기록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 교육청에 마을역사교육지원단(5인)을 신설하고 마을역사기록위원회(20인)를 구성하여 사업 총괄-조정-평가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교육청-지자체-문화원-향토사연구회-학교-주민 대표로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와 연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며 우수 박물관-채록단을 시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 역사문화의 상시 전시-교육-체험 공간 확보로 연간 5만 명 방문과 마을 정체성 강화를 달성한다.

효과2: 세대 간 직접 대면 기록 활동을 통해 역사 보존과 세대 교류를 동시에 달성하고 학생의 역사연구 역량을 기른다.

효과3: 개인 소장 상태에서 산일되던 마을 역사 자료가 공공 보존 체계로 편입되어 영구 보존과 교육 활용이 가능해진다.

5. 예산

4년총액: 280억원, 연평균 70억원

재원: 국비 20%, 시도비 4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C23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MC23의 보존목록과 해설 콘텐츠가 마을박물관 전시 자료로 활용되고 박물관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거점이 되어 기초의원의 조례 기반 보존과 교육감의 교육 연계가 상호 보완된다.

MC13 마을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마을박물관에서 수집한 구술사와 생활사 자료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온라인 접근-교육-연구에 활용되며 물리적 전시와 디지털 아카이브가 상호 연동된다.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박물관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문화 교육 거점이 되고 마을역사 교육과정이 학교-마을 연계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능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한다.

058 간단정책카드 MC25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0. 핵심가치

- 가치1: 세대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 가치2: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교육자원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역할과 존엄을 회복한다.
- 가치3: 학교-마을 협력 기반의 세대통합 학습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가치4: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디지털 멘토링을 포함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C25
- 정책명: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 대영역: 문화
- 분야: 교육-학습
- 추진주체: 교육감
- 핵심키워드: 세대통합, 세대공감, 지혜교사, 마을교육, 세대간학습, 경험전수, 봉사학습, 마을배움터, 평생학습, 세대교류

2. 정책목표

- 목표1: 학교-마을 연계 세대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100개교를 운영하여 학생이 마을 어르신과 함께 배우고 세대 간 이해를 심화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 목표2: 마을 어르신 지혜교사 1, 양성하고 청소년 봉사학습을 연계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기술-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3: 세대통합 마을배움터를 설치하고 세대공감 프로젝트 연 200건을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도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되는 마을학습문화를 조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학교 - 마을 연계 세대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 초-중-고 학교급별 세대통합 교육과정(연)을 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에 세대교류 학습을 편성하여 시범학교 100개교에서 운영한다 초등은 전통놀이-구술동화, 중등은 지역역사-생활기술, 고등은 진로멘토링-사회참여로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
- 과제2: 마을 지혜교사 양성 및 학교 파견 체계 구축 - 전통기술-생활지혜-지역역사-농업-공예-요리-음악 등 분야별 마을 어르신 1, 지혜교사로 양성하고 교육지원청과 노인복지관이 협력하여 지혜교사 발굴-양성 프로그램(교수법-학생이해-아동안전교육)을 운영하고

과제3: 세대통합 마을배움터 설치 - 운영 - 주민자치센터-노인복지관-학교 유휴교실-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세대통합 마을배움터를 설치하고 세대가 함께 배우는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배움터는 학교 밖 세대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한다

과제4: 청소년 봉사학습 - 세대교류 프로젝트 운영 - 청소년이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생활 지원-구술기록 등 봉사학습을 수행하고 어르신으로부터 전통기술을 배우는 쌍방향 세대교류 프로젝트를 연 200건 운영한다 봉사과 학습이 결합된 서비스러닝 방식으로 운영한다

과제5: 세대통합 학습 지원체계 및 성과관리 - 교육청 내 세대통합교육지원팀(전담인력)을 설치하고 세대통합 학습협의회(교육청-지자체-학교-복지관-주민)를 구성하여 세대통합교육지원팀이 프로그램 품질관리-지혜교사 관리-우수사례 확산을 담당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4. 기대효과

효과1: 학생이 교실 안팎에서 노인 세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배우는 체계가 형성되어 세대 간 이해도가 향상되고 세대통합 교육이 학교 문화로 정착된다.

효과2: 노인 세대가 교육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학생은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며

효과3: 학교 밖에서 세대 간 만남과 교류가 일상화되고 마을 단위 세대통합 학습문화가 형성되어 마을공동체 유대가 강화된다.

5. 예산

4년총액: 320억원, 연평균 80억원

재원: 국비 20%, 시도비 40%, 시군구비 3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세대교류 축을 담당하며 학교-마을 연계 교육의 세대통합 모델을 제공한다.

MC05 마을 평생학습 체계 구축: 세대통합 마을배움터가 평생학습 체계의 세대교류 거점이 되며 지혜교사가 평생학습 강사 풀에 포함되어 생애주기별 학습을 풍성하게 한다.

MX05 학교-마을-자치 통합모델: 세대통합 학습이 학교-마을-자치 통합모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며 교육청-지자체 공동 거버넌스를 공유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세대통합 기능을 강화한다.

059 간단정책카드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0. 핵심가치

- 가치1: 4개 부처 개별법 분산을 극복하고 통합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여 조직 간 연대-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 가치2: 조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 가치3: 광역 17개 전체 조례 제정 성과를 축적하여 중앙정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진한다
- 가치4: 사회연대경제 조례에 녹색경제-기후전환 지원 근거를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1
- 정책명: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 대영역: 경제
- 분야: 기반제도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법제화, 통합생태계, 우선구매제, 사회투자기금, 지원센터, 기본계획, 협동조합, 통합지원

2. 정책목표

- 목표1: 사회연대경제 개념-범위를 조례로 정의하고 4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광역단체장-조직의 책무를 규정한다
- 목표2: 광역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창업-운영 지원-컨설팅-교육-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목표3: 공공구매 10%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사회투자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개념 - 범위-기본원칙-기본계획-책무) - 사회연대경제를 구성원 상호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범위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을 포함한다
- 과제2: 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광역) - 조례에 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제정 후 1년 이내에 광역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통합 창업-운영 지원, 경영-회계-마케팅-법률 전문 컨설팅, 조직 설립-운영 교육-리더 양성-종사자 역량강화를 제공한다
- 과제3: 우선구매제 - 사회투자기금 제도화 - 공공구매의 10%를 사회연대경제 조직 제품-서비스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무 대상은 광역-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이며 품목은 친환경 농산물-사회서

비스-청소경비용역-인쇄물-홍보물이다 일정 금액 이하 수의계약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한다

과제4: 네트워크 - 협력체계 구축(협의회-박람회-국제협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조직 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직 간 협력-연대, 정책 제안, 의견 수렴, 권익 보호를 수행한다 박람회(제품-서비스 전시-판매), 정책 포럼,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과제5: 모니터링 - 평가체계 구축(분기별 점검-평가위원회-성과 보고) - 광역단체장과 지원센터가 분기별로 기본계획 이행-센터 운영-우선구매-기금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광역의회-조직 협의회에 보고한다 조직 참여 평가위원회(조직 대표 50%-전문가 30%-공무원 20%)를 구성하여 정례 회의로 정책-센터-기금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개별법 분산 극복, 통합 지원 법적 기반 구축

효과2: 통합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조직 역량 강화

효과3: 안정적 판로 확보, 자생력 강화, 투자 자원 조성

5. 예산

4년총액: 397억 5,000만원, 연평균 99억 3,750만원

재원: 국비 60%, 시도비 40%

6. 연계정책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기본조례에 따른 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전-목표-전략-과제-예산을 체계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ME03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기본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조직에 원스톱 창업-경영-교육을 제공한다

ME04 우선구매제 확대: 기본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10%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조직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060 간단정책카드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0. 핵심가치

가치1: 4년 기본계획으로 정권 변동에도 정책 지속성을 보장하고 단년도 사업 중심의 비체계적 정책 추진을 극복한다

가치2: 비전-목표-전략-과제-예산을 연계하여 체계적 예산 편성-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의회 예산 심의 근거를 제공한다

가치3: 성과지표 기반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외부 평가-환류 시스템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개선한다

가치4: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에 녹색경제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가 주목적은 아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E02

정책명: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대영역: 경제

분야: 기반제도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핵심키워드: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회연대경제, 정책목표, 성과지표, 실태조사, 민관거버넌스, 중장기전략, 예산편성, 정책평가

2. 정책목표

목표1: 전수 현황조사(조직 수-고용-매출-업종-지역 분포)와 실태 파악(경영 상황-애로사항-지원 수요)을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증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표2: 민관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 기본계획(비전-목표-전략-과제-예산-성과지표)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목표3: 광역-기초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 100%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사회연대경제 현황 전수 조사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 수-고용 인원-매출액-업종 분포-지역 분포를 전수 조사한다 경영 상황(매출-비용-이익-재무 건전성), 애로사항(자금-인력-판로-경영 노하우-법률세무), 지원 수요(창업-운영-컨설팅-교육-네트워크-우선구매)를 파악한다

과제2: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구성과 운영 - 6개월간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조직 육성-지원-우선구매-기금)를 운영한다 기본계획 초안 검토-수정, 공청회-간담회 개최-의견 수렴, 기본계획 확정

-의결, 시행계획 이행 점검을 수행한다 위원회 간사를 광역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서장이 맡고 회의당 10~수당을 지급한다

과제3: 4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 - 매년 1~3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실적을 점검한다 4년 차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환류한다 광역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의회-수립위원회에 보고한다

과제4: 성과 평가 - 환류 체계 운영 - 성과지표 기반으로 매년 연말에 목표 대비 실적-예산 집행-문제점-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외부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정량 평가(60%)+정성 평가(40%)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광역의회-수립위원회에 보고하며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차기 시행계획-기본계획에 환류한다

과제5: 광역 - 기초 연계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에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수립 컨설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광역-기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조정-문제 해결을 수행한다 기초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 발간-포럼 개최-온라인 플랫폼 공유-포상으로 확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실증 기반 기본계획 수립, 현실적 목표 설정

효과2: 민관 공동 수립으로 계획의 현실성과 정당성 확보

효과3: 정책 일관성 확보, 체계적 예산 편성-집행

5. 예산

4년총액: 27억 2,000만원, 연평균 6억 8,000만원

재원: 시도비 50%, 국비 5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조례에 4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ME03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가 현황조사 실시-기본계획 수립 실무-시행계획 추진-성과 평가를 지원한다

ME04 우선구매제 확대: 기본계획에 우선구매 목표-전략-과제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061 간단정책카드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0. 핵심가치

- 가치1: 글로벌 표준인 SDGs 프레임을 지역 정책에 접목하여 국제사회와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VLR(자발적 지역보고서)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 가치2: 정량 중심 정책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한다
- 가치3: 평가 결과를 공공조달-금융-시설비와 연계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치4: SDGs 연계 평가에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표를 포함하여 환경가치를 측정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3
- 정책명: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 대영역: 경제
- 분야: 기반제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SDGs, K-SDGs, 사회적가치, SVI,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성과, 평가체계, 임팩트측정, 공공조달, 정책평가

2. 정책목표

- 목표1: K-SDGs를 참고하여 미수립 광역의 지역 SDGs를 수립하고 기수립 광역은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보완하여 광역 전체 SDGs 체계를 완성한다 목표1 세부: 목표를 유지하되 세부목표와 지표를 지역 특성에 맞게 80~ 수준으로 지역화하고 수립 과정에 민간 작업반 참여시킨다
- 목표2: 기존 SVI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마을공동체까지 확장하고 SDGs 기여도를 추가한 통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참여 조직을 5,000개로 확대한다
- 목표3: 평가 결과를 공공조달 가산점-금융지원 우대-시설비 지원과 연계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목표3 세부: 매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5년마다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SDGs 달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SDGs 수립 - 보완 - K-SDGs를 참고하여 미수립 광역의 지역 SDGs(목표, 80~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기수립 광역은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보완한다

- 과제2: SDGs - 사회연대경제 정책 매핑 - SDG 목표별 기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식별하고 매핑표를 작성하여 정책 제안서-예산 요구서-성과 보고서에 SDGs 기여도를 명시한다 SDG 1(빈곤)과 자활기업, SDG 8(일자리)과 사회적기업, SDG 11(도시)과 마을기업 등 목표별 정책 매핑, 매핑표 공개 및 매년 갱신
- 과제3: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 - 기존 SVI를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마을공동체까지 확장하고 SDGs 기여도를 추가한 통합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SVI 관점(사회적 성과 40%, 경제적 성과 30%, 혁신 성과 30%)에 SDGs 기여도를 추가하고 핵심 지표로 최소화하여 현장 부담을 경감한다 2026년 평가체계 개발과 시범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과제4: 평가 결과 정책 환류 - 평가 등급에 따라 공공조달 가산점-금융지원 우대-시설비 지원을 차등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한다 탁월등급 공공조달 10% 가산-사회투자기금 금리 0.5%p 감면-시설비 20% 추가지원, 우수등급 공공조달 5% 가산-금리 우대, 미흡 조직 교육-컨설팅 강화, 인증패 수여 및 우수사례 홍보
- 과제5: SDGs 모니터링 - 보고서 발간 - 매년 광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5년마다 SDGs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SDGs 수립에 반영한다 보고서에 SDGs 목표별 이행실적, 사회연대경제 조직 SDGs 기여도, 평가 결과 분석, 정책 개선 방안을 수록한다

4. 기대효과

- 효과1: 광역 전체 SDGs 수립(100%) 완료로 체계적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확보 및 국제 VLR 보고 기반 마련
- 효과2: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SDGs 기여도 가시화, 정책 정당성 확보, 예산 편성 시 근거 강화
- 효과3: 전 유형 조직의 사회적가치 통합 측정-비교가 가능해지고 평가 참여 조직을 달성하며 현장 조직의 사회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가시화한다

5. 예산

4년총액: 71억 5,000만원, 연평균 17억 8,750만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5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SDGs 연계 조항과 사회적가치 평가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환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SDGs 매핑을 포함하고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탁월-우수-양호)을 공공조달 가산점(-2%)에 직접 연계하여 우수 조직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한다

062 간단정책카드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0. 핵심가치

- 가치1: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과 고용을 안정화하여 공공조달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되도록 전환한다
- 가치2: 가격 중심 최저가 낙찰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적격심사로 전환하여 공공조달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
- 가치3: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한다
- 가치4: 공공조달에 녹색구매-친환경 제품 우선 기준을 포함하여 공공시장의 기후전환을 촉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4
- 정책명: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 대영역: 경제
- 분야: 기반제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공공조달, 우선구매, 공공구매, 수의계약, 판로지원, 사회적가치, 지방계약법,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영업지원단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산하 공공기관 구매목표를 법정 1%에서 3%로 상향하고 미제정 광역의 공공구매 조례를 제정하여 구매목표 달성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목표1 세부: 구매목표 3%를 조례에 명시하고 미달성 기관 명단을 공개하며 경영평가 5~10%를 반영하여 구매 의지를 제고한다
- 목표2: 광역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내에 규모 영업지원단을 설치하고 나라장터 등록-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전 과정 지원한다 목표2 세부: 공공조달 정보 제공을 이상 실시하고 입찰 교육, 현장 방문 지원 밀도를 높인다
- 목표3: 공공구매 박람회 광역별 정례화하고 수의계약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적격심사(10~20%)를 도입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목표3 세부: 찾아가는 박람회를 이상 운영하고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구매목표 설정 및 조례 제정 - 광역-산하 공공기관 구매목표를 법정 1%에서 3%로 상향하고 미제정 광역의 공공구매 조례를 2년 내 완료한다 조례에 구매목표 3%, 영업지원단 설치, 박람회 개최, 수의

계약 확대 등을 명시하고 경영평가 5~10% 반영으로 달성 의지를 제고하며 미달성 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과제2: 공공구매영업지원단 설치 - 운영 - 광역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내에 팀장, 전문가, 사무원 규모의 영업지원단을 설치한다 공공조달 정보를 이상 제공하고 입찰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 공급을 1대1 상담으로 매칭하고 나라장터 등록-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전 과정 지원한다

과제3: 공공구매 박람회 - 상담회 정례화 - 광역별 이상 박람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 100개가 직접 만나는 현장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제품 전시, 1대1 구매 상담(30분), 현장 계약 체결, 우수 제품 시연 등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박람회를 이상 운영하며 품평회를 통해 공무원 대상 제품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과제4: 수의계약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적격심사 도입 - 수의계약 대상 조직 명단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적격심사에 취약계층 고용-지역 고용-사회적 성과-SDGs 기여도를 반영하며 특정 분야(청소-경비-급식)에 예약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과제5: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모니터링 - 공공기관 구매계획과 사회적경제 제품을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며 광역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한다 플랫폼에 구매계획 공개-제품 검색-수요공급 매칭-계약 체결-구매실적 공개 기능을 탑재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미달성 기관을 파악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광역 전체 구매목표 달성과 구매액 2.7배 증가를 실현한다

효과2: 나라장터 등록 조직이 2배 증가하고 서울시 영업지원단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효과3: 박람회가 3.4배 증가하고 계약 성사가 촉진되며 서울시 박람회 기업 계약 성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5. 예산

4년총액: 380억원, 연평균 95억원

재원: 시도비 60%, 국비 4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공공조달 우선구매를 명시하여 공공구매 조례의 상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공공조달 확대 목표-전략을 포함하여 구매목표 달성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다

ME03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조달 적격심사 가산점에 연계하여 평가와 구매를 환류한다

063 간단정책카드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소규모 개별 조직의 고립을 극복하고 집단적 역량으로 정보 공유-공동사업-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연대와 협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다
- 가치2: 네트워크를 민관 협치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다
- 가치3: 공동 브랜드-물류-입찰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연대 생태계를 형성한다
- 가치4: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가 녹색경제-에너지전환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5
- 정책명: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 대영역: 경제
- 분야: 기반제도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네트워크, 연대, 협의체, 민관거버넌스, 공동행동, 업종별네트워크, 지역별네트워크, 협력, 연합회, 플랫폼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단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민간 주도-자발적 참여-민주적 운영 (1조직 1표) 체제를 확립한다 목표1 세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노동조합-시민사회 단체-연구기관이 참여하며 현장 조직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시장-기술 정보를 공유한다
- 목표2: 돌봄-주거-먹거리-에너지-문화 업종별 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 네트워크 120개(기초 50%)를 조직한다 목표2 세부: 업종별 전문 정보 공유-공동 구매생산마케팅-서비스 품질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한다
- 목표3: 연간 공동행동(정책 캠페인-윤리적 소비-재난 대응) 85건과 공동사업(공동 브랜드-물류-입찰) 85건 합계 170건을 추진한다 목표3 세부: 공동 브랜드 로열티(매출 3~5%)-공동 물류 수수료(배송료 10~20%)-공동 입찰 수수료(계약금액 3~5%)로 자생적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 광역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노동조합-시민사회 단체-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무국(사무국장, 팀장, 간사)을 설치한다
- 과제2: 업종별 -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당 업종(돌봄-주거-먹거리-에너지-문화)별 세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국 85개(광역 굶하기 업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 업종별로 30~ 조직이 참여하며 전문 정보 공유-공동 구매-생산-마케팅-서비스 품질 기준 개발-업종별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 과제3: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관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120개(기초 50%) 구축한다 도시형(관악구 모델)-농촌형(지역개발 중심)-복합형(도농복합) 유형으로 발기인 모임(10~ 조직)을 통해 구성하며, 광역 네트워크가 운영비-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 과제4: 네트워크 운영 지원 체계 구축 - 현장에서는 민간 주도-민주적 운영-재정 투명성- 성과 보고를 지원 조건으로 설정하여 공적 자금의 책무성과 민간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과제5: 공동행동 - 공동사업 추진 - 연간 170건(광역 굶하기 10건)의 공동행동(재난 대응-정책 캠페인-윤리적 소비)과 공동사업(공동 브랜드-물류-입찰-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공동행동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축적한 후 공동사업으로 확대하며, 초기에는 소규모 공동 구매나 공동 홍보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부터 추진한다

4. 기대효과

- 효과1: 1년 차 10개에서 2년 차 17개(100%)를 완료하여 전국 광역 네트워크 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시장-기술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 효과2: 업종당 연 5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서울돌봄네트워크(2025년 출범) 모델을 전국 확산한다
- 효과3: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사회연대경제 방식 해결이 체계화되고 광역-지역 간 유기적 연계가 형성된다

5. 예산

- 4년총액: 280억원, 연평균 70억원
재원: 시도비 70%, 국비 30%

6. 연계정책

-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네트워크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비 지원과 민관 협치 파트너 인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네트워크 구축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고 네트워크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네트워크가 공동 입찰-공동 브랜드-공동 물류를 통해 회원 조직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064 간단정책카드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1인 1표) 협동조합은 주민 경제활동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협동조합 7원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를 실천한다
- 가치2: 돌봄-먹거리-주거-에너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완주군 14년 350억원 매출이 입증하듯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다
- 가치3: 조례 제정-예산 의무 편성-연합회 지원을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
- 가치4: 협동조합 육성에 에너지협동조합-환경협동조합 등 녹색 분야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제조직을 지원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6
- 정책명: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조합원교육, 협동조합7원칙, 공동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생존율,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설립 컨설팅(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설립신고인가-설립등기 1:1 지원)과 설립 교육(회당)을 통해 연간 750개 4년간 3,000개를 신규 설립한다
- 목표2: 경영 컨설팅(회계세무-마케팅-인사노무-재무 회당)과 경영 실태 진단과 초기 3년 집중 지원으로 생존율 70%에서 80%로 향상한다 목표2 세부: 재무제표 분석-사업 실적 점검-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휴폐업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경영공시 지원으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 목표3: 신규 조합원 교육(회당)-임원 교육(회당)-7원칙 학습회(회당)를 통해 연간 15,(기초당) 교육을 달성한다 목표3 세부: 돌봄-먹거리-주거-에너지 업종별 특화 교육을 운영하고 총회 참석률 20~30%에서 50% 이상으로 향상하여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설립신고인가-설립등기 전 과정을 1:1로 밀착 지원하

고 설립 교육을 운영하여 협동조합 가치원칙-7원칙-설립 절차를 사전에 교육한다 설립신고 온라인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등기 절차 간소화를 병행한다

과제2: 협동조합 경영 지원(컨설팅 - 진단-공시) - 회계세무-마케팅-인사노무-재무 분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실태 진단으로 위험을 조기 발견하며 경영공시 지원으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설립 후 3년간 집중 지원으로 초기 정착을 돕는다 경영 컨설팅은 회당으로 기초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실시한다

과제3: 조합원 교육 강화 - 신규 조합원 교육-임원 교육-7원칙 학습회-업종별 특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한다 임원 교육은 이사장-이사-감사 역할-총회이사회 운영-재무제표-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회당-으로 운영한다

과제4: 공동사업 촉진 - 연합회 지원 - 협동조합 5~ 컨소시엄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을 촉진하며 연합회 설립-운동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제6원칙)을 실현한다 업종별 네트워크는 돌봄(공동 교육-채용-홍보) 먹거리(공동 구매-물류-브랜드) 주거(공동 설계-시공-관리) 에너지(공동 발전-판매-운영) 분야를 운영한다

과제5: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 기초자치단체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지원-경영 컨설팅-교육-공동사업-예산 의무 편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조례 미제정 120개와 기존 조례 보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 제공(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법률 전문가 컨설팅-의회 설득 자료(효과-사례)를 지원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연간 750개 4년간 신규 설립을 달성하고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 가치를 내재화하여 정체성 기반 설립률을 높인다

효과2: 초기 3년 집중 지원으로 생존율 80%를 달성하고 휴폐업 위험 조기 발견으로 회생 기회를 제공하며 경영 투명성으로 조합원 신뢰를 제고한다

효과3: 연간 15.(기초당) 4년간 60, 교육을 달성하고 총회 참석률 50% 이상으로 향상한다

5. 예산

4년총액: 960억원(4년), 연평균 240억원

재원: 시군구비 50%, 시도비 30%, 국비 2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협동조합 육성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조례가 우산법으로 기능하여 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분야별 세부 조례로 연동한다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협동조합육성목표와 전략을 포함하여 중장기정책방향을 설정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연합회가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며 공동사업-공동행동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다

065 간단정책카드 ME07 마을기업 육성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경제활동으로 지역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주권 경제 실현
- 가치2: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통합적 지역 발전 경로 확보
- 가치3: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기반 마련
- 가치4: 마을기업 육성에 친환경-자원순환-로컬푸드 분야를 포함하여 탄소중립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7
- 정책명: 마을기업 육성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기업, 지역자원, 지역주민,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비지원, 경영컨설팅, 지역공동체, 4대요건, 자립, 지역순환경제,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지원-사업비 지원-경영 컨설팅-자립 지원-판로 지원-공공조달 우선구매-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년 차 기초단체 50%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 목표2: 신규 마을기업에 3년간 최대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전문가 풀과 우수-신규 마을기업 멘토링을 통해 생존율 80%를 달성한다 3년 후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률 70%를 실현한다.
- 목표3: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에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4년 차 200개를 지정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체계화하며, 업종별 네트워크 120개를 구축하여 공동사업과 정보공유를 촉진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조례 제정 및 예비마을기업 지원 -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정의-설립 지원-사업비 지원-경영 컨설팅-자립 지원-판로 지원-공공조달 우선구매-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 용도는 법인 설립-사업계획 수립-시장조사-시제품 제작이며, 설립 전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과제2: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강화 - 경영 컨설팅을 기존 에서 8회로 확대하여 회계세

무-마케팅-인사노무를 지원한다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회계사-세무사-마케팅 전문가-노무사를 배치하고, 회당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우수 마을기업과 신규 마을기업을 연결하는 멘토링을 운영하여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과제3: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판로 개척으로 온라인 쇼핑몰-직거래장터 -박람회 -공동 브랜드를 지원하고, 공공조달로 이하 수의계약과 우선구매를 확대한다 금융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연계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제공한다 자립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모델 개선-시장 확대-수익성 제고를 지원한다

과제4: 우수 마을기업 발굴 및 마을공동체 연계 -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체계화하여 주민 모임-마을축제-공동육아-공동급식이 수익사업인 마을카페-로컬푸드-마을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컨설팅 제공-사례집 발간-포상을 통해 성공 모델을 확산한다 포상은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으로 마을기업의 사회적 인정도를 높인다

과제5: 마을기업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5~10개가 연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공동사업-경험 공유를 촉진한다 네트워크당 연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무국 인건비-사무실 임대료-회의비-사업비로 활용한다 업종별로 로컬푸드-관광-돌봄-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구매-공동 판매-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 차 기초자치단체 50%가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예비마을기업 단계에서 4대 요건을 충실히 준비하여 설립 후 실패율을 낮춘다.

효과2: 연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체계적 경영 지원으로 3년 후 생존율 80%를 달성하며, 멘토링을 통해 우수 사례가 신규 마을기업에 확산된다.

효과3: 자립률을 50%에서 70%로 20%p 향상시키고, 판로 확보와 금융 접근으로 사업비 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5. 예산

4년총액: 1,400억원, 연평균 35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마을기업 육성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기업 설립-운영-자립 지원의 제도적 체계를 확보한다.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마을기업 육성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여 자립률 70% 달성의 정책적 맥락을 제공하고, 업종별 육성 방향을 설정한다.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 네트워크가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여 업종별 공동사업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마을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066 간단정책카드 ME08 사회적기업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사회통합 실현
- 가치2: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자립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가치3: 지역 내 사회적 가치 기반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가치4: 사회적기업 지원에 환경-녹색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가 핵심 목표는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8
- 정책명: 사회적기업 지원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이윤의사회적재투자

2. 정책목표

- 목표1: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기초단체에 제정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연 400개로 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목표2: 인증 교육-컨설팅을 강화하여 인증 전환율을 50%로 높이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
- 목표3: 자립 컨설팅-판로 지원-사회적금융을 통합 제공하여 3년 생존율을 85%로 끌어올리고 공공조달 우선 구매를 규모로 확대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조례 제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조례 미제정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증 지원, 판로 지원, 공공조달 우선구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과제2: 인증 전환 지원 및 경영 컨설팅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증 교육(회당)과 1대1 인증 컨설팅을 통해 인증 요건 충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 후에는 회계-마케팅-인사노무-재무 분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과제3: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건비 지원 종료(3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 모델 개선-시장 확대-수

익성 제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판로 지원과 사회적금융을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과제4: 공공조달 우선구매 확대 - 기초자치단체 본청-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목표를 연 2% 이상으로 설정하고 수의계약 확대, 적격심사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조례로 구매목표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 한도 이하 적용, 적격심사 시 사회적 가치 20점 부여, 구매 실적 공개, 공공기관 평가에 5% 반영한다.

과제5: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실태조사 - 기초 관내 사회적기업 5~10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공동사업-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2년마다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 차 기초단체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

효과2: 인증 전환율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연간 신규 인증을 달성하며 경영 컨설팅 연 1,000개를 제공한다.

효과3: 생존율 60%에서 85%로 제고하고 자립률을 50%에서 70%로 높이며 사회적금융 지원 연 달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2,000억원, 연평균 5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여 체계적 추진을 담보한다.

ME04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광역 차원의 공공조달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기초 단위 우선구매 실적을 높인다.

067 간단정책카드 ME09 자활기업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 실현으로 복지 의존 탈피와 사회통합 강화
- 가치2: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역량을 살린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가치3: 지역 내 취약계층 중심의 자립 경제 생태계 구축
- 가치4: 자활기업 지원에 환경정비-재활용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일자리와 간접 연계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09
- 정책명: 자활기업 지원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자활기업,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빈곤, 자립, 사업자금융자, 인건비지원, 지역자활센터, 공공조달

2. 정책목표

- 목표1: 자활기업 육성 조례를 기초단체에 제정하여 자활기업 정의, 지원 근거, 공공조달 우선구매, 예산 편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2: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창업 교육-컨설팅과 예비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자활근로에서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연간 창업을 달성한다.
- 목표3: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자립 컨설팅-판로 지원-사업자금 융자 통합 제공으로 3년 생존율을 80%로 끌어 올리고 공공조달 우선구매를 규모로 확대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자활기업 육성 조례 제정 및 예비자활기업 지원 - 기초자치단체에 자활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기업 정의, 예비자활기업 지정, 인건비 지원, 사업자금 융자, 공공조달 우선구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과제2: 자활근로에서 자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창업 교육(회당)과 1대1 창업 컨설팅(연)을 통해 사업계획 작성-법인 설립-자금 조달-판로 개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분기별 창업 교육에서 사업계획 작성-회계세무-마케팅-자금 조달을 실습하고 지역자활센터 전문가와 자활기업 대표가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과제3: 자활기업 자립 컨설팅 및 판로 지원 - 인건비 지원 종료(3년) 자활기업 대상으로 사업 모델 개선-시장 확대-수익성 제고-브랜드 개발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조달 우선구매와 민간 판로를 확대한다 자립 컨설팅, 공공조달 우선구매, 직거래장터, 온라인몰(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온라인몰 활용), 민간 판로(입점 수수료 지원)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과제4: 사업자금 용자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 자활기업 대상 무담보-무보증 저리 사업자금 용자를 제공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회계세무-마케팅-인사노무-재무)을 제공한다 사업자금 용자는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연 기업에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은 초기(회계세무 중점), 성장기(마케팅 중점), 성숙기(재무투자 중점)로 차별화하여 연 기업에 제공한다.

과제5: 자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기초자치단체별 자활기업 협의회(이상 기업)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공동사업-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광역 단위 연합회와 연계하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정기 모임, 공동 구매-판매-마케팅 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역량 강화 교육(회당)을 제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 차 기초단체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예비자활기업 참여자를 육성한다.

효과2: 자활근로에서 자활기업 전환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연간 자활기업 창업을 달성한다.

효과3: 생존율 50%에서 80%로 제고하고 공공조달 우선구매액으로 확대한다.

5. 예산

4년총액: 800억원, 연평균 2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자활기업 육성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ME08 사회적기업 지원: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공공조달-경영 컨설팅-판로 지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연계한다.

ME12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촉진: 자활기업이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의 핵심 대상으로 우선구매 실적을 확대한다.

068 간단정책카드 ME10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마을 에너지 자립 실현
- 가치2: 태양광 발전 수익의 주민 배당과 복지사업 활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가치3: 도시재생사업 이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립 운영 기반 확보
- 가치4: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정책의 핵심이며 건물에너지 관리-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을 주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0
- 정책명: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관리협동조합, 탄소중립, 태양광발전, 에너지자립, 주민출자형, 햇빛연금, 도시재생, 에너지효율화, 탄소저감, 마을공동체,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지붕-옥상에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4년간(총 5MW)를 구축한다.
- 목표2: 거점시설 에너지효율화(단열-보일러-LED-이중창)를 추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하고 연간 탄소저감량 3,000톤CO2를 달성한다.
- 목표3: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사업(무료급식-마을버스-장학금)에 활용하여 연간 햇빛연금 실현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립 운영을 보장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 거점시설(마을회관-경로당-마을창고) 지붕-옥상에 50~100k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주민 출자 방식으로 설치하여 전력 생산-판매 수익을 확보한다
- 과제2: 햇빛연금 실현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형(수익 50% 배당)과 마을 공동사업형(무료급식-마을버스-장학금-경로당 운영비)으로 배분하여 햇빛연금을 실현한다
- 과제3: 거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 - 노후 거점시설의 외벽-지붕-바닥 단열, 고효율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전환, 이중창 설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한다

과제4: 탄소저감 활동 전개 - 유희부지 녹지 조성(연 1,000그루), 전기차 충전소 설치(거점시설 주차장), 자전거 공유 시스템 운영, 분리수거 강화를 통해 마을 단위 탄소저감을 추진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민과 함께 녹지 조성-자전거 운영-분리수거를 실행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전기차 충전기와 자전거를 지원하며 탄소저감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과제5: 탄소중립 교육 및 인식 확산 - 주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회당)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탄소중립 마을 선포식,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주민 인식을 전환하고 참여를 확대한다 기후위기-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여주 구양리-신안군 등 우수 마을 견학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주민 참여 선언문을 채택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총발전용량 5MW를 구축하고 안정적 자립 수익원을 확보한다.

효과2: 4년 차 연간 햇빛연금 달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효과3: 거점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하고 난방비-전기로 절감으로 운영비 부담을 경감한다.

5. 예산

4년총액: 960억원, 연평균 24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구비 25%

6. 연계정책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유형으로 조합원 교육-운영 컨설팅-법인 설립 지원을 연계한다.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의 핵심 주체로 태양광-에너지효율화-탄소저감을 선도한다.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기본조례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을 명시하여 안정적 법적 근거와 예산 체계를 구축한다.

069 간단정책카드 ME11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0. 핵심가치

- 가치1: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운영하여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
- 가치2: 장기위탁으로 전문 활동가의 안정적 고용과 사업 연속성을 보장
- 가치3: 실질적 민관협치 거버넌스로 행정 종속에서 벗어나 자율적 생태계를 구축
- 가치4: 중간지원조직이 기후-환경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적 기후정의 정책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1
- 정책명: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 대영역: 경제
- 분야: 조직육성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민간위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버넌스, 자율성, 전문성, 민관협치, 당사자주도, 장기위탁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중간지원조직 중 직영-출연기관 형태 9개를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4년간 광역의 당사자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목표2: 광역 전체에 5년 장기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3: 광역에 민관협치 운영위원회(광역 30%+당사자 40%+전문가 30%)를 설치하여 예산-사업-인사 의결권을 부여하고 실질적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직영 - 출연기관 민간위탁 전환 - 광역 직영-출연기관 중간지원조직 8~9개를 현황 조사와 전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사회적경제 전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당사자 네트워크에 단계적으로 위탁한다
- 과제2: 5년 장기위탁 계약 체결 - 광역에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재위탁 최대 2회(총 15년)를 보장하는 표준 위탁계약서를 마련한다
- 과제3: 민관협치 운영위원회 설치 - 정기회의와 위원 1/3 이상 요청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의결은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고 회의록-의결 사항-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과제4: 당사자 조직 주도성 강화 -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다 운영위원회 40% 당사자 조직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연석회의와 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며 당사자 조직 리더 교육과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과제5: 광역 - 기초 협의체 운영 -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역할 분담(광역: 정책개발-교육-네트워크, 기초: 현장지원-컨설팅-창업지원)을 명확히 하며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간 광역을 전환하여 당사자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효과2: 전문 활동가의 안정적 고용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업 기획 역량을 축적한다.

효과3: 행정 일방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관협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5. 예산

4년총액: 400억원, 연평균 10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50%

6. 연계정책

ME02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발전계획의 핵심 과제로 민간위탁-장기위탁-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한다.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민간전환된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기초 지원과 정책 개발-교육-네트워크를 총괄한다.

ME0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당사자 조직이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체가 되어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당사자 주도 생태계를 강화한다.

070 간단정책카드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0. 핵심가치

- 가치1: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실현
- 가치2: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여 돌봄-교육-환경-문화 분야의 지역 문제를 해결
- 가치3: 마을공동체 일자리의 협동조합 전환으로 지역순환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
- 가치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녹색일자리-에너지관리-환경정비 분야를 포함하여 기후전환 고용을 확대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E12

정책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영역: 경제

분야: 일자리-소득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핵심키워드: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취약계층고용,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인건비지원, 지역순환경제, 협동조합전환,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확대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연 10개씩 늘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을 연 발굴하고 5년 지원 종료 후 2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 목표2: 마을돌봄-마을학교-마을카페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에게 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4대보험 가입과 협동조합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여 연 마을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한다.
- 목표3: 청년-노인-중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무교육 연과 경력인정 시스템으로 일자리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을 연 발굴하고 청년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연계하며 사회적기업 자립 컨설팅과 판로 지원을 병행한다.
- 과제2: 마을공동체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마을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며 2년 차 이후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 과제3: 청년 - 세대별 특성에 맞는 직무를 설계하고 세대 간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경험 전수와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노인-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과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 돌봄일자리 연계를 추진한다

과제4: 일자리 질 향상 체계 구축 - 최저임금 이상 보장과 직무교육 연 제공, 경력인정 시스템 구축, 4대보험 가입 지원(사업주 부담금 50%)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전문성-협동조합 운영 등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표준계약서 보급)한다.

과제5: 사회서비스 분야 다각화 - 돌봄-교육-환경-문화 분야별 일자리를 확대한다 분야별 우수사례를 연 발굴하여 확산하고 지역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분야를 개척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간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전환율을 높여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2: 연 마을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동가 처우를 개선하여 마을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효과3: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로 취약계층 고용률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한다.

5. 예산

4년총액: 240억원, 연평균 6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30%, 시군구비 30%

6. 연계정책

ME06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 마을공동체 일자리의 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과 초기 운영 지원을 연계한다.

ME08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함과 인건비 지원 확대로 고용을 안정화한다.

MS0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돌봄 일자리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활동가 처우를 개선한다.

071 간단정책카드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활동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활동 기반을 제공
- 가치2: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조례와 기회소득으로 공식 인정하여 직업 정체성을 확립
- 가치3: 지역화폐 연계로 역내 소비를 유도하여 마을활동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가치4: 기회소득에 디지털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E13

정책명: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대영역: 경제

분야: 일자리-소득

추진주체: 광역의원

핵심키워드: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활동비지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례제정, 지역화폐, 경력 인정, 사회적가치인정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활동가 기회소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급 대상-금액-조건-경력 인정 체계-예산 확보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다.
- 목표2: 활동 시간(월 이상)에 따라 월 30~ 차등 지급하고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 목표3: 마을활동가 등록 시스템과 경력 DB를 구축하여 활동 경력을 공식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직-재취업 시 경력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조례 제정 - 광역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 발의하여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 대상-금액-조건-경력 인정 체계-예산 확보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다
- 과제2: 기회소득 지급 체계 구축 - 분기별 지역화폐로 3개월치를 일괄 지급하고 활동 시간 인증(조직 확인서 +중간지원조직 검증)과 교육 이수(총)를 지급 조건으로 한다.
- 과제3: 마을활동가 등록 및 경력 DB 구축 - 웹 플랫폼(PC-모바일)으로 회원가입-활동 등록-지급 신청-경력 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활동 분야별(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활동 경력-교육 이수-수급 내역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활동가 규모-분야별 분포-지속률-만족도 등

통계를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한다.

과제4: 교육 및 역량 강화 - 기본교육(회당, 총)으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민주주의와 협치를 다루고 분야별 심화교육(마을돌봄-마을학교-마을미디어-협동조합 운영 등)을 선택 이수하도록 한다. 광역-기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평생학습관이 교육을 제공하고 광역 단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초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과제5: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역내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맹점을 확대하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골목상권-사회적경제 조직 연계를 강화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기회소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정적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 광역 조례 제정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효과2: 활동 시간에 비례한 공정한 보상 체계로 활동 의욕을 높이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역내 소비를 유도한다.

효과3: 마을활동 경력을 공식 인정하여 이직-재취업 시 경력 증빙으로 활용하고 정책 근거 데이터를 확보한다.

5. 예산

4년총액: 300억원, 연평균 75억원

재원: 시도비 90%, 시군구비 10%

6. 연계정책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기회소득 지급과 4대보험 지원-경력 DB 구축을 연계하여 마을활동가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기회소득 수급자를 경력 DB에 자동 등록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마을활동가 경력 DB와 공식 경력 인정 체계를 통합 운영하여 활동 시간 인증 데이터를 경력 DB에 연동하고 경력증명서를 통합 발급한다.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과 기회소득 지급을 연계하여 교육 이수 의무를 양성 교육과정으로 충족하고 자격 인증 시 기회소득 지급을 우대한다.

072 간단정책카드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직업 정체성을 확립
- 가치2: 경력을 공식 인정하여 이직-재취업 시 경력 증빙을 가능하게 함
- 가치3: 처우 개선으로 장기 활동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축적하여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
- 가치4: 활동가 경력에 디지털 인증을 적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4
- 정책명: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 대영역: 경제
- 분야: 일자리-소득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마을활동가, 처우개선, 경력인정, 4대보험, 두루누리, 교육훈련, 포상제도, 휴식권, 경력증명서, 활동비가이드라인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비 가이드라인-4대보험 지원-경력증명서 발급-교육훈련-포상인증-휴식권 보장을 제도화한다.
- 목표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4대보험 가입률을 60%까지 높이고 활동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목표3: 경력 DB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활동가 경력을 공식 인정하고 교육훈련-포상인증-휴식권 보장으로 마을활동가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조례 제정 - 광역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마을활동가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 조례를 발의하여 활동비 가이드라인-4대보험 지원-경력증명서 발급-교육훈련-포상인증-휴식권 보장-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한다
- 과제2: 4대보험 지원 및 활동비 가이드라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미만 사업장, 보험료 80% 지원)을 활용하고 광역-기초가 나머지 20%를 추가 지원하여 마을활동가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가를 고용하여 두루누리를 신청하고 광역-기초 추가 지원을 연계하며 활동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과제3: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 웹 플랫폼(PC-모바일)으로 마을활동가 등록-활동 이력-교육 이수-포상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광역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명의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공공 일자리 채용 시 마을 활동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를 추진하여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도록 한다.

과제4: 교육훈련 및 포상 - 인증 제도 - 기초교육(연,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퍼실리테이션-갈등조정)과 심화교육(사업기획-회계-마케팅-조직관리)과 전문교육(마을재생-사회적금융-협동조합)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과제5: 휴식권 보장 및 소진 방지 - 조례에 휴식권 보장을 명시하고 활동 공간(사무실-회의실)과 장비(노트북-프로젝터)를 지원하여 활동 환경을 개선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활동가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 광역 조례 제정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효과2: 까지 4대보험 가입률 60%를 달성하여 마을활동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효과3: 4년간 경력증명서 2,000건을 발급하여 이직-재취업 시 경력 증빙을 가능하게 하고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5. 예산

4년총액: 150억원, 연평균 37.5억원

재원: 시도비 80%, 시군구비 20%

6. 연계정책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기회소득 지급과 4대보험 지원-경력 DB 구축을 연계하여 마을활동가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기회소득 수급자를 경력 DB에 자동 등록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경력 DB 구축과 공식 경력 인정 체계를 통합 운영하여 경력증명서를 통합 발급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재를 공동 추진한다.

MC07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과 경력 인정을 연계하여 교육 이수 내역을 양성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 자격 인증 시 처우개선 혜택을 연계한다.

073 간단정책카드 ME15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가치2: 사회문제 해결형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
- 가치3: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
- 가치4: 청년 창업 지원에 녹색-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기후전환 청년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5
- 정책명: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 대영역: 경제
- 분야: 일자리-소득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청년창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창업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공유오피스, 판로지원

2. 정책목표

- 목표1: 만 19~39세 청년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교육-멘토링-공간-판로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2: 사전 교육과 밀착 멘토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조달-박람회-온라인 플랫폼 판로를 연계하여 창업 3년 생존율 70%를 달성한다.
- 목표3: 4년간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증 30개를 확보하여 청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창업자금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창업 아이템을 심사하고 지원 용도(시설비-운영비-인건비)를 명확히 하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3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과제2: 창업교육 및 멘토링 운영 - 기초과정(사회적경제 개념-조직 형태-사업 기획)과 심화과정(회계-세무-마케팅-조직 관리)으로 구성된 교육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전문가-선배 창업자가 1대1 멘토링을 이상 제공하고 동료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 모임-워크숍을 운영한다.
- 과제3: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제공 -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자 전용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1년간 무상(이후 저렴한 임대료)으로 사무공간-회의실-장비-인터넷을 제공한다 입주 조직 간 협업-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사업 발굴을 지원하며 이후 독립 공간 마련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과제4: 판로지원 및 시장 진입 지원 - 공공조달 우선구매를 연계하고 나라장터 등록-입찰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경제 박람회-온라인 플랫폼 참여와 대기업 CSR 연계 B2B 판로를 개척한다 청년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품-서비스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과제5: 창업 후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증-등록 절차를 컨설팅하고 창업 3년 이내 조직에 경영진 단-회계-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소셜임팩트펀드-크라우드펀딩 연계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우수 창업 조직을 포상하여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4년간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창업 포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 창업을 촉진한다.

효과2: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선배 멘토-동료 네트워크를 통해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

효과3: 초기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입주 조직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협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80억원, 연평균 2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0%, 시군구비 4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청년 창업 조직의 협동조합 전환-등록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교육-컨설팅-판로를 연계하여 조직 형태 선택 폭을 넓힌다.

ME08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 창업 조직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판로-경영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074 간단정책카드 ME16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가치2: 유연근무 환경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
- 가치3: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 가치4: 중장년 재취업에 녹색전환 직종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가 핵심 목표는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6
- 정책명: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 대영역: 경제
- 분야: 일자리-소득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중장년재취업,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일경험, 경력상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유연근무, 경력활용

2. 정책목표

- 목표1: 만 40~64세 중장년 및 경력단절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특화 직업훈련-일경험-경력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2: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에서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유연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목표3: 4년간 직업훈련-재취업-정규직 전환율 50%를 달성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룬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사회적경제 분야 직업훈련 제공 - 기초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훈련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교재비-식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여성가족부 새일센터를 연계한다.
- 과제2: 협동조합 - 마을기업 일경험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3~6개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월 150~지급하며 정규직 전환 시 채용장려금 1인당 조직에 지급한다
- 과제3: 경력상담 및 설계 지원 - 중장년-경력단절 주민의 경력을 분석하고 재취업 경로를 설계하며 1대1 경력상담을 제공한다 경력 DB를 구축하여 구인처와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능기부-강사 양성 프로그램

램으로 경력 활용을 다각화한다.

과제4: 창업 지원 및 네트워킹 -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상호 지원을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다

과제5: 유연근무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우수 조직을 포상하고 사례를 확산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택-탄력근무를 유도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연차별 확대(→)로 4년간 이수시키고 사회적경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효과2: 4년간 일경험에 참여하고 정규직 전환율 50%를 달성하여 안정적 재취업 경로를 확보한다.

효과3: 경력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여 단순 노무직 배치를 지양하고 참여자 만족도 85%를 달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62억원, 연평균 15억 5천만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30%, 시군구비 30%

6. 연계정책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자의 협동조합 창업-취업을 연계하고 협동조합 교육-컨설팅을 공유하여 조직 형태 선택 폭을 넓힌다.

ME08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에서의 일경험-취업을 연계하고 중장년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기업 역량을 강화한다.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고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여 고용 안정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높인다.

075 간단정책카드 ME17 공동체 배당제 도입

0. 핵심가치

- 가치1: 공동체 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을 증대
- 가치2: 공동체 활동 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 가치3: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
- 가치4: 공동체 배당이 녹색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7
- 정책명: 공동체 배당제 도입
- 대영역: 경제
- 분야: 일자리-소득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공동체배당, 주민배당, 수익배분, 배당기금, 사회적가치,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동체경제, 소득보장, 주민참여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의원이 공동체 배당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협동조합-마을기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목표2: 마을공동체가 창출한 경제적 수익(마을기업-협동조합 매출, 공유자산 수익 등)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공동체 활동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 목표3: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체 배당기금을 조성하여 배당 재원을 지원하고 4년간 마을공동체에서 3,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공동체 배당제 조례 제정 - 공동체 배당제의 정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와 배당 대상(해당 마을 거주 주민, 공동체 활동 참여자, 협동조합 조합원 등)을 규정한다
- 과제2: 공동체 수익 배당금 지급 - 마을기업-협동조합 수익의 10~30%를 배당 재원으로 적립하고(주민총회 결정) 균등배당 50%와 참여 기여 배당 50%를 병행한다 배당금 지급 기준(거주 기간, 활동 참여 횟수, 출자금 납부 등)을 설정하고 또는 분기별로 주민총회 의결 후 지급한다.
- 과제3: 광역 공동체 배당기금 조성 - 배당 실적 우수 마을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금 운용위원회가

기금 조성-운용을 심의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연 출연하여 공동체 배당기금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적립금의 50~100%를 매칭 지원한다

과제4: 배당금 지급 투명성 확보 - 배당 자원-지급 내역을 주민총회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보고를 실시하며 외부 감사(광역 센터 또는 회계사)를 의무화한다 허위 신청 시 환수와 3년간 수령 제한을 적용하고 배당 기준-방식 변경 시 주민총회 의결을 필수로 한다.

과제5: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 공동체 배당제 교육(공동체 대표-활동가-주민)과 배당금 산정-지급 실무 교육(회계-세무-법률)을 실시한다 우수사례를 연 마을에서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며 배당제 운영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을 공유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공동체 배당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당 체계를 구축한다.

효과2: 공동체 활동 참여자에게 실질적 경제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한다.

효과3: 안정적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매칭 방식으로 공동체의 자체 수익 창출 동기를 강화한다.

5. 예산

4년총액: 35억원, 연평균 8억 7,500만원

재원: 시도비 90%, 시군구비 10%

6. 연계정책

ME13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마을활동가 기회소득과 공동체 배당제를 통합 운영하고 활동 참여 기여도를 배당 기준에 반영하여 마을활동가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자생기금 일부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금 조성-운영 체계를 공유하여 배당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협동조합 수익을 조합원-주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배당 모델을 확산하여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076 간단정책카드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0. 핵심가치

- 가치1: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자생력을 확보
- 가치2: 주민 주도의 공동체자산을 형성
- 가치3: 마을경제 순환 기반을 구축
- 가치4: 자생기금이 환경사업에 투자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8
- 정책명: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 대영역: 경제
- 분야: 자산-금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마을기금, 자생기금, 공동체자산, 주민출자, 기금운영, 투명성, 자립, 마을경제, 공공매칭, 주민회비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의원이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정의-구성 방법-운영 원칙-투명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목표2: 주민 회비-출자-수익 적립-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 매칭 지원(50~100%)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마을 자립 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 목표3: 4년간 마을에서 총 규모의 자생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 명의 통장-회계 공개-외부 감사로 투명성 100%를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자생기금 지원 조례 제정 - 마을공동체 자생기금의 정의(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소유 기금)와 조성 방법(주민 회비, 출자, 수익 적립, 기부금, 공공 매칭)을 규정한다 공동체 명의 통장 의무화와 회계 공개와 외부 감사를 조례에 명시하고 기초의원이 발의하여 기초의회에서 의결한다.
- 과제2: 자생기금 조성 지원 - 주민 회비와 주민 출자와 수익 적립-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주민 조성액의 50~100%를 공공 매칭으로 지원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소액부터 시작하여 참여 부담을 낮춘다.
- 과제3: 투명성 - 운영체계 확보 - 공동체 명의 통장(법인 또는 2인 공동 명의)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또는 주

민중회에서 회계를 공개한다 중간지원조직 또는 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용 시 환수-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과제4: 교육 - 컨설팅-네트워크 - 기금 조성 교육(회비-출자-적립 방법)과 회계 교육(장부 작성-공개 방법)을 실시한다 우수사례를 연 마을에서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금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을 공유한다.

과제5: 갈등 예방 - 표준안 보급 -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기금 조성-운영 관련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표준안에 마을회원 권리-의무와 운영 절차와 기금 규정을 포함하고 상생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주민-이주민 합의를 형성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기금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기금 조성-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효과2: 4년간 마을에서 평균 총 자생기금을 조성한다.

효과3: 투명성 확보율 100%를 달성하여 주민 신뢰를 구축하고 기금 조성의 선순환을 만든다.

5. 예산

4년총액: 8억원, 연평균 2억원

재원: 시도비 40%, 시군구비 60%

6. 연계정책

ME17 공동체 배당제 도입: 자생기금 일부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금 조성-운영 체계를 공유하여 공동체 경제 순환을 강화한다.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자생기금을 사회적금융 투자 재원과 연계하고 마을투자 수익을 기금에 적립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자생기금을 공동체 토지신탁 출자에 활용하고 토지신탁 수익을 마을기금에 환원하여 공동체자산 형성을 촉진한다.

077 간단정책카드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금융 소외 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향상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
- 가치2: 지역에서 조성한 기금이 지역에 투자되어 지역경제 순환을 실현
- 가치3: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호혜금융을 구축
- 가치4: 사회적금융이 녹색투자-에너지전환-환경사업에 마을 자본을 연결하여 기후전환 금융을 활성화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19
- 정책명: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 대영역: 경제
- 분야: 자산-금융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소액대출, 저리융자, 임팩트투자, 인내자본, 사회적가치기금, 중개기관, 지역 금융, 호혜금융,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의원이 사회적금융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금융의 정의-기금 조성-중개기관 운영-지원 대상과 방법을 법제화한다.
- 목표2: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소액대출-인내자본 투자-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 목표3: 4년간 소액대출 100건과 인내자본 투자 조직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율 90% 이상을 달성하여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정착시킨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사회적금융 활성화 조례 제정 - 사회적금융의 정의(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금융)와 지원 대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을 규정한다 지원 방법(소액대출 연 1~3% 저리, 무담보-연대보증, 인내자본 투자)과 중개기관 설립-운영 근거(법인 설립, 운영위원회, 심사 기준)를 조례에 명시한다.
- 과제2: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 - 총 기금을 조성하여 대출 70%와 투자 20%와 운영비 10%로 배분한다 광역비 30%와 기초비 60%와 기부금 10%으로 재원을 구성하고 대출 회수금을 재투자하여 4년 후 실질 운용 규모를 30~으로 확대한다.

과제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설립 - 운영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중개기관을 설립하고 전담 인력(대출-투자 심사, 경영컨설팅)을 배치한다 신용평가 대신 사업계획-사회적 가치 평가로 관계 기반 심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을 연계하며 상환 유예-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과제4: 소액대출 -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여 주민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대출 이자와 투자 수익을 기금에 재적립하여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과제5: 교육 - 컨설팅 및 네트워크 - 사회적금융 교육과 대출-투자 조직 대상 경영컨설팅(회계-마케팅-경영)을 제공한다 우수사례를 연 조직에서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회연대은행-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전국 사회적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금융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효과2: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회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효과3: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출 상환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5. 예산

4년총액: 25억원, 연평균 6억 2,500만원

재원: 시도비 30%, 시군구비 6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자생기금을 사회적금융 재원과 연계하고 주민 회비-출자금과 사회적금융 기금의 상호보완으로 마을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사회적금융을 마을펀드 플랫폼에 통합하고 크라우드펀딩과 소액대출-투자를 연계하여 주민 참여형 금융 생태계를 확장한다.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협동조합 초기 자금을 사회적금융으로 지원하고 조합원 출자와 소액대출을 병행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운영을 촉진한다.

078 간단정책카드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직접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순환을 주도
- 가치2: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금융 민주화를 실현
- 가치3: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투자를 활성화
- 가치4: 마을펀드 오픈플랫폼이 정책의 핵심이며 투명한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마을투자를 실현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E20

정책명: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대영역: 경제

분야: 자산-금융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마을펀드, 크라우드펀딩, 오픈플랫폼, 소액투자, 주민투자, 온라인투자, 사회적가치, 임팩트투자, 지역자본, 투명성,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의원이 마을펀드 플랫폼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와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목표2: 기초자치단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을공동체-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프로젝트를 등록-심사-투자-배당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 목표3: 주민이~ 소액 투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4년간 투자자 2,과 투자 총액 달성하고 지역경제 순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연결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펀드 플랫폼 조례 제정 - 마을펀드 플랫폼의 정의(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특화)와 투자 대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프로젝트)을 규정한다 투자자 보호 규정과 플랫폼 운영 기준(공정성-투명성-보안 기준,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 상한)을 조례에 명시한다.
- 과제2: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운영 - 웹-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회원가입-프로젝트 등록-투자-배당 기능을 구현하고 보안 체계(SSL 인증, 개인정보 암호화, 금융거래 보안)를 구축한다 결제 시스템(은행 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 에스프로 적용)을 연동하고 플랫폼 운영팀(시스템 관리, 프로젝트 심사, 마케팅) 배치한다

다.

과제3: 프로젝트 등록 - 심사·펀딩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업계획서-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사업 타당성-사회적 가치-재무 건전성-환원 계획을 평가한다

과제4: 투자 관리 - 배당-임팩트 측정 - 투자금 집행 내역을 분기별 공개하고 중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사업 수익 발생 시 투자 비율대로 연 3~5% 배당한다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일자리 창출-환경개선-돌봄 제공 등 정량-정성 평가)하고 투자수익률-배당금액-사회적 가치를 플랫폼에 공개한다.

과제5: 교육 - 홍보 및 생태계 조성 - 투자자 교육(크라우드펀딩-투자 리스크-사회적 가치)과 프로젝트 제안자 교육(사업계획서-재무관리-펀딩 전략)을 실시한다 우수 프로젝트를 언론-SNS로 홍보하고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며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효과2: 안정적이고 편리한 온라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투자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효과3: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펀딩 과정으로 프로젝트 신뢰성을 높이고 펀딩 성공률 70% 이상을 달성한다.

5. 예산

4년총액: 12억원, 연평균 3억원

재원: 시군구비 80%, 시도비 20%

6. 연계정책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사회적금융 대출-투자를 마을펀드 플랫폼과 연계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금융을 통합하여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확장한다.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자생기금을 마을펀드 플랫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주민 회비-출자금과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여 마을 재정 기반을 다변화한다.

ME17 공동체 배당제 도입: 마을펀드 투자 수익을 공동체 배당으로 환원하고 배당 경험이 재투자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배당-재투자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079 간단정책카드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0. 핵심가치

- 가치1: 토지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영구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가치2: 재판매 가격 제한으로 시세 차익을 환수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 가치3: 공동체 토지 보유로 공동체자산을 축적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
- 가치4: 토지신탁 자산화에 녹색공간 확보와 생태복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E21

정책명: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대영역: 경제

분야: 자산-금융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공동체토지신탁, CLT, 자산화, 저렴주택, 토지공유, 영구임대, 토지-건물분리,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주거안정성, 공동체자산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의원이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비영리 신탁 설립 요건과 3자 균형 이사회 구성 원칙과 국공유지 장기 임대(30~99년) 근거를 법제화한다.
- 목표2: 기초자치단체가 도시 1개와 농촌 CLT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10필지를 확보(국공유지 우선 활용)하고 시세 70% 이하 저렴주택 30호를 건설한다.
- 목표3: CLT가 토지를 영구 소유하고 입주자에게 99년 장기 임대하며 입주자는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되 재판매 시 가격 제한(물가상승률만 인정)을 적용하여 지속 거주율 90% 이상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CLT 활성화 조례 제정 - 공동체토지신탁(CLT)을 비영리 신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입주자에게 장기 임대하며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주택 공급 모델로 정의하고 비영리 신탁 설립 요건(3자 균형 이사회: 공공-입주자-주민 각 1/3)을 규정한다
- 과제2: CLT 시범사업 추진 - 도시 1개(도시재생지역)와 농촌 1개(귀촌 수요 지역)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국공유지 우선 활용과 민간 토지 매입으로 총 10필지를 확보하며 CLT 신탁 법인(비영리 사단법인) 2개를 설립한다
- 과제3: 토지 - 건물 분리 소유 구조 운영 - CLT가 토지를 영구 소유하고 입주자에게 99년 장기 임대하며 입

주자는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되 증개축-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를 운영한다 재판매 시 가격을 물가상승률만 인정하여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환수분을 CLT에 재투자하며 입주자 자격은 소득 기준과 마을주민 우선으로 적용한다.

과제4: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 구축 - 이사회에서 운영 계획-예산-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입주자 총회에서 공동체 규약을 제정하며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 행사, 돌봄-교육 협력)을 운영한다.

과제5: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 LH공사-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과 사회적금융을 연계하여 건설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자 출자금과 기부금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CLT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세제 혜택과 국공유지 활용으로 초기 사업 추진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효과2: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된 CLT 모델을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3: 영구 저렴성을 유지하면서 입주자의 건물 소유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5. 예산

4년총액: 35억원, 연평균 8억 7천 5백만원

재원: 시도비 30%, 시군구비 50%, 국비 10%, 민간기타 10%

6. 연계정책

ME20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CLT 프로젝트를 마을펀드 플랫폼에 등록하여 주민 소액 투자를 유치하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건설 재원을 조성하여 CLT 사업의 자금 조달을 다변화한다.

MS17 공동체주택 활성화: CLT 방식을 공동체주택에 적용하여 토지-건물 분리 소유로 영구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와 공동체성 형성을 연계한다.

ME19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CLT 건설비를 사회적금융으로 조달하여 저리 대출과 인내자본 투자를 연계하고 마을 단위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

080 간단정책카드 ME22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0. 핵심가치

- 가치1: 재정 자율성 확보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
- 가치2: 주민 주도 마을 문제 해결로 현장 밀착형 자치를 구현
- 가치3: 중앙-광역-기초-읍면동 4단계 재정분권을 완성
- 가치4: 재정분권에 디지털 예산관리를 활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22
- 정책명: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 대영역: 경제
- 분야: 자산-금융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재정분권, 마을자치, 주민참여예산, 자율재정, 읍면동예산, 마을세, 지방교부세, 재정자주권, 세입분권, 기초재정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의원이 마을자치 재정분권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동 자율예산 의무 배정 근거와 주민참여예산 5% 이상 확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목표2: 읍면동당 연 수준의 자율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재정위원회가 편성-집행하며 분기별 주민 공개 보고회를 운영한다.
- 목표3: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총회 최종 의결권을 보장하여 4년간 재정자주권 기반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자치 재정분권 조례 제정 - 읍면동 자율예산 의무 배정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 5% 이상 확보를 규정하며 재정분권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마을기금 기부금 세액 공제(기부금의 30%) 지원 근거를 포함하며 광역-기초-읍면동-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 과제2: 읍면동 자율예산제 도입 - 사용 용도를 마을 현안 해결-공유공간 운영-마을 행사-긴급 지원으로 규정하고 시범 읍면동 10개에서 시작하여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과제3: 주민참여예산 결정권 강화 - 주민총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여 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을

최종 결정하고 참여예산 비율을 3%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운영위원회 주민 위원을 60% 이상으로 구성(공개 모집, 추천 또는 선출)하고 온라인 투표(모바일 앱-웹 투표 시스템)를 병행하여 참여를 확대한다.

과제4: 마을기금 조성 및 마을세 검토 - 광역 마을기금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세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법적 근거-세율-징수 방법 검토)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에 마을세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공청회-숙의형 토론회-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공론화를 진행한다.

과제5: 재정 운영 역량 강화 - 재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예산 편성-회계-감사)을 운영하고 전문가 파견 컨설팅을 지원하며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예산서-집행 내역-성과 온라인 공개)을 구축한다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추가 예산 지원)를 제공하여 자율예산 운영의 질을 높인다.

4. 기대효과

효과1: 읍면동 자율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재정분권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효과2: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현장 밀착형 자치를 구현한다.

효과3: 형식적 참여를 극복하고 주민의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하여 참여 동기를 강화한다.

5. 예산

4년총액: 400억원, 연평균 100억원

재원: 시도비 50%, 시군구비 30%, 국비 20%

6. 연계정책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비율 5% 확대와 주민총회 최종 의결권을 연계하여 재정분권과 참여예산의 상호 강화로 주민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재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율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재정 자율성 확보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ME18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마을기금과 자율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광역 매칭 지원으로 기금 조성을 촉진하여 자생적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081 간단정책카드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0. 핵심가치

- 가치1: 유통 과정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단위 탄소중립에 기여
- 가치2: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 가치3: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 가치4: 탄소저감 로컬푸드가 정책의 핵심이며 먹거리 이동거리 축소-지역순환-친환경 농법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23
- 정책명: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 대영역: 경제
- 분야: 지역순환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로컬푸드, 탄소저감, 푸드마일리지, 직매장, 공공급식, 생산자-소비자연대, 지역순환경제, 먹거리기본권, 도시농업, 푸드플랜,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고 공동 선별-포장 센터를 구축하여 생산자 희망가격 80%를 보장하고 수수료 12% 이하를 유지한다.
- 목표2: 학교급식 로컬푸드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급식에 우선구매를 적용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3: 생산자협동조합 10개를 육성하여 참여 농가 500가구를 확보하고 연 판매액 탄소배출 연 1만 톤 감축을 달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및 유통 인프라 구축 - 반경 30km 이내 농산물을 당일 배송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공동 물류 체계(냉장차량-저온저장고)를 구축하며 직매장별 특화 품목을 선정한다.
- 과제2: 공공급식 로컬푸드 확대 -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어린이집 급식에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적용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기본권 조례에 공공급식 우선구매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며 품질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과제3: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 강화 - 로컬푸드협동조합 10개를 육성(농가 이상 규모)하고 생산자 교육(재배 기술-품질관리-마케팅)을 실시하며 공동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농협과 협력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우수 생산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제4: 먹거리 기본권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로컬푸드 육성과 먹거리 기본권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농업인-소비자-전문가)를 설치하며 5년 단위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생산자-소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격 조정-품질 개선-신뢰를 구축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연합회로 경험을 공유한다.

과제5: 도시농업 연계 및 탄소저감 교육 - 도시텃밭을 조성(공원-학교-아파트)하고 학교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도시농업 수확물을 직매장에서 연계 판매한다 마을 텃밭과 학교 텃밭을 연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탄소 발자국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인식을 제고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거리를 단축하여 푸드마일리지와 탄소배출을 감축한다.

효과2: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여 생산자 경영을 안정시키고 학생과 공공기관 이용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효과3: 개별 농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출하-마케팅으로 교섭력을 강화하며 생산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한다.

5. 예산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시군구비 60%, 시도비 30%, 국비 10%

6. 연계정책

MS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도시텃밭과 학교 텃밭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고 텃밭 수확물을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MS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로컬푸드의 푸드마일리지 감축과 에너지자립마을의 탄소저감을 연계하여 마을 단위 탄소중립의 통합 전략을 구성한다.

ME24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한다.

082 간단정책카드 ME24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
- 가치2: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
- 가치3: 생산-소비-재투자의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
- 가치4: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골목상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24
- 정책명: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 대영역: 경제
- 분야: 지역순환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지역화폐, 골목상권, 지역순환경제, 소상공인,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마일리지, 로컬크레딧, 지역 경제, 소비촉진,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연으로 확대하고 캐시백 10%(골목상권 15%)와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양측에 혜택을 제공한다.
- 목표2: 골목상권 가맹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상인회 35개를 결성하여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 목표3: 4년간 골목상권 매출 20%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순환률 60%를 달성하여 대형마트-온라인 소비 집중을 지역 소비로 전환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 모바일 앱과 편의점-은행 현금 충전(고령층 배려)을 병행하고 캐시백 비율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용률을 안정시킨다.
- 과제2: 골목상권 가맹점 집중 육성 - 가맹점 매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형체인 편중을 방지하고 업종별 균형 모집과 골목상권 우대를 실시한다. 4년간 가맹점을(연)로 확대하고 수수료 3~5%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IC카드-QR결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한다
- 과제3: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 - 상인회 35개를 결성-지원하고 골목의 시설-간판을 정비하며 골목축제-온라인 홍보-SNS 채널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상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골목별 특화

전략(먹거리-수공예-문화 등)을 수립하며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골목 행사를 기획한다.

과제4: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플랫폼 구축 - 통합 앱(충전-결제-적립-쿠폰)을 구축하고 고령 상인의 결제 시스템 교육(연)을 실시하며 로컬 온라인몰을 개설하여 골목 상품의 배송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현장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디지털 서포터를 배치하여 상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과제5: 제도 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화폐-골목상권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위원회와 소상공인 협의회를 운영하며 중앙정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다 조례에 캐시백 비율-가맹점 기준-수수료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우대 캐시백으로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한다.

효과2: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골목상권에 소비를 집중시킨다.

효과3: 골목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고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방문 동기를 창출한다.

5. 예산

4년총액: 300억원, 연평균 75억원 (지역화폐 발행액 2,000억원은 충전금 순환으로 별도)

재원: 시군구비 50%, 시도비 30%, 국비 20%

6. 연계정책

ME23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과 로컬푸드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한다.

ME12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지역화폐 플랫폼과 공유경제 플랫폼을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 공유와 소비 순환의 통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083 간단정책카드 ME25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0. 핵심가치

- 가치1: 유휴 자원의 공유로 과소비를 줄이고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에 기여
- 가치2: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를 향상
- 가치3: 공유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신뢰와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강화
- 가치4: 공유경제가 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해 소비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경제 오픈플랫폼이 정책의 핵심이며 비영리 디지털 플랫폼과 주민 데이터 주권을 구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E25
- 정책명: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 대영역: 경제
- 분야: 지역순환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공유경제, 카셰어링, 공간공유, 물품공유, 시간교환, 플랫폼협동조합, 자원순환, 공동소유, 공동체 경제, 지속가능소비, 기후정의,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오픈소스 기반 통합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읍면동에 보급하며 카셰어링-공간공유-물품공유-시간교환을 통합 운영한다.
- 목표2: 플랫폼협동조합 10개를 육성하여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 목표3: 4년간 회원 1만 명과 공유 거래 연 10만 건을 달성하여 탄소배출 연 500톤 감축과 회원 1인당 연 소비 절감을 실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오픈소스 기반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 오픈소스 기반으로 카셰어링-공간공유-물품공유-시간교환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읍면동에 보급한다 모바일 앱과 웹을 병행 개발하고 예약-결제-적립-평가를 통합하며 오프라인 예약 창구를 병행하여 고령층 접근성을 확보한다.
- 과제2: 플랫폼협동조합 육성 및 공동 소유 체계 구축 - 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1인1표 민주적 운영으로 수익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과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조합원 교육(회계-운영-마케팅)을 실시하며 수수료를 5% 이하로 설정한다.

과제3: 시간교환은행 운영 - 시간화폐(=1타임) 기반으로 돌봄-교육-수리-요리 등 주민 간 재능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간교환은행을 운영한다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간 적립-사용을 관리하고 읍면동별 오프라인 거점 공간을 확보하며 고령자 상호돌봄(노노케어)을 집중 운영한다.

과제4: 공유 자산 확보 및 운영 - 공유 차량 100대(전기차 50대)와 공유 공간(공유 거실-회의실)와 물품 창고(공구-캠핑-유아용품)를 확보한다 공유 차량은 전기차를 우선 도입하고 공유 공간은 마을회관-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며 물품은 기부와 구매를 병행한다.

과제5: 공유경제 육성 조례 제정 및 안전 체계 구축 - 공유경제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협동조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의무화와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공유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유 물품-차량의 보험과 사고 시 책임 규정을 명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개발 비용을 절감하며 타 지역 확산이 용이하다.

효과2: 대형 플랫폼 대비 저수수료와 지역 신뢰로 차별화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한다.

효과3: 화폐 없이 서비스를 교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간 신뢰와 연대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강화한다.

5. 예산

4년총액: 50억원, 연평균 12.5억원

재원: 시군구비 40%, 시도비 30%, 국비 20%

6. 연계정책

ME06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플랫폼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협동조합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설립 컨설팅-경영 교육-제도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ME24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공유 플랫폼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인과 공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한다.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공유경제 육성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와 연계하여 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경제의 통합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084 간단정책카드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0. 핵심가치

- 가치1: 세계 최초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로 주민주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가치2: 30년 마을운동의 법적 결실로 정권 변동에도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 확보
- 가치3: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로 정책 실효성 확보
- 가치4: 마을기본법에 기후정의-생태전환 원칙을 포함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G01

정책명: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대영역: 거버넌스

분야: 법제화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핵심키워드: 마을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입법촉구, 선제적대응, 상향식계획, 보충성원칙, 조례정비, 정당당론, 아이디어워크숍, 현장실태파악

2. 정책목표

- 목표1: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촉구 및 지방선거 출마자의 정당 당론 채택 건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법 통과를 이끌어낸다
- 목표2: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실태파악과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실무 준비를 완료한다
- 목표3: 주민-활동가-연구자-공무원-의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아이디어 워크숍과 토론회를 광역에서 개최하여 현장 지혜를 결집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입법촉구 및 정치적 동력 확보 - 국회 앞 1인 캠페인을 전국 광역 릴레이 캠페인으로 확산하고, 출마자 정당 당론 채택 건의 및 공약 모델을 개발 배포한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중심 동시다발적 행동, 출마자 대상 정책제안서 배포, 정당별 당론 채택 로비
- 과제2: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여론 형성 -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역 단위 아이디어 워크숍-토론회를 광범위하게 개최한다 주민-활동가-연구자-공무원-의원-고위공무원 공동 참여, 선진사례 발굴, 한국형 모델 연구모임 조직 운영
- 과제3: 현장 실태파악 및 조례 정비 준비 - 광역별 마을활동 현장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마을기본법

연동 조례 제개정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초안을 준비한다 행안부 연구용역 자문단 활동, 광역-기초 조례 제개정 필요 사항 검토, 시행령 내용 현장 의견 반영 (MG02 연계)

과제4: 지역별 준비 거버넌스 구성 - 광역 단위 시행준비위원회와 기초 단위 마을계획 준비 모임을 조직하고, 현장 인력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광역단체장-의원-고위공무원-시민사회 공동 위원회, 읍면동별 주민 의견 수렴, 중간지원조직-활동가-공무원 집중 교육

과제5: 법 시행 초기 안착 지원 - 법 시행 직후 현장 혼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모의 운영과 모니터링 체계를 사전 설계한다 콜센터-온라인 상담 체계 구축, 시범지역 상향식 마을계획 모의 운영, 모니터링 지표-체계 사전 설계

4. 기대효과

효과1: 국회 입법 압박 강화, 지방선거 핵심 의제화, 정당 차원의 정책 지지 확보

효과2: 상향식 계획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현장 역량 축적, 다양한 아이디어 결집

효과3: 법 시행 즉시 조례 정비 착수 가능,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설계, 시행령 현장 적합성 제고

5. 예산

4년총액: 15억원, 연평균 3.75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40%, 민간기타 20%

6. 연계정책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마을기본법 시행에 연동한 광역-기초 조례 제개정, 법-조례 정합성 확보의 핵심 연계 정책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의 계획 수립-실행-평가 역량 강화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의 핵심 기제인 마을총회의 숙의 과정 및 운영 방법론 연계

085 간단정책카드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자치-경제 영역 통합 법적 기반 체계화로 정책 정합성 확보
- 가치2: 조례 표준안으로 전국 지자체 간 정합성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제고
- 가치3: 광역의원 입법권 실질화를 통한 의정 활동 성과 창출
- 가치4: 마을기본조례에 기후-환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지역 차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2
- 정책명: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법제화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마을기본조례, 조례정비, 표준조례안, 마을정의, 주민자치, 법적근거, 조례통폐합, 마을공동체육성, 의회입법, 조례실효성점검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 정의-광역 책무-중간지원조직-기본계획을 명시하는 광역 통합조례를 전체에 제정하고 기존 분산 조례를 통폐합한다
- 목표2: 광역-기초 조례 표준안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제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 목표3: 미제정 기초지자체 포함 신규 조례 제정을 달성하고 실효성 점검을 정례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 - 총칙(마을 정의-기본원칙-광역 책무)-기본계획(5년 단위)-지원(재정-중간지원조직-활동가)-추진체계(위원회)-보칙(평가-포상) 5장 구성의 통합 조례를 제정한다 광역의원-법률 전문가-활동가-공무원으로 조례 TF 구성, 조문 작성→의견 수렴→공청회 3회→의회 상정-통과
- 과제2: 기존 분산 조례 통폐합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일부)-사회적경제(일부)-마을만들기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중복 분석 후 통합조례로 이관-폐지한다 기존 조례 전수 조사(내용-중복 분석)→통합 조례안 작성→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회 상정→기존 조례 폐지
- 과제3: 조례 표준안 개발 및 전국 배포 - 광역 표준안(조, 총칙-기본계획-지원-추진체계-보칙)과 기초 표준안(조, 마을총회-마을계획-마을기금-중간지원조직)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 법률-마을-행정 전문가 TF 구성, 광역- 기초 시범 적용 후 수정-보완, 공문-홈페이지-설명회 배포

과제4: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 미제정 기초지자체를 조사·분석하고, 표준안 제공-무료 컨설팅-청원 지원 등으로 신규 제정을 달성한다 미제정 사유 조사→광역시 공문 제정 권고→기초의회 설명회→희망 지자체 6개월 무료 컨설팅(조문 작성-의회 설명-공청회)

과제5: 조례 실효성 점검 및 개선 - 광역 17개-기초 이상 조례의 집행 여부(예산-사업), 내용 적절성, 광역-기초 정합성을 점검하고 개정 권고한다 서면 조사-현장 방문-주민 인터뷰 병행, 광역 중간지원조직-외부 전문가 공동 수행, 점검 결과 공개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자치-경제 통합 법적 기반 확립, 광역 책무와 재정 지원 근거 확보

효과2: 행정 비효율 해소, 정책 정합성 확보, 주민-활동가 혼란 해소

효과3: 지자체별 조례 편차 해소, 전국 정책 일관성 제고, 기초의회 입법 부담 경감

5. 예산

4년총액: 10억원, 연평균 2.5억원

재원: 국비 0%, 시도비 10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마을기본법 제정 시 광역-기초 조례 표준안의 법률적 근거 확보, 법률-조례 연계 체계 구축의 전제 조건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조례에 광역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근거 명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기초 조례에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근거 명시, 광역-기초 조례 정합성 확보의 핵심 연계

086 간단정책카드 MG03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주권 원칙과 보충성 원칙의 법률 명문화로 중앙-지방 권한 배분 기준 확립
- 가치2: 주민자치회 법정화로 읍면동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 가치3: 지방의회 입법권 실질화와 재정자치권 확보로 지역 자율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가치4: 지방자치법 분권강화가 기후예산 자율성에 간접 기여하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3
- 정책명: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법제화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핵심키워드: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보충성원칙, 조례제정권, 재정분권, 광역의회, 법제화, 주민주권, 입법제안권, 국회건의

2. 정책목표

- 목표1: 지방자치법 제9조-제10조에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여 중앙-광역-기초-읍면동 간 사무 배분 기준을 확립한다
- 목표2: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본법에 신설하고, 주민총회-마을계획-예산 제안권을 법정화한다
- 목표3: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을 자율규정 30% 확대하고,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법정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보충성 원칙 명문화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고, 제10조에 중앙-광역-기초-읍면동 간 사무 배분 기준을 명확화한다 사무 재배분 시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의무화, 사무이양 분쟁 조정 절차-기준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정권한 부여
- 과제2: 주민자치회 법정화 -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 규정(읍면동 단위), 구성-권한-운영 기본 원칙, 주민총회 개최-의결권, 마을계획 수립권-예산 제안권을 지방자치법 본법에 신설한다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정리 및 전환 로드맵 수립
- 과제3: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 법률 위임 없는 자치조례 제정 가능 분야를 구체화하여 범위를 30% 확대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1인당 1인으로 확대한다

다 자치조례 제정 범위 명확화 법안 마련, 의원 자료요구권 강화 조항 신설

과제4: 재정분권 및 입법 제안권 강화 -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법정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부가가치세 30%)-지방교부세율 인상(내국세 21%→25%)을 추진하며, 시도의회 의결에 의한 국회 법률안 제출권을 신설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 근거 명확화, 협력회의 의결사항 법적 구속력 부여, 지방 대표 참여 50% 이상 보장

과제5: 개정 건의안 발의 및 국회 협력 체계 구축 - 시도의회별 지방자치법 개정 TF(의원-전문가)를 구성하고, 권역별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외장협의회 건의안을 의결-국회 제출한다 시도의회외장협의회-국회 간담회 정례화(분기별), 국회 법안심사 소위 참석-의견 진술, 국회의원 개별 면담-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기대효과

효과1: 중앙-지방 권한 갈등 제도적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 밀착 서비스 강화

효과2: 제도적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주민 직접 정책 결정 체계 확립, 정권 변동 영향 최소화

효과3: 지역 특성 맞는 정책 자율 수립-집행, 의원 입법 역량 제고

5. 예산

4년총액: 5억원, 연평균 1.25억원

재원: 국비 0%, 시도비 6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40%

6. 연계정책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지방자치법 보충성 원칙과 마을기본법의 주민주권 원칙이 공통 기반, 주민자치회 법정화가 마을기본법 현장 실행의 법적 전제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법정화가 실질화 정책의 법적 기반 제공, 법정화 후 역량강화가 실효성 확보의 핵심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정화로 민관협치의 중앙-지방 제도적 기반 확보, 협치 거버넌스 완비의 법률적 근거

087 간단정책카드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0. 핵심가치

- 가치1: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하여 주민자치회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형식적 운영을 탈피한다
- 가치2: 주민주도 예산편성으로 읍면동 예산 10%를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가치3: 교육-예산-권한을 동시에 강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실질화한다
- 가치4: 주민자치회 운영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 편의성과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4
- 정책명: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주민자치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핵심키워드: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의결권강화, 역량강화, 예산확대,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자치, 자문기구전환, 교육의무화, 네트워크

2. 정책목표

- 목표1: 기초의회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읍면동 발전계획 의결권을 부여하고 집행부 이행 의무를 명시한다
- 목표2: 연 교육 의무화(기본+심화)와 분과위원회 활성화로 위원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목표3: 읍면동당 운영 예산을 연으로 확대하고 간사 인건비를 신설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자치회 조례 전면 개정 - 주민자치회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하는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개정 조항으로 제5조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발전계획-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명시하고, 제6조에 집행부의 의결 존중-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 기초의원이 조례 제개정을 발의(고유 권한)하고, 광역 차원 표준 조례안을 개발하여 기초지자체에 보급한다
- 과제2: 주민참여예산 의결권 강화 - 현행 '주민 제안→의견 수렴→집행부 결정' 절차를 '주민 제안→주민자치회 심의-의결→집행부 반영'으로 개선한다 주민 제안 접수(연중 상시)→분과위원회 검토(타당성-예산)→본회의 의결(재적 과반 찬성)→집행부 제출-반영→의회 예산 심의
- 과제3: 위원 역량강화 교육 체계화 - 기본 교육(주민자치 이해-예산 읽기-조례 이해-회의 운영-마을만들기 각)

과 심화 교육(정책 기획-예산 심의-퍼실리테이션-네트워크-평가환류 각)을 편성하여 연 이수를 의무화한다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이 교육을 주관하고, 분기별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미이수 시 재위촉을 제외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과제4: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 예산 확대 - 분과별 정기회의, 분과위원장 심화 교육 이수 의무화, 분과별 예산 연-사업 연 2건 이상을 추진한다
간사 1인을 배치하여 실무를 총괄한다

과제5: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 참여 - 우수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추가 예산-위원 표창-사례집 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체계 - 시군구 주민자치회 협의회(분기별)-광역 네트워크-전국 대회(1)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청년 할당제 30%(만 19~39세)-청년분과 신설-우수 주민자치회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자치회 의견에 법적 구속력 부여, 읍면동 예산 10% 주민자치회 결정, 형식적 운영 탈피

효과2: 주민 직접 예산 편성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 참여-관심도 실질적 제고

효과3: 예산 심의-정책 기획 능력 실질 향상, 의결권의 책임 있는 행사 가능

5. 예산

4년총액: 400억원, 연평균 10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0%, 시군구비 70%, 민간기타 0%, 국비 30%

6. 연계정책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주민자치회 의결 사항을 마을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주민 직접 민주주의 연계, 의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의결 핵심 기구로 작동하며, 예산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MG02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주민자치회 조례와 마을기본조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조례 체계 구축, 법적 정합성 확보

088 간단정책카드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직접 읍면동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가치2: 충분한 정보 제공-소그룹 토론-합의 과정을 통해 다수결 투표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 가치3: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집행부 이행 의무를 명시하여 형식적 행사를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전환한다
- 가치4: 마을총회에 온라인 참여와 전자투표 등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여 참여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5
- 정책명: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주민자치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마을총회, 숙의민주주의, 조례제정, 의결권, 시민참여, 공론장, 퍼실리테이션, 직접민주주의, 읍면동자치, 이행의무,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총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결권을 명시하고 집행부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 목표2: 시민배심원제-공론조사-월드카페 등 숙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충분한 정보-토론-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 목표3: 읍면동당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참여-토요일 개최-청년 할당제로 주민 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총회 설치 - 운영 조례 제정 - 읍면동 마을총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기초단체장이 조례안을 마련하고 기초의회 발의-상임위 심의-공청회-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한다 광역차원 표준 조례안을 개발하여 기초지자체에 보급한다
- 과제2: 숙의민주주의 방식 체계적 도입 - 세 가지 숙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읍면동 주민 무작위 추첨 2일간 사전 학습-전문가 발표-찬반 토론-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하여 마을총회에 상정한다 공론조사는 1일간 사전 설문-정보 제공-소그룹 토론-사후 설문으로 숙의 효과를 측정한다 월드카페는 전체 참석 주민 주제별 테이블에서 3라운드 토론 후 전체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과제3: 주민 참여 확대 전략 - 온라인 참여 시스템(YouTube-Zoom 생중계, 앱-웹 사전투표,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구축하고, 토요일 오후 2~6시 개최로 직장인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배심원 30% 청년 할당제(만 19~39세)와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의제 우선 상정으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과제4: 의결사항 이행 체계 구축 - 의결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1개월 이내 이행 계획 수립, 3개월 이내 홈페이지-게시판 공개, 다음 총회에서 이행 결과 보고-미이행 사유 설명의 체계적 절차를 확립한다 주민자치회가 분기별 이행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과제5: 마을총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마을총회 일정-의제 공개, 사전 의견 수렴(주민 제안), 온라인 사전투표, 생중계-다시보기, 의결사항 이행 현황 공개 기능을 갖춘 기초지자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앱-웹 동시 지원하며 노인-장애인 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한다 기초 집행부 자치행정과가 운영을 총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기술을 지원한다 에 설계-개발하고 전체 기초지자체에 보급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마을총회 의결에 법적 구속력 부여, 집행부 책임성 강화, 주민 신뢰도-참여도 제고

효과2: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토론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합의 중심 결정으로 갈등 완화

효과3: 참여율 5%에서 30%로 6배 확대, 다양한 세대-계층 참여로 대표성 제고,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5. 예산

4년총액: 350억원, 연평균 87.5억원

재원: 국비 0%, 시도비 30%, 시군구비 7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마을총회 의제 발굴-준비와 의결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주민자치회-마을총회 간 역할 분담이 양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의결하고 숙의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며, 예산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한다
-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마을총회가 대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숙의 프로그램과 퍼실리테이터를 공동 활용한다

089 간단정책카드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0. 핵심가치

- 가치1: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숙의로 전환하여 주민이 정보에 기반해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제도화한다
- 가치2: 읍면동 배분 70% 확대로 놀이터-공원-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늘려 주민 체감도를 극대화한다
- 가치3: 조례에 의무 비율 10%를 명시하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가치4: 참여예산에 온라인 제안-투표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6
- 정책명: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주민자치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숙의민주주의, 조례개정, 의무비율, 시민배심원, 공론조사, 예산편성권, 재정민주주의, 읍면동배분, 예산결정권,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조례 개정으로 전체 예산의 10% 이상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로 전환한다
- 목표2: 시민배심원제-공론조사-월드카페 등 숙의 방식을 제도화하여 사전 정보 제공-소그룹 토론-전문가 자문-합의 도출 과정을 확립한다
- 목표3: 주민참여예산의 읍면동 배분 비율을 30%에서 70%로 확대하고 마을총회(MG05)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 숙의를 활성화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참여예산 조례 전면 개정 -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전체 예산의 10% 이상 편성 의무를 명시하고, 읍면동 배분 70% 이상을 규정하며, 위원회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로 전환하고 집행부 반영 의무를 부과한다 숙의 절차(사전 자료 배포-소그룹 토론-전문가 자문-합의 도출)를 조례에 명시하고, 제안-검토-심의-집행 전 과정 온라인 공개와 회의록 1주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한다
- 과제2: 의무 비율 10% 단계적 확대 - 4년간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차별 증액 계획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행을 감시한다 불용예산 재배치와 국비-광역비 지

원을 요청한다

과제3: 숙의민주주의 방식 제도화 - 세 가지 숙의 방식을 제도화한다 읍면동 단위 시민배심원제는 무작위 추천 주말 2일간 사업 제안 설명-타당성 검토-소그룹 토론-표결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시군구 단위 공론조사는 무작위 추천 토요일 1일간 사전 설문-소그룹 토론-전문가 질의-사후 설문으로 주민 의견 변화를 분석한다

과제4: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 - 제안(온라인 양식-사진 동영상 첨부-지도 위치 표시), 검토(검토 의견 실시간 공개-타당성 의견서-댓글 질의응답), 투표(만 18세 이상 주민 온라인 투표-실시간 현황), 심의(일정 공개-회의록 전문-의결 결과), 집행(예산 집행 진행률-사진-완료 보고-만족도 조사)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제5: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평가 체계 - 기본 교육(주민참여예산 이해-예산 읽기-사업 타당성 분석-숙의 방법)과 심화 교육(정책 기획-예산 심의-퍼실리테이션-우수 사례)으로 구성한다 제안 희망 주민 대상 교육(제안서 작성-예산 기초)을 별도 운영한다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이 교육을 운영하고, 분기별 조례 개정 현황 점검-비율 평가-4년 후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의무 비율 법제화로 정권 변동과 무관한 예산 안정성 확보, 의결권 전환으로 주민 결정권 실질화

효과2: 읍면동당 규모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 극대화

효과3: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예산 결정, 주민 예산 이해도 향상, 합의 중심 의사결정

5. 예산

4년총액: 300억원, 연평균 75억원

재원: 국비 0%, 시도비 20%, 시군구비 8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5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마을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연계하고 읍면동 단위 숙의를 상호 강화하며, 시민배심원-월드카페 등 숙의 방식을 공유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1차 검토와 시민배심원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총회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MC21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공론조사-시민배심원-월드카페 등 숙의 방식과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 공론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090 간단정책카드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0. 핵심가치

- 가치1: 광역-기초 간 체계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일관성과 현장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가치2: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3개 영역을 통합 지원하여 영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성을 제고한다
- 가치3: 활동가 역량 강화와 정규직 전환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가치4: 중간지원조직이 디지털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마을 데이터 관리와 온라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7
- 정책명: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중간지원조직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중간지원조직, 광역센터, 허브, 정책개발, 교육훈련, 컨설팅, 네트워크, 기초지원, 역량강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디지털주권

2. 정책목표

- 목표1: 5대 핵심 기능(정책개발-교육훈련-컨설팅-네트워크-조사연구)을 체계화하고 광역 종합계획 수립-조례 제개정 지원-교육을 실현한다
- 목표2: 기초센터 100%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설치 지역 설치를 촉진하며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 목표3: 광역센터당 예산-인력(정규직 80%)으로 확대하고 팀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광역센터 5대 기능 강화 - 광역센터의 5대 핵심 기능을 체계화한다 정책개발 기능으로 광역 종합계획 수립(4년 단위)-조례 제개정 지원-정책 모니터링-평가 체계-광역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훈련 기능으로 활동가 교육(기초-심화-전문가)-공무원 교육(정책 이해-현장 실습)-주민 교육(마을활동 기초)을 운영하여 광역당 연 1, 이상을 교육한다
- 과제2: 기초센터 총괄 지원 체계 구축 - 미설치 지역에 설치 컨설팅-조례안-사례를 제공하고 신설센터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여 4년간 100% 설치를 완료한다 기존 기초센터에 (분기별) 운영 컨설팅(조직 운영-사업 기획-예산-인사-평가)을 현장 방문-온라인 상담-집합 워크숍으로 제공한다
- 과제3: 예산 - 인력 단계적 확대 - 광역센터 예산을 4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례에 예산-인력 규모를 명

시하고, 재단법인 전환을 검토하여 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과제4: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원스톱 창구를 운영한다 전화-방문-온라인 통합 상담과 영역 사업 통합 안내를 제공한다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 교육(영역 이해)-심화 교육(영역별)-통합 프로젝트 실습을 운영하고 수료 후 마을활동가 인증을 부여한다

과제5: 전국 네트워크 구축 - 광역센터장으로 광역센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정책 공유-현안 논의-공동 사업)를 운영한다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하여 활동가-공무원-주민 3, 참여하는 정책 토론-사례 발표-네트워킹-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연수를 (광역센터장-활동가) 실시하여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정책을 학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광역-기초 간 체계적 연계로 정책 일관성 확보, 현장 활동가 전문성 향상

효과2: 기초센터 100% 설치로 주민 지원 공백 해소, 센터 간 역량 격차 축소

효과3: 전문 인력 안정적 확보, 활동가 소진 방지, 조직 전문성 축적

5. 예산

4년총액: 600억원, 연평균 15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7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광역센터가 기초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컨설팅-교육-예산을 제공하며 미설치 지역 설치를 촉진하는 광역-기초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광역센터가 마을활동가 교육-인증을 담당하고 경력 DB를 구축하며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E01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광역센터가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영역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한다

091 간단정책카드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0. 핵심가치

- 가치1: 외부 전문가 배치가 아니라 지역 주민 가운데 열정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을 발굴하여 마을자치의 조직가로 훈련함으로써, 주민이 곧 자치의 주체가 되는 주민주권을 실현한다
- 가치2: 주민활동가는 이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므로 적응 기간 없이 기존 관계 자본을 즉시 활용할 수 있고, 활동 종료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가 마을 자산으로 남는다
- 가치3: 120시간 양성과정(기초이론-현장실습-프로젝트)을 통해 마을 의제 발굴, 주민 연결, 자치활동 조직이라는 3대 역할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자연발생 리더를 전문 조직가로 전환한다
- 가치4: 1기 활동가가 2기 후보자를 추천하고 멘토링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마을자치 역량이 세대를 이어 지역에 축적되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공동체로 활동가 간 지속적 교류를 지원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08
- 정책명: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중간지원조직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협력주체: 기초의회, 기초 집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 핵심키워드: 주민활동가, 훈련, 양성, 마을자치, 조직가, 주민발굴, 읍면동 배치, 자치역량, 네트워크, 주민주도, 선순환

2. 정책목표

- 목표1: 읍면동별 주민추천-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하고, 120시간 양성과정(기초이론 40시간+현장실습 50시간+프로젝트 30시간)을 운영하여 4년간 5,000명의 주민활동가를 양성한다
- 목표2: 훈련 수료 후 전국 3,500개 읍면동에 1~2명(총 약 4,500명)을 배치하여 마을 의제 발굴-주민 연결-자치활동 조직의 3대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배치 읍면동 주민 자치참여율을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 목표3: 활동가 학습공동체(월 1회)-기초센터 멘토링(분기 1회)-광역 교류회(연 2회)로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처우를 연봉 3,000~3,500만원-정규직 비율 80%로 안정화하며, MG09(경력인정 체계)와 연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활동가 후보 발굴 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통-반장-마을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여, 지역 거

주 3년 이상이며 주민 네트워크와 자치활동 참여 의지를 가진 다양한 배경의 주민을 발굴한다

과제2: 120시간 양성과정 운영 - 기초이론(주민자치 개념, 퍼실리테이션, 갈등 조정 40시간), 현장실습(우수 활동가 동행, 마을총회 관찰 50시간), 프로젝트(자기 읍면동에서 의제 1건 발굴-주민모임 조직 30시간)을 3개월간 운영한다

과제3: 읍면동 배치 및 3대 역할 수행 - 마을 의제 발굴(주민 일상의 관심사-자원 탐색), 주민 연결(공통 관심사 주민 만남 주선, 제도적 자원 연결), 자치활동 조직(회의 기획, 의사결정 설계, 행정 소통 지원)을 수행한다

과제4: 학습공동체와 멘토링 기반 지속 성장 지원 - 시군구 단위 활동가 학습공동체를 월 1회 동료 학습으로 운영하고, 기초센터 멘토링(분기 1회)과 광역 교류회(연 2회)를 통해 활동가 고립을 방지하며 역량을 강화한다

과제5: 처우 안정화와 후속 세대 양성 선순환 구축 - 연봉 3,000~3,500만원, 정규직 전환, 4대 보험을 보장하고, 1기 활동가가 2기 후보자를 추천-멘토링하는 선순환 구조로 마을자치 역량을 세대 간 축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주민활동가가 100% 배치되어 주민 가까운 곳에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참여 예산을 일상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하는 현장 밀착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다

효과2: 지역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 성장하여 외부 인력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계 자본이 지역에 축적되어 활동가 이직-교체에 따른 관계 단절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된다

효과3: 후속 세대 양성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여 마을자치 역량이 세대를 이어 확대재생산되고, 읍면동 주민 자치참여율이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5. 예산

4년 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국비 30%, 시도비 20%, 시군구비 5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광역센터가 주민활동가 양성과정의 교재-강사를 지원하고 전국 교류회를 주관하며, 기초센터를 통한 멘토링 체계의 총괄 지원을 담당한다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주민활동가의 양성과정 수료-현장 경력을 공식 인정하고 자격증-경력 DB와 연계하여 처우 개선과 전문성 축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MG05 속의형 마을총회 운영: 주민활동가가 마을총회 기획-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조직하고, 속의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092 간단정책카드 MG09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0. 핵심가치

가치1: 경력 공식 인정으로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이직률을 낮추어 현장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가치2: 자격증 제도로 전문직 지위를 확립하고 역량을 표준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가치3: 경력 연동 처우 체계로 장기 근속 동기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의 성장 경로를 보장한다

가치4: 활동가 경력인정에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G09

정책명: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대영역: 거버넌스

분야: 중간지원조직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핵심키워드: 경력인정, 마을활동가, 자격증, 경력관리, 처우개선, 전문성, 채용가점, 공무원특채, 경력체계, 활동이력

2. 정책목표

목표1: 경력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통일 기준을 확립한다

목표2: 광역에 온라인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 등록-증명서 발급-포트폴리오 관리를 일원화한다

목표3: 3급-2급-1급 자격증 체계를 도입하고 채용 가점-공무원 특채-경력 연동 급여로 처우를 개선한다

3. 핵심추진과제

과제1: 경력 인정 기준 수립과 전국 통일 - 활동시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 활동 분야를 마을공동체(발굴-지원-마을계획-마을축제)-주민자치(주민자치회-마을총회-참여예산)-사회연대경제(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통합(이상 분야)으로 분류한다

과제2: 광역 단위 온라인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에 각각 온라인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공동 설계안을 개발하고 광역별로 운영하며 웹-모바일 앱을 모두 지원한다 주요 기능은 활동가 회원 가입 (이메일-휴대폰 인증)-경력 입력(소속 기관-활동 분야-역할-기간-시간)-증빙자료 첨부-소속 기관 승인이 다 경력증명서-추천서를 자동 발급(PDF 다운로드)하며 QR 코드 기반 진위 확인을 지원한다

과제3: 3급 - 2급-1급 자격증 체계 도입 - 3급을 기초 실무 자격으로, 2급(경력 3년+교육+3급 보유, 필기+실기 시험, 목표 2)을 심화 전문 자격으로, 1급(경력 5년+교육+2급 보유, 필기+실기+논문 심사, 행정안전부 발급, 목표)을 최고 전문가 자격으로 운영한다 합격률 70%를 목표로 접근성과 전문성을 균

형 있게 유지한다

과제4: 경력 활용 방안과 처우 연계 - 공무원 특채(1급+경력 5년, 7급 행정직, 연)를 실시한다 타 기관 이동 시 경력을 인정하고, 민간 기업-대학원 입학 시 경력을 참고하며, 해외 활동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과제5: 전국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협의체 구축 - 광역단체장-행정안전부-활동가 대표 참여하는 전국 협의체를 구성한다 경력 인정 기준 통일-시스템 공동 개발-정책 조정을 담당하며 분기별 회의를 개최한다 1급 자격증 전국 공통 발급(행정안전부)을 협의체가 주관하고 광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광역별 유지보수를 실시하되 데이터 호환성을 보장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경력 인정의 객관적 기준 확립,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경력 인정

효과2: 경력 등록-증명-관리 일원화, 경력 이동성 보장, 활동 이력 체계적 축적

효과3: 전문직 지위 확립, 역량 표준화, 사회적 인정 제고, 채용 시 객관적 평가 기준

5. 예산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6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광역센터가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격증 교육·발급을 담당하며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읍면동 활동가 4, 경력 DB를 구축하고 경력 연동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공무원 특채와 연계한다

093 간단정책카드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0. 핵심가치

- 가치1: 형식적 자문에서 실질적 공동 결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주권을 직접 실현한다
- 가치2: 행정과 민간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민주성을 확보한다
- 가치3: 회의록 공개-성과 평가-이행률 공표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가치4: 협치위원회 운영에 디지털 소통채널과 온라인 회의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G10

정책명: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대영역: 거버넌스

분야: 민관협치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핵심키워드: 민관협치,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60%, 정책심의, 공동의결, 거버넌스,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

2. 정책목표

- 목표1: 민간위원 60% 이상-주민 대표 40% 이상-위원장 민간 호선으로 민간 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성(성별-연령-지역)을 보장한다
- 목표2: 분과위원회(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를 설치하고 정례 운영하여 전문 심의와 정책 제안을 활성화한다
- 목표3: 정책 심의-의결권-예산 사전 심의권-정책 평가권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결 이행 의무-성과 평가-공개 조항을 확립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위원회 구성 혁신과 다양성 보장 - 민간위원 60% 이상-공무원 40% 이하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 주민 대표(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 대표)를 40% 이상, 전문가(학계-시민단체)를 20%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 주제-안건 상정-의결 선언-사무국 운영 총괄 권한을 부여한다
- 과제2: 정책 심의 - 의결권과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 -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 정책 전체에 대한 심의-의결권(자문이 아님)을 부여하고 의결 사항은 행정 이 이행할 의무를 진다.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으로 예산 규모-편성 방향을 심의-의결하며 의결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된다

과제3: 3개 분과위원회 정례 운영 - 마을공동체분과(위원, 마을공동체 정책 전담)-주민자치분과(위원, 주민자치회-마을총회-참여예산 전담)-사회연대경제분과(위원,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전담)를 설치한다
분과별 정기 회의(회의당 이상)를 개최하며 위임 안건을 심의-의결(3건 이상)한다 분과 의결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필요시 통합 회의를 개최한다

과제4: 협치 조례 전면 제개정 - 위원회 권한(심의-의결권-예산 사전 심의권-정책 평가권)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민간위원 60% 이상을 의무 규정(예외 없음)으로 하고 위원장 민간 호선을 명시한다 의결 이행 의무-이행 보고(분기별)-미이행 시 사유 서면 보고-공개 조항을 신설한다

과제5: 투명성 - 책임성 강화와 성과 관리 - 본회의-분과회의 전체 회의록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인정보-보안 사항 제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과를 평가(정량 60%-정성 40%)하며 평가 내용은 회의 횟수-의결 건수-이행률-민간위원 만족도-주민 만족도를 포함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민간 주도 거버넌스 확립, 주민 대표성 확보,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

효과2: 형식적 자문에서 실질적 공동 결정으로 전환, 의결 이행 의무화로 정책 실효성 확보

효과3: 분야별 전문 심의 체계 구축, 정책 품질 제고, 정책 제안 활성화

5. 예산

4년총액: 80억원, 연평균 20억원

재원: 국비 20%, 시도비 8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마을기본법에 민관협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광역-기초 협치 체계를 법률로 구축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민관협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주민자치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위원회가 참여예산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예산 사전 심의권을 행사한다

094 간단정책카드 MG11 민관협약제 도입

0. 핵심가치

- 가치1: 형식적 MOU에서 실질적 정책 협약으로 전환하여 민관협치를 제도화한다
- 가치2: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
- 가치3: 체계적 평가와 성과 기반 갱신으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가치4: 민관협약에 기후목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G11

정책명: 민관협약제 도입

대영역: 거버넌스

분야: 민관협치

추진주체: 광역의원

핵심키워드: 민관협약, 협약제, 민관파트너십, 정책협약, 협약사업, 모니터링, 평가, 조례, 민관협치, 수평적관계

2. 정책목표

- 목표1: 민관협약 조례를 제정하여 협약 정의-절차-지원-평가를 명시하고 협약 이행 의무와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 목표2: 6단계 협약 체결 절차와 심사 기준(공공성-실현가능성-혁신성-파트너십)을 수립하고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한다
- 목표3: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갱신 제도를 확립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민관협약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 확보 - 조례에 민관협약의 목적(민관협치 실현-정책 효과성 제고)과 정의(시도와 민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를 명시한다
- 과제2: 6단계 협약 체결 절차와 기준 수립 - 1단계 협약 공모(2월, 대상-예산-자격-기준-일정 공고)-2단계 협약 신청(3월, 사업 계획-예산-역할 분담-성과 지표 제출)-3단계 협약 심사-4단계 협약 체결(5월, 광역단체장+민간 대표 서명, 홈페이지 공개)-5단계 협약 이행(6월~다음 해 5월, 분기별 보고)-6단계 협약 평가(다음 해 6월, 갱신 여부 결정)의 체계를 수립한다
- 과제3: 협약 사업 선정과 예산 - 예산 항목은 인건비 50%(활동가 급여)-사업비 40%(재료비-행사비)-관리비 10%(사무실 운영비)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집행한다 행정 지원으로 마을 활동 공간 무상 제공-인허가

절차 간소화-광역 언론 홍보-협약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과제4: 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성과 기반 평가 체계 - 중간 점검을 6개월과 1년 시점에 2회 실시하여 사업 진행 상황-예산 집행 현황-어려운 점-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한다 최종 평가는 협약 종료 시 서류 평가-현장 평가-주민 만족도 조사로 실시하며 목표 달성도 40점-사업 충실도 30점-주민 만족도 20점-파트너십 10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과제5: 투명성 - 협약 체결식 언론 공개-홈페이지 협약 내용 공개-우수 사례집 발간-성과 박람회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초 단위 협약 확산을 위해 기초 조례 표준안 제공-기초 협약 사업 예산 20% 지원-기초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광역 협약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협약의 법적 효력 확보, 행정 재량에 의한 일방적 해지 방지, 민간 신뢰 제고와 정책 지속성 보장

효과2: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 체결 절차 확립, 우수 협약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

효과3: 민간 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확보, 행정 지원을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

5. 예산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재원: 국비 10%, 시도비 90%, 시군구비 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1 마을기본법 제정: 마을기본법에 민관협약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광역-기초 협약 체계를 법률로 구축한다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민관협약의 심사-평가 주체로서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협약 이행을 점검한다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협약 사업에 컨설팅-교육-현장 지원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력을 강화한다

095 간단정책카드 MG12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사업 발굴부터 기획-실행-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 가치2: 인건비 50% 보장으로 활동가 급여를 현실화하고 회계 간소화로 정산 부담을 1/5로 줄인다
- 가치3: 1년 단기에서 2~3년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직 지속성과 사업 성과 누적을 보장한다
- 가치4: 공모사업에 기후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12

정책명: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대영역: 거버넌스

분야: 민관협치

추진주체: 기초의원

핵심키워드: 공모사업, 주민주도, 자율기획, 주민제안, 인건비, 회계간소화, 중장기, 심사위원회, 조례, 상향식

2. 정책목표

- 목표1: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결정권-자율기획-인건비 50%-중장기 지원(2~3년)-회계 간소화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목표2: 주민참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60% 이상 참여의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필요도와 주도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 목표3: 인건비를 50%로 확대하고 회계를 간소화하며 사업 기간을 2~3년 중장기로 전환하여 조직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 제정 - 조례에 공모사업의 목적(주민주도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정의(공모사업이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 제안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 주민주도란 주민이 발굴-기획-실행-평가 전 과정 주도)를 명시한다 기본원칙으로 주민 결정권-자율기획-현장 중심-중장기 지원(2~3년)-인건비 보장(50% 이상)-회계 간소화를 규정한다
- 과제2: 주민참여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체계 확립 - 위원장은 주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주민 필요도 30점(현장의 필요 정도-주민 요구 반영)-주민 주도성 30점(주민이 기획-실행하는 정도)-실행가능성 20점(계획 구체성-예산 적정성)-확산성 20점(다른 마을 적용 가능성)을 적용한다

과제3: 인건비 확대와 회계 간소화 - 사업비는 40% 이하, 관리비는 10% 이하로 구성한다 조례에 인건비 50% 이상 보장과 회계 간소화 기준을 명시하고 집행부 지침을 개정한다

과제4: 예산 심의와 모니터링 체계 - 기초의원이 예산 심의 시 주민주도 방식 여부-예산 적정성-중장기 여부-회계 간소화 여부를 점검한다 11월 집행부 예산안 제출-11~12월 상임위 심사-12월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며 조례 준수 여부와 주민주도 원칙 반영-인건비 50% 이상-중장기 2~3년-회계 간소화를 심사 기준으로 적용한다

과제5: 중장기 사업 전환과 성과 기반 갱신 - 사업 기간을 현행 1년 단기에서 원칙 2~3년 중장기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갱신한다 갱신 기준은 80점 이상 자동 갱신-60~79점 개선 후 갱신(개선 계획서 제출)-60점 미만 종료이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주도 원칙의 법적 보장, 인건비-회계-중장기 지원의 제도적 확립

효과2: 주민 중심 심사로 현장 필요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효과3: 활동가 처우 개선으로 인력 유지, 회계 부담 감소로 참여 동기 제고

5. 예산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재원: 국비 0%, 시도비 10%, 시군구비 9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마을기본법에 공모사업 주민주도 원칙을 명시하고 중앙-광역-기초 공모사업 체계를 법률로 구축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가 공모사업 품질을 직접 향상시킨다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공모사업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주민주도 원칙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096 간단정책카드 MX01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이 한곳에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가치2: 영역별 개별 시스템의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 가치3: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등 영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
- 가치4: 광역 오픈플랫폼이 정책의 핵심이며 마을공동체 데이터 통합관리와 정보접근 형평성을 보장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1
- 정책명: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 대영역: 연계
- 분야: 통합 플랫폼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핵심키워드: 통합플랫폼, 디지털플랫폼, 데이터통합, 원스톱서비스, 마을정보, 주민참여, 온오프라인연계, 거버넌스, 하이퍼로컬, 오픈데이터

2. 정책목표

- 목표1: 광역에 영역 통합 온라인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5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 목표2: 주민에게 사업 신청-교육 예약-컨설팅 안내-활동 기록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85% 이상을 달성한다
- 목표3: 영역 간 연계 사업을 연 100건 이상 기획-지원하고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거버넌스-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정보를 통합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통합 검색-필터링 기능을 개발하여 주민이 영역-지역-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게 한다
모바일 앱과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 차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정보통신 전문기관이 개발을 담당한다
- 과제2: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 영역별로 분산된 마을모임-주민조직-사회적경제조직-공모사

업-교육-컨설팅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동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오픈 데이터 원칙에 따라 비식별 통계 데이터를 공개한다 데이터 표준(분류체계-코드체계-입력규격)을 선제 정하고 영역별 기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한다 API 연동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한다

과제3: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온라인으로 공모사업 신청-서류 제출을 통합 처리하고 교육-컨설팅 안내와 예약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마이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신청 이력-활동 기록-참여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영역별 신청 양식을 통합하고 공통 항목과 영역별 항목을 구분하여 중복 입력을 방지한다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한다

과제4: 영역 간 연계 체계 구축 - 통합운영위원회(민관 합동)를 구성하여 영역 연계 사업을 기획-지원한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는 전환 경로, 주민자치회와 문화 프로그램의 결합, 돌봄과 경제의 연계 등 다양한 영역 횡단 사업을 발굴한다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운영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영역별 중간지원조직 대표-행정 담당-주민 대표가 참여한다

과제5: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 - 실시간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플랫폼 이용 현황-사업 진행 상황-성과 지표를 시각화한다 연례 성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환류한다 이용자 행동 분석-서비스 만족도 조사-성과 지표 추적을 자동화하고 분기별 분석 보고서를 산출한다 AI 기반 추천 기능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관심 분야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 정보접근성 향상, 영역 간 칸막이 해소, 중복 시스템 통합으로 비용 절감

효과2: 50만건 통합 데이터 확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현황 분석-성과 평가 자동화

효과3: 주민의 사업 신청 편의 향상, 중복 입력 해소, 맞춤형 서비스로 참여 확대

5. 예산

4년총액: 340억원, 연평균 85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50%, 시군구비 10%, 민간기타 0%

6. 연계정책

MG07 광역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플랫폼의 실질 운영 주체로 콘텐츠 관리-이용자 지원-기초 연계를 담당한다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통합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영역 횡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연계 사업 정책을 심의한다

ME0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이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경로를 안내하고 통합 데이터로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한다

097 간단정책카드 MX02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0. 핵심가치

- 가치1: 주거-일자리-마을활동을 통합 지원하여 분절된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착 가능한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 가치2: 청년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 가치3: 청년 마을활동과 사회적경제 창업을 연계하여 사회(MS)-경제(ME)-문화(MC) 3개 영역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 가치4: 청년마을에 녹색창업-환경활동을 포함하여 기후전환 청년경제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2
- 정책명: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 대영역: 연계
- 분야: 청년 정착 통합 지원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청년정착, 공동체주택, 청년창업, 마을활동, 역량강화, 네트워크, 통합지원, 청년공동체, 빈집활용, 멘토링

2. 정책목표

- 목표1: 빈집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청년 공동체주택 400호를 공급하고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 목표2: 마을일자리 매칭-사회적경제 창업-창업공간을 통해 청년 경제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 목표3: 청년 마을활동 팀을 육성하고 청년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 2, 마을에 정착하도록 종합 지원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청년 공동체주택 공급 - 임대료는 시세의 30~40%로 저렴하게 설정하고 최대 5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공동체주택은 개인 주거공간과 함께 공용 공간(커먼하우스-공동작업실-공유부엌)을 갖추어 청년 간 교류를 촉진한다
기초단체가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적합 건물을 선정한다
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 모집-관리를 담당하고 입주 조건으로 마을활동 참여를 권장한다
- 과제2: 청년 일자리 - 창업 지원 - 마을일자리 매칭(연)으로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를 청년과 연결한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으로 마을 기반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창업을 돕는다 기초당 창업공간(공유사무실-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창업 교육-멘토링-자금 연계를 담당하고 청년센터가 일자리 정보-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제3: 청년 마을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 통합을 추진하고 청년 마을 학교(연 교육)를 운영하여 마을활동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내용은 마을 이해-사업 기획-회계-소통-갈등 관리를 포함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팀 발굴-컨설팅-교육을 담당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마을 활동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우수 팀에 추가 지원과 네트워크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4: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운영 - 청년마을협의회를 기초당 규모로 구성하여 청년 간 정기 교류와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년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상시화하고 광역-전국 단위 청년마을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청년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분기별 광역 교류회를 개최하여 다른 기초의 청년마을과 경험을 공유한다

과제5: 멘토링과 정착 관리 체계 - 선배 정착 청년과 신규 청년을 1대1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착 모니터링으로 적응 상황을 점검한다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멘토 풀을 관리하고 매칭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착 성공-이탈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적 주거 경험, 마을 내 빈집 문제 해소

효과2: 청년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 마을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3: 청년의 마을 주체 성장, 세대 통합, 마을공동체 활력 회복

5. 예산

4년총액: 3,200억원, 연평균 800억원

재원: 국비 40%, 시도비 20%, 시군구비 3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05 공동체주택 마을돌봄형 공급: 청년 공동체주택의 설계-공급-관리 모델을 공유하고 마을돌봄형 주택과 청년 주택을 연계하여 세대 통합 주거를 실현한다

ME0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 교육-멘토링-자금-공간의 통합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MC15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 청년 마을활동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098 간단정책카드 MX03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0. 핵심가치

- 가치1: 마을 단위 통합재생으로 주거-교통-경제-자치를 원스톱 지원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 가치2: 빈집 활용-마을기업-로컬푸드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소득을 향상한다
- 가치3: 주민 주도 마을총회-마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조성한다
- 가치4: 농촌마을 재생에 기후적응형 농업-신재생에너지-생태복원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대응형 농촌을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3
- 정책명: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대영역: 연계
- 분야: 농촌 재생 통합 지원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농촌재생, 빈집활용, 마을교통, 로컬푸드, 마을기업, 행정리자치, 인구감소, 통합지원, 마을호텔, 6차산업,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 리모델링 400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청년 주거와 마을호텔(분산형 숙박)을 조성한다
- 목표2: 수요응답형 교통(콜버스-공유택시) 마을을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와 주민운영 마을버스로 농촌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목표3: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을기업 200개를 설립하고 행정리 자치권한을 강화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을 실현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빈집 리모델링과 활용 - 빈집은행을 운영하여 빈집 위치-소유자-상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청년-관광객 수요와 매칭한다 호당 지원하여 연 100채씩 4년간 400채를 리모델링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로 최소 5년 거주-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빈집 여러 채를 객실로 활용하는 마을호텔(알베르고 디푸소)을 조성하여 숙박-체험-관광을 연계한다
- 과제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 콜버스-공유택시를 마을별로 운영하여 예약제로 마을과 읍면 소재지-병원-시장을 연결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는 사회적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고 주민 운전 자원봉사를 활용

한다 운전자 교육과 차량 점검을 정기 실시한다

과제3: 로컬푸드 - 마을기업 육성 - 마을당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50개씩 4년간 설치한다 시설비(냉장고-진열대-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지원하고 도시 소비자 직거래-학교급식-공공급식과 판로를 연계한다 1차(생산)-2차(가공)-3차(판매-체험) 6차산업 패키지를 구축하고 마을 브랜드를 개발한다 농정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협이 협력하여 마을기업 발굴-교육-설립을 지원한다

과제4: 행정리 자치권한 강화 - 마을총회를 이상 정례화하여 마을 예산-사업-규약을 주민이 직접 의결한다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비전-핵심과제-연차별 실행)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을 사무장을 배치하여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마을총회 의결 후 기초의회가 마을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과제5: 통합지원체계 구축 - 농촌재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서 간 연계를 조정하고 통합 예산을 편성한다 기초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농정-주거복지-교통-자치행정 과장과 중간지원조직 대표, 마을 대표가 참여하며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마을별 운영위원회(이장단-마을기업 대표-주민자치회-귀농귀촌인 대표)를 운영하여 마을 사업을 기획-실행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빈집 문제 해소, 귀농귀촌 정착 촉진, 마을호텔로 관광 수익 창출, 마을 미관 개선

효과2: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이동권 보장,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매력도 향상

효과3: 마을 소득 20%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기반, 6차산업화

5. 예산

4년총액: 500억원, 연평균 125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0%,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5%, 국비 50%

6. 연계정책

MS17 빈집 리모델링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의 설계-공급-관리 모델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인-청년 주거와 마을호텔 조성에 연계한다

ME23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마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운영-판로 연계 모델을 공유하고 마을기업 육성과 연계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행정리 자치권한 강화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총회-마을계획의 주민 주도 운영을 강화한다

099 간단정책카드 MX04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0. 핵심가치

- 가치1: 주민 주도 재생으로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다
- 가치2: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자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가치3: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를 통합하여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 가치4: 도시마을 재생에 에너지효율화-녹색인프라-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하여 기후적응형 도시마을을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4
- 정책명: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대영역: 연계
- 분야: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핵심키워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유공간, 문화재생, 마을축제, 사회적경제, 자산화, 통합지원, 골목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기후정의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에서 주민협의회 주도로 골목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마을 거점 공간을 확보한다
- 목표2: 골목환경 개선(골목정원-쉼터-안전시설)과 문화재생(역사 스토리텔링-마을축제-골목시장)으로 마을의 물리적-문화적 재생을 동시에 추진한다
- 목표3: 마을기업-협동조합 10개를 설립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 운영과 골목환경을 자립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주민 주도 골목재생 계획 수립 -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주민 대표 60%-상인 20%-전문가 10%-공무원 10%)하여 골목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수요조사-마을자원 조사-비전 워크숍을 거쳐 SWOT 분석으로 마을의 강점-약점-기회-위험을 파악한다 골목단위 재생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주민총회 의결 후 기초의회가 승인한다
- 과제2: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 마을별씩 마을에 총의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사랑방-공유부엌-공동작업장-마을카페-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 주민 참여 설계 워크숍으로 공간 구성과 기능을 결정하고 주민이 페인팅-가구 제작 등 시공에 일부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주민 대표)가 공간 운영-관리를 맡고 이용료-프로그램

수익과 기초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과제3: 골목환경 개선과 문화재생 - 주민이 직접 가꾸는 골목정원-텃밭, 골목 쉼터-벤치, CCTV-가로등-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조성한다 마을 역사-인물-건축물-골목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안내판과 마을 역사관을 조성한다 마을축제와 골목 플라마켓, 골목 음악회-영화 상영, 벽화-조형물 등 주민 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과제4: 마을경제 조직 육성(마을기업 - 협동조합 10개) - 마을별 1개씩 총 10개의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분야는 마을관리협동조합-마을카페-공유공간 운영-마을투어-제조업(봉제) 협동조합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조합원 50인 이상)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골목환경 유지-마을사업 추진을 담당하며 3년 이내 자립을 목표로 한다

과제5: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 간 연계를 조정하고 예산을 통합 편성한다 기초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서 과장-센터 대표-주민 대표 참여한다 마을코디네이터를 마을별(총) 배치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컨설팅 -긴급보수비-분기별 모니터링)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주민 주도성 확보, 마을 맞춤형 재생 전략, 주민 역량 강화

효과2: 마을 거점 공간 확보, 주민 교류 활성화, 공동체 형성

효과3: 주거환경 개선, 마을 정체성 강화, 문화 활력, 관광 유인

5. 예산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재원: 국비 50%, 시도비 20%, 시군구비 25%, 민간기타 5%

6. 연계정책

MS18 빈집-유휴공간 공유지화: 빈집과 유휴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론과 공간 운영 모델을 공유한다

ME10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운영-자립 모델을 직접 연계하고 도시재생 후 지속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MC17 마을예술창작공간: 문화재생 프로그램(마을축제-골목시장-예술프로젝트)과 마을예술창작공간을 연계하여 문화적 재생을 강화한다

100 간단정책카드 MX05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0. 핵심가치

- 가치1: 학교-마을 협력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 가치2: 교육청-지자체 공동 거버넌스로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
- 가치3: 마을 자원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여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
- 가치4: 통합교육 거버넌스에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하여 기후시민 양성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정책코드: MX05

정책명: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대영역: 연계

분야: 교육-자치 통합 거버넌스

추진주체: 교육감

핵심키워드: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연계, 교육자치, 민관학협력, 마을학교, 교육활동가, 학교개방, 교육협력, 지역교육, 행복교육지구

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학교 100개(방과후-돌봄-청소년)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를 개발하여 학생 삶과 교육을 통합한다
- 목표2: 마을교육센터와 학교-마을 도서관 170개, 마을학습터 85개를 조성하여 학교-마을 통합 교육 공간을 확보한다
- 목표3: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와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를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예산을 편성한다

3. 핵심추진과제

- 과제1: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마을학교 100개 - 연계 프로그램 500개) - 방과후 마을학교(예술-체육-과학-인문), 돌봄 마을학교(돌봄-교육 통합), 청소년 마을학교(진로-문화-자치)를 포함하여 100개를 운영한다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주민-학부모-교사)가 운영 주체이다
- 과제2: 통합 교육 공간 조성(마을교육센터 50개소 - 학교-마을 도서관 170개를 상호 개방하여 주민과 학생이 공동 이용하고 독서토론-작가 초청-북콘서트를 운영한다 마을학습터 85개(마을회관-복지관-공방-농장)를 소규모 학습-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을교육센터는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투자하고 학교-마을 공동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마을학습터는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과제3: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교육협력위원회 - 협의회-협약) -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를 운영한다 교육감(위원장)-광역단체장(부위원장)-부서 과장-학교장 대표-마을 대표 참여하고 정책 총괄 조정-공동 예산 편성-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의장)-기초단체장(부의장)-학교장-마을 대표가 격 기초 단위 협력을 조정한다

과제4: 교육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강사 1,000명 - 코디네이터) - 마을 강사 1, 양성한다 분야는 목공-연극-과학-농업-예술-역사-생태-요리-공예이며 양성 과정(교수법-안전교육-아동권리)을 이수한다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이고 활동비는 시간당에 교통비-재료비를 별도 지급한다

과제5: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센터 17개 - 성과 평가)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17개를 광역 교육청 또는 위탁으로 설치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마을학교 컨설팅-활동가 양성-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한다 성과 평가(정량 60%+정성 40%)를 실시하고 우수 마을교육공동체를 포상하며 사례집을 발간한다 지원센터가 마을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컨설팅하고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 집중 지원한다

4. 기대효과

효과1: 학생 참여 10만 명, 교육 만족도 20% 증가, 학교-마을 상생

효과2: 학교-마을 통합 교육 인프라 확보, 주민 평생학습 확대

효과3: 칸막이 행정 극복, 안정적 협력 체계, 공동 예산 편성

5. 예산

4년총액: 2,400억원, 연평균 600억원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70%, 시도비 15%, 시군구비 10%, 국비 5%

6. 연계정책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마을학교 운영-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의 기본 모델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와 인력풀을 연계한다

MC02 학교-마을 평생학습 연계: 학교 시설 지역 개방-주민 평생학습-마을교육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학교-마을 통합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와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협력하여 주민 참여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 자원을 교육에 연결한다

부 록

부록 1. 마을선언 전문 (2015)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15.10. 서울)

우리는 선언한다

마을은 주민이 주인이다.
마을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
마을은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마을은 복지의 기초다.
마을은 경제의 기초다.
우리는 마을을 만든다.
우리는 마을에서 배운다.
우리는 마을로 바꾼다.

우리는 요구한다

마을기본법 제정: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보충성 원칙 실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
주민자치 실질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중간지원조직 법제화: 마을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활동가 처우 보장: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과 처우 개선

부록 2. 마을기본법 제정 운동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13	제6회 전국대회(수원)에서 마을기본법 최초 제안
2015	제8회 전국대회(서울)에서 마을선언 발표, 마을기본법 요구
2016	마을기본법 제정 1차 TF 구성 (마을넷-한국마을연합)
2016	마을기본법 1차 초안 작성
2022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 법제화 필요성 재확인
2024	마을기본법 제정 2차 TF 구성 (마을넷-전플넷)
2024	마을기본법 2차 초안 작성 (보충성 원칙 반영)

부록 3. 마을기본법 초안 (2024, 2차, / 논의용 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주권과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터로서, 주민 스스로 정의하는 지리적-사회적 공간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관심사와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주민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호혜와 협력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1. **주민주권**: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며, 마을 정책의 기획-결정-실행의 주체가 된다.
2. **보충성 원칙**: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되, 그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 상위 단위에서 처리한다.
3. **통합성**: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4. **지속가능성**: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5. **다양성-포용**: 모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포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광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중간지원조직)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마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1.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
2.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 공공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마을활동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활동가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 **현재 입법 진행 중인 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원문 보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551/detailRP>
- **박정현의원 등 31인, 제2208551호(2025. 2. 27.)발의**

부록 4. 8대 원칙 40점 점수표

원칙	평가 기준	1점	3점	5점
주민주권	주민 결정권	형식적 참여	부분 결정권	완전 결정권
통합성	영역 간 연계	단일 영역	2개 영역 연계	3개 이상 연계
법제화	제도화 가능성	사업만	조례 가능	법률 가능
지속가능성	중장기 운영	1년 한시	4년 민선	10년 이상
현장중심	현장 검증	구상 단계	시범 운영	전국 확산
민관협치	거버넌스	행정 주도	민관 협의	민간 주도
기후정의	탄소중립-취약계층	미반영	부분 반영	완전 반영
디지털주권	데이터 자치-격차해소	미반영	부분 반영	완전 반영
총점	(40점 만점)			**__/40**

부록 5. 6대 배분 원칙 점검표

원칙	점검 내용	충족 여부
기관분립-권한명료화	조례 제정 정책 → 의원 배분	O/X
보충성-기초우선	현장 실행 정책 → 기초단체장 배분	O/X
권한일치-법적근거	광역 권한 정책 → 광역단체장 배분	O/X
광역기반	플랫폼-센터-기금 → 광역 배분	O/X
교육전문-미래세대	학교-마을 정책 → 교육감 배분	O/X
글로벌스탠다드	SDGs-보충성 반영	O/X

부록 6. 4대 실행 환경 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충족 여부
갈등관리	갈등조정 메커니즘 포함 여부	O/△/X
재정구조	자생적 재원 확보 방안	O/△/X
다양성-포용	취약계층-소수자 포용 방안	O/△/X
수행체계	활동가 역량-중간지원조직 적정성	O/△/X

부록 7. 참고 문헌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2015). 마을선언. 제8회 전국대회.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2024). 마을기본법 2차 초안.
- 행정안전부 (2023).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평가 연구.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2). 마을공동체 10년 백서.

부록 8. 문의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이메일: [maeulsn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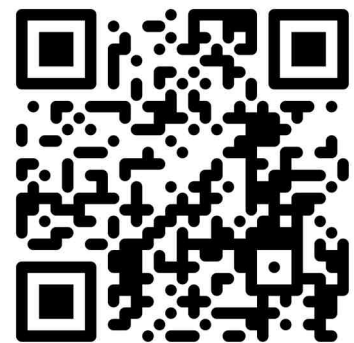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maeul.n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aeulnetwork>]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mnetwork>]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aeulsn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isanbada>]



2026년 2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 제안 · 요약편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Maeulmandulgi National Network
www.maeul.net

© 2026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